

남북한 농업유통부문 협력방안

정길부	정길부	정길부	부연구위원
전창곤	전창곤	전창곤	부연구위원
이수행	이수행	이수행	위촉연구원
김경량	김경량	김경량	강원대학교
이해익	이해익	이해익	강원대학교
오상집	오상집	오상집	강원대학교
전근우	전근우	전근우	강원대학교

연구 담당

정 정 길 부연구위원: 연구 총괄, 4장, 별장 집필
전 창 곤 부연구위원: 2장, 3장 집필
이 수 행 위촉연구원: 자료 정리 및 분석
김 경 량 강원대학교: 5장 집필
이 해 익 강원대학교: 5장 집필
오 상 집 강원대학교: 5장 집필
전 근 우 강원대학교: 5장 집필

머 리 말

세계화와 개방화 시대상황에서 북한이 개방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순조로운 시장경제체제로의 통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유통기반 조성 등 농산물 유통부문에서의 남북한간 협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북 농업협력지원사업은 농기자재 지원 등 농업생산 측면에 치우쳐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이룩한 구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에서 보면 유통부문 개혁이 생산부문 개혁과 병행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고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남북한간 농림축산업의 유통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효율을 제고시킨다면 이는 곧 생산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직접적인 식량지원이나 농업생산자재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의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경제안정, 남북한 통일후의 경제질서의 완전통합, 경제통합의 시기단축 및 통일비용의 최소화 등을 위해 지금부터 남북한이 농업유통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남북경제협력 강화와 통일대비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 농산물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간 농산물 유통분야에서의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남북한 농업유통부문 협력방안은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남북한 농업협력추진방안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제시한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산업의 대북 협력 방안은 정부 또는 민간부문의 관련기업이 농업유통부문에서의 실질적인 남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3. 선행연구 검토	3
4. 연구 방법	4
5. 기대효과	5
제 2 장 북한 농업유통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
1. 북한의 농산물 유통개요	7
2. 유통시설 및 물류현황	15
3.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	23
4.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향	26
제 3 장 농업유통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	32
1. 남한 농산물 유통산업의 발전과정과 유통체계	32
2. 남한 유통체계의 북한 적용 방향과 적정모형 검토	39
3. 농업유통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	43
제 4 장 남북한 농업유통부문 협력방안	48
1. 단기적 협력방안	48
2. 중장기적 협력방안	63
제 5 장 농산물 가공산업의 남북협력방안	71
1. 남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실태	71

2. 남한 농산물 가공기업의 북한투자 의향	89
3. 농산물 가공산업의 남북한 협력방안	95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12
1. 요약	112
2. 결론	121
별장 외국의 농업유통부문 협력사례	124
1. 대만과 중국의 협력사례	124
2. 동서독의 농업통합	139
3. 외국 농업협력 사례의 시사점	150
참고문헌	154
부 록	158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생산단위별 상품이동 및 유통경로	8
표 2-2	북한의 각종 상품가격형태와 내용	13
표 2-3	농산물가격의 형태와 구성내용	14
표 2-4	북한의 교통기반시설 현황	17
표 2-5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단·중기 정책과제	29
표 2-6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31

제 3 장

표 3-1	남한 농산물 유통산업의 발전단계 및 특성	37
표 3-2	남북한 유통부문 협력사업모형의 개념 비교	43
표 3-3	시기별·사업별 유통부문 남북 협력사업 유망분야	46

제 4 장

표 4-1	남북한 농산물 반입추이	49
표 4-2	남한의 주요 국영무역 농산물 품목의 수급현황(1999년)	51
표 4-3	계약재배 유망품목의 소요면적	55
표 4-4	계약재배 작물의 선적 및 반입시기	56
표 4-5	북한의 농림수산물 수출현황	58
표 4-6	연차별 추진계획	59
표 4-7	1999년도 주요 품목 반입실적	60

제 5 장

표 5-1	임산물 수출입 동향	76
표 5-2	품목별 수출입 동향	77

표 5-3 연도별 농수산물 반출입 현황 82

표 5-4 1992년~1998년도 북한산 임산물의 반입현황 83

표 5-5 1999년도 이후의 북한산 임산물 반입 동향 83

표 5-6 1992년~1998년도 북한산 임산물의 반출현황 84

표 5-7 1999년도 이후의 북한산 임산물 반출동향 84

표 5-8 남북 교역중 축산물 반입내역 86

표 5-9 남북 교역중 축산물 반출내역 86

표 5-10 남북한 농산물가공산업의 단계별 협력방안 98

표 5-11 축산관련 산업의 북한투자, 교류협력의 잠재력 106

표 5-12 현재 남북한 축산분야 산업별 특징 108

표 5-13 남북간 축산분야 교류협력 발전단계 110

별 장

별장표 1 대만기업의 중국농업투자(1991~1996) 129

별장표 2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138

별장표 3 동서독 농업부문의 생산성 비교(1988년) 141

별장표 4 동독과 서독의 농산물 생산자가격의 비교(1988년) 142

별장표 5 동독의 소매유통 형태별 거래액과 비율 146

별장표 6 동독지역 진출 서독유통업체별 경영실태(1991) 149

별장표 7 구동서독과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1990) 153

그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북한의 농산물 유통경로 및 분배체계	10
--------	---------------------------	----

제 4 장

그림 4-1	계약재배 추진절차	53
--------	-----------------	----

제 5 장

그림 5-1	농산물가공산업의 전망	80
그림 5-2	농산물가공산업의 대북투자 의향	90
그림 5-3	대북 투자대상업종(제조업)	90
그림 5-4	대북 투자대상업종(비제조업)	91
그림 5-5	제조업투자시 기술투입유형	91
그림 5-6	대북투자시 계약유형	92
그림 5-7	대북투자 예상비용	92
그림 5-8	투자업종에 대한 북한의 현 산업발전 단계	93
그림 5-9	투자업종에 대한 소유권 관계설정 유형	93
그림 5-10	대북투자시 북한정부에 대한 지원요구사항	93
그림 5-11	대북투자시 남한정부에 대한 지원요구사항	94
그림 5-12	대북투자의 적기	94
그림 5-13	대북투자 희망지역	95

별 장

별장그림 1	동독의 식품유통체계	148
--------	------------------	-----

부 록

부록 그림 1	청산계정의 운용체계(안)	158
---------	---------------------	-----

비

면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농업개혁은 생산부문의 개혁과 유통부문의 개혁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의 예를 들면, 1978년 개혁과 개방정책을 표방하면서 각종 농업생산 관련 정책을 실시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거대한 인구의 식량을 포함한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농업생산성 제고의 주요 요인은 생산정책과 유통환경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부문에서는 집단공동생산조직체인 인민공사체제를 폐지하고 개별 생산방식인 농가생산책임제를 도입하였고, 유통부문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국가 일괄수매 대상 농산물의 품목과 비중을 점차 축소시키고 시장기능에 의한 조절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이전에는 양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질적 수요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래도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듯 생산만 하면 판매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낮은 품질의 농산물의 판매

부진이 심각해지면서 농산물의 판로개척이 농민들이 직면한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있다.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중국에서도 이제는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하에서와는 달리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생산도 시장 지향적 생산 전략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제고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농업생산은 반드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에너지 등 공업생산요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업생산이 쇠퇴해지고, 그 결과 비료, 농기계, 비닐 등 농업생산자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농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게다가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공식적인 유통체계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유통의 기능과 역할 증대가 요구되어 왔다.

최근 우리 정부는 남북한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민간부문의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은 직접적인 식량지원이나 농업생산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 위주로 이루어져왔을 뿐 농업유통부문의 협력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정부 농정당국은 「남북농업협력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통분야도 포함하였다¹⁾.

이 연구에 앞서 1999년에 ‘북한의 농산물 유통현황과 농민시장 운영실태’ 연구를 통해 북한의 농업유통에 대한 초보적인 파악이 이루어졌으나, 농업유통부문에 있어 남북한간 구체적인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1) 남북한 농산물유통부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 농업관련기관 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남북한 농산물유통협력추진반을 구성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계는 바야흐로 개방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1 세기는 개방을 통한 세계화와 국제화 추세를 거역하고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란 불가능할지 모른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와 같이 경제가 쇠퇴한 나라는 자력으로 회생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외화를 축적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북한이 개방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순조로운 시장경제체제로의 통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유통기반 조성 등 농산물 유통부문에서의 남북한간 협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남북한간 농림축산업의 유통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효율을 제고시킨다면 이는 곧 생산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직접적인 식량지원이나 농업생산자재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식량과 농자재 지원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경제안정, 남북한 통일후의 경제질서의 완전통합, 경제통합의 시기단축 및 통일비용의 최소화 등을 위해 지금부터 남북한이 농업유통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배경과 필요성에 의거 이 연구는 남북경제협력 강화와 통일대비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 농산물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간 농산물 유통분야에서의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김무환(1999), 정정길 외(1999, 2000), 홍성국(1999) 등은 농민시장을 중심으

로 북한의 농산물 유통 현황과 농민시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 전망을 예측하였고, 전창근(1998), 최수영(1997)은 북한에서 제2경제의 실태를 농업생산과 유통측면에서 파악하고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김경량 외(1996)는 북한의 경제체제, 농산물유통 현황 등에 기초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비한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대응방안 모색을 시도하였고, 홍성국(1996)은 사회주의 상업관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소유형태, 시설 및 운영 등 면에서 북한의 상업·유통제도의 실상을 파악하였다.

김운근 외(1994)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간 농업부문의 경제교류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농업 및 농자재산업 가운데 교역이 가능한 부문을 발굴하고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남북한 경제협력 및 농업협력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업유통분야에서의 남북한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4. 연구 방법

첫째, 기존 국내외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관련자료의 범주에는 북한 농민시장 관련 연구문헌, 과거 동서독간과 중국·대만간의 농업유통부문 협력 관련 문헌자료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국내외 현지 조사출장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내용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는 우리나라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시설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해 조사하였고, 국외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상호협력 경험을 했거나 현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업체 등을 방문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상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경제적 실리 추구를 통해 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있는 대만과 중국간의 협력은 분단국간의 보완적 경제협력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양안간

의 농업유통분야 협력사례와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서독과 동독간 통일전후 경제교류과정에서의 농업유통분야 협력 내용을 파악하였다.

셋째,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대북 협력사업 참여 의사 및 방법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넷째, 북한전문가, 유통전문가 및 농산물 가공산업분야 관련전문가 등 북한농업유통 관련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농업유통개선사업에서 남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추진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연구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위탁과제를 포함한 연구참여자들간의 연구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내용 및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수정·보완하였다.

다섯째, 연구내용의 일부는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위탁연구를 수행한 강원대학교 자연생명대학내 연구팀은 농업, 임업, 축산업 등 농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농산물 가공산업의 실태를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5. 기대효과

이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나마 협력사업으로 수용할 수 있고 또한 통일이 되더라도 언젠가 이행해야 할 내용의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남북한 농업유통부문 협력방안은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남북한 농업협력추진방안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제시한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산업의 대북 협력 방안은 정부 또는 민간부문의 관련기업에 제공하여 농업유통부문에서의 실질적인 남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 2 장

북한 농업유통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북한의 농산물 유통개요

1.1. 상품유통경로

북한에서의 유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이윤추구를 위한 합리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국가 유일체제하에서 집단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보급하는 단순한 공급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유통의 기본개념을 물품의 분배 또는 공급행위로 보고있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유통정책의 목표는 물품공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생산조직간의 상품이동 및 유통경로는 크게 국영기업소 생산물의 유통경로, 협동농장 및 개인부업 생산물의 유통경로, 정권기관 생산물의 유통경로, 암거래 경로 등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된 상품의 유통은 국영기업소간의 유통, 국영기업소와 정권기관간의 유통,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기업소·개인생산자·소비자간의 유통, 국영기업소와 협동농장·국영농장간 유통 등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기업소, 협동농장, 개인생산자, 소

비자 등이 포함되며, 북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품의 유통형태이다.

둘째, 협동단체기업소와 개인부업 생산물의 유통에는 협동단체기업소·개인생산자·소비자 유통경로, 국영기업소·정권기관 유통경로가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유통주체는 국가수매기관, 농민시장, 직매점, 국영유통기업소 등이 있다.

셋째, 정권기관이 생산한 서비스, 즉 국방, 치안 등의 서비스가 소비자, 개인생산자, 협동단체기업소, 국영기업소 등에 공급되는 유통경로가 있다.

넷째, 비공식적인 유통경로로서 암거래가 있다. 북한에서의 암거래 또는 비공식적인 유통경로는 1980년대 초부터 비공식적인 암시장이 확대되면서부터이다.

표 2-1 생산단위별 상품이동 및 유통경로

상품생산	상품이동형태	상품형태	유통주체	거래가격
국영기업소 생산재화 및 서비스	국영기업소 → ① 국영기업소 ② 정권기관 ③ 협동단체기업소, 개인생산자, 소비자 ④ 협동단체기업소, 개인생산자, 소비자 ⑤ 협동농장, 국영농장	재화, 서비스 재화 재화 서비스 서비스	국영, 직접거래 국영유통기업소 국영, 직접거래 직접거래 직접거래	기업소도매가 기업소도매가 국정소매가격 기업·산업도매 생산원가
협동단체기업 소 및 개인부 업생산 재화	협동단체기업소 → ① 협동단체기업소, 개인생산자, 소비자 ② 국영기업소, 정권기관 ③ 협동단체기업소, 개인생산자, 소비자	재화 재화 재화	농민시장, 직매점 국가수매기관 국영유통기업소	소매가격 수매가격 국정소매가격
정권기관생산 서비스	정권기관 → ① 소비자, 개인생산자, 국영기업소, 협동단체기업소	서비스 (국방 등)	직접거래	무상공급
암거래	① 대내암거래 ② 국경암거래 ③ 밀무역	재화	직접거래	암시장가격 암시장가격 밀무역가격

그리고 현재 합법적인 시장으로 지정된 농민시장 역시 암시장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서 계획경제 및 공식적인 물품 공급체계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불법적인 암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즉 국영상점과 협동단체상업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물품배급체계가 마비되면서 1980년대 초부터 대내암거래, 국경암거래, 밀무역 등과 같은 암거래가 확대되어 왔다. 특히 농민시장의 경우 기존의 국가 공식 유통체계가 기능마비로 인해 가장 활성화된 유통기구라고 할 수 있다. 농민시장은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북한의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 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2. 농산물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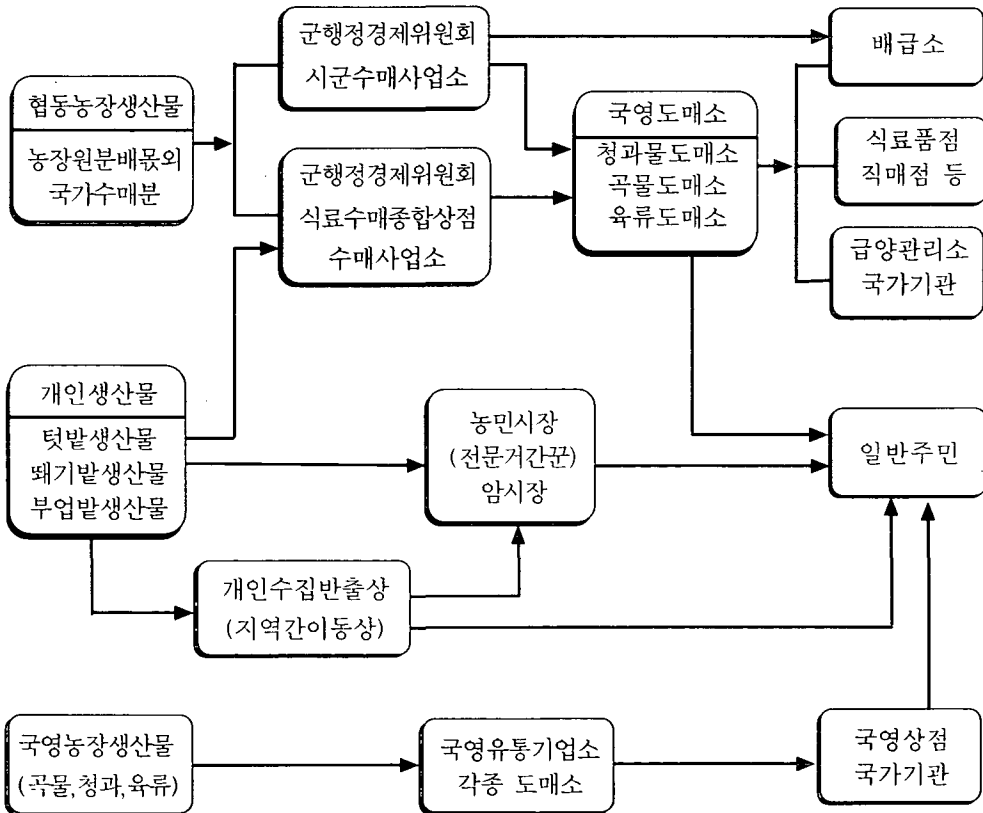
북한의 농산물 유통경로는 국영 및 협동농장 생산물의 국영유통망을 통한 공식적 유통경로와 사적·비공식적 생산물의 농민시장 중심의 비공식 유통경로가 동시에 유통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절대적인 농산물의 생산부족으로 인한 식량과 기타 농산물의 공급부족으로 공식적인 유통체계인 분배체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비공식적 농산물 흐름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비공식적 농산물 유통체계의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농민시장이다.

북한에서 농산물 유통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매제도와 배급제도이다. 수매제도는 북한 농산물유통의 기본형태로서 배급제도와 함께 북한 농산물유통의 핵심이다. 수매제도는 국가가 농산물의 중앙집중적, 계획적 분배를 통제하기 위해서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농산물의 수매에는 의무수매, 자유수매, 자체수매 형태가 있다. 의무수매는 생산자들이 의무적으로 수매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매대상은 협동농장의 생산물이다. 의무수매는 계획수매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매량과 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의무수매는 시·군수매사업소, 직할시 채소·과일도매소, 수산물도매소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유수매는 수매계획이 시달되지 않는 자유로운 수매이며, 대상은 의무수매에 포함되지 않는 농산물과 가공제품 등이다. 수매기

관은 시·군식품상점, 수매기업소, 사회급양망 등이다. 그리고 자체수매는 국가수매기관이 아닌 공장이나 기업소 등에서 수매하여 직접 소비하는 형태의 수매이다.

곡물수매는 군행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양정사업소에서 협동농장 생산물의 수매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양곡수매는 협동농장 생산물 중 농장원에 대한 결산분배물 외의 대부분이 수매대상이 되고 있다. 양곡 외의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수매는 군행정경제위원회 소속의 식료수매종합상점(수매사업소)이 담당하고 있으며, 판매기능도 동시에 수행되고 있다. 채소류와 과일류 및 축산물이다.

그림 2-1 북한의 농산물 유통경로 및 분배체계



축산물의 경우 대표적인 것은 양, 염소, 송아지, 종돈, 오리, 거위 등이 포함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식료수매종합상점을 통해 수매된 소, 돼지 등은 자체기업소에서 도축되어 식료품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소가축의 경우 자기도축하여 농민시장이나 식료수매종합상점에 판매할 수 있으나 가격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농민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곡물의 공식적인 유통경로는 협동농장→양정사업소(수매)→양곡배급소 경로이며, 청과물과 축산물의 경우 협동농장 및 개인생산물→식료종합수매상점(수매)→농산물도매소(야채과실도매소, 축산물도매소)→식료품점 경로가 대표적이다.

농민시장의 거래량이 확대되면서 주요 유통경로는 생산농민(곡물, 청과물, 육류 등)→농민시장 또는 암시장(거간꾼, 중개상)→일반주민 경로와 생산농민→산지수집반출상(쌀장사)→일반주민의 경로가 대표적이다. 텃밭이나 부업밭, 땀기밭 등에서 생산되는 사적생산물은 대부분 농민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수매사업소에 수매(자유수매)되고 있다. 특히 농민시장의 활성화로 지역간 가격차를 목적으로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하여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수집반출상 기능을 수행하는 상인과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거간꾼 등과 같은 전문상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축산물이나 청과물의 경우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의 가격이 공식적인 수매가격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자가 수매를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국영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국영유통기업소나 각종 도매소를 통하여 국영상점이나 배급소, 각급 국가기관으로 분배되고 있다.

1.3. 유통형태 및 가격체계

북한에서 생산물의 소유형태는 전인민적소유(국유), 협동적소유(공유), 개인적소유(사유) 등으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형태도 생산물의 소유형태에 따라 국영상업, 협동단체상업, 농민시장상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북한에서 상품의 유통체계는 기본적으로 국영상점과 협동단체 상업망을 통한 공급체계이며, 부분적으로 농민시장에서의 거래를 허용하여 왔다.

국영상업은 상품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가의 직접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운영하에 있으며, 국영상업의 가격은 유일가격인 국정가격이다. 국영상업에는 상품유통단계에서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이 있고, 사회급양, 수매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도매유통은 완전히 국영상업의 형태이다. 이에 비해 협동단체상업은 국영상업이 미치지 못하는 상품공급을 보완하는 보조적인 상업형태로 되어 왔다. 협동단체상업은 주로 생산협동조합과 수산협동조합의 직매상점이 주임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대부분 국영상업으로 흡수·전환되었으며, 현재 일부 직매상점과 협동농장 단위로 설치된 구관장을 중심으로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

농민시장은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에 의해 완벽한 상품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부업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의 일부를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들간에 직접 매매하는 상업형태이다. 농민시장 가격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며, 거래형태는 대부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거래형태이나 최근 전문상인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시장은 현재 북한의 상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형태이다.

북한의 상업형태를 유통기능과 유통조직에 따라 보면 소비품상업, 사회급양, 수매 등으로 구분된다. 소비품상업은 상업유통과정의 위치에 따라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으로 구분된다. 도매상업은 생산기업소의 상품을 소매상업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소매상업은 주민에게 상품을 직접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소매상업은 도매상기업소로부터 상품을 확보한 소매상기업소가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공급하는 기능이다. 북한의 소매상업은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과 농민시장상업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급양은 음식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소비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부문이다.

북한에서 유통기구라고 할 수 있는 상업단위는 크게 도매소, 소매소, 일반시장이 있다. 도매소의 종류에는 지역별로 중앙에 있는 중앙도매소, 각 도에 있는 도도매소, 2~3개 시·군에 상품공급을 담당하는 지역도매소가 있다. 그리고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특수도매소로서 육류도매소, 수산물도매소 등 상품별 전문도매소가 있다. 소매업소는 주민들에게 상품을 직접 공급·봉사하는

상업의 기본단위이다. 국영소매상업은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적 및 비공식적 생산물과 암거래품목의 소매거래는 농민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의 가격체계는 자본주의의 시장가격과는 달리 가격의 매개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며, 단지 경제계산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영기업소간의 거래에는 사실상 가격이 통용되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도 상품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나, 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국에 의해 계획적으로 책정되고 있다. 다만 협동경리나 사적으로 생산되는 일부 농수산물 및 가내수공업품의 가격은 일원화하지 않고 국가제정가격에서 정해진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농민시장 등에서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일종의 자율가격이다.

표 2-2 북한의 각종 상품가격형태와 내용

가격형태	구성내용	적용대상
생산원가	원료·연료, 전력, 감가상각비, 노임, 기업소관리비	· 국영기업소→협동농장, 국영농장제공 서비스가격에 적용
판매원가	생산원가 + 판매비	· 생산원가와 비슷한개념이나 일반적으로 생산원가를 적용함.
기업소도매가격	판매원가 + 기업소이윤	· 국영기업소→국영기업소 생산수단 · 정권기관→국영기업소 생산수단
산업도매가격	기업소도매가격 + 거래수익금	· 임산물(통나무) 및 국영농목장생산 농업생산물의 국영기업소 이전가격
국정소매가격	산업도매가격 + 상업부가금	· 각종소매상업망→소비자 공급가격 · 국영기업소, 협동단체→소비자 공급
수매가격	생산원가 + 생산자이윤	· 계획수매 : 수매가격(곡물, 축산물등) · 자유수매 : 시장가격고려책정(청과)
요금·운임	생산원가 + 이윤	· 생산수단 : 원가+이윤 · 비생산수단 : 소매가격
농민시장가격	매매쌍방간 합의가격	· 국정소매가격이 기준이 됨 · 제한된 범위내에서 가격변동

북한에서의 상품가격은 기본형태로는 도매가격, 소매가격, 운임 및 요금, 수매가격으로 구분되고 있다. 도매가격은 국영기업소간에 거래되는 생산수단에 대해 적용되는 계획적인 가격이며, 기업소도매가격과 산업도매가격이 있다. 산업도매가격은 주로 국영농목장에서 생산되는 농업생산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소매가격은 각종 소매상업망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으로 국정소매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농민시장가격은 농민시장에서 매매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자본주의 시장가격형성과 비슷하지만 제한된 범위에서 가격의 변동이 있다. 농민시장가격은 자본주의시장에서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자율가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동일하지는 않으며, 유사시장의 수의 매매가격과 유사하다. 그리고 수매가격은 농업생산물, 부업생산물 등을 수매할 때 중앙당국에 의해 계획되고 적용되는 가격이다. 특히 수매가격은 농업생산물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 농민시장가격과 함께 농산물의 대표적인 가격이다.

표 2-3 농산물가격의 형태와 구성내용

가격형태	구성내용	적용대상
산업도매가격	기업소도매가격 + 거래수익금	국영농장 생산물의 국영기업소 이전가격
국정소매가격	산업도매가격 + 상업부가금	각종소매상업망→소비자 공급가격
수매가격	생산원가 + 생산자이윤	계획수매(곡물, 축산물), 자유수매(청과물)
농민시장가격	매매쌍방간 합의가격	비공식 사적 생산물

2. 유통시설 및 물류현황

2.1. 수송부문

북한에서의 농산물유통은 국가가 수매와 배급제도라는 정책수단을 통한 중앙집중적인 물품의 단순한 공급활동이다. 이에 따라 유통기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와 같이 상류 및 물류기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통참여자들이 상류 및 물류기능을 통해 유통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통시설이나 물류시설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민간인들의 시장참여가 일부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유통참여의 기능이 단순한 물물교환이나 소규모의 거래활동에 불과하며, 대규모 거래에 필수적인 대규모 시장시설이나 각종 물류시설의 민간소유나 건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유통에서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유통시설이나 물류시설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나 협동단체 소유의 농산물 유통시설 역시 잘 파악되지 않아 물류시설에 대한 현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수송은 화물과 여객의 이동을 통한 경제부문간의 연결수단, 도시와 농촌간 경제·문화적 연결 수단, 모든 지역을 단일경제의 유기적 총체로 화합시키는 요소, 생산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적 확대재생산의 불가분적 요소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산물이 수송활동을 통해 부가적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유통에서의 수송개념과는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수송부문의 주요 정책은 철도를 주요 수송수단으로 육성하고, 육운이나 해운 및 3화수송(관화, 케이블화, 벨트컨베이어화)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현재 농산물을 포함한 전체화물의 90% 이

상을 철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수송분담률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동안 중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취약하여 수송의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수송체계가 철도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배경은 산지가 많은 북한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다. 즉 산지에서는 육로보다는 철도가 수송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농산물 수송은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시장이나 가공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중앙집중적인 분배를 위하여 특정장소까지 이동시키는 단순한 상품의 이전 활동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시장에서와 같이 가격메커니즘에 의해 농산물의 전국적인 수송 및 물류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이나 농산물의 지역간 수송에 있어서 기동성과 정확성이 낮아 수송기간이 길어지고 보조적인 수송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수송수단간 연계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철도망은 약 60개 정도의 간선 및 지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철도연장은 약 5,500km 정도이다. 이 중 약 70% 이상인 약 4,000km 이상이 전철화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철의 약 98% 정도가 단선구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70% 이상이 일제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열차의 운행속도가 느려 수송효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화차보유대수는 남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철로시설과 화차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수송능력이 낮다. 북한철도의 간선축은 크게 개성-신의주, 평양-나진, 평산-세포청년, 순천-만포, 평양-원산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육로수송의 경우 식량의 지역적 중단거리 운송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수송수단인 화물차의 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후차량으로 수송능력이 낮다. 뿐만 아니라 지형여건상 도로망이 희박하고 경사가 심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도로포장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1995년말 육로연장은 23,330km(한국 74,230km)이며, 자동차대수는 약 27만대로서 전체 농산물을 포함한 화물분담율은 약 7%(전체수송분담율 18%)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로포장율은 약 9%(한국 약 70%)이며, 도로조건상 시속 50km이상이 어려우며, 연료절약, 차량수명 등의 관계로 30km 이내의 단거리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농산물의 장거리 수송은 대부분 철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도로에 의한 수송부문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북한의 험준한 지형적 여건, 주민의 자유이동의 금지에 의한 자동차교통의 확대기피,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의 절약필요성 등에 기인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유통이 국가 통제하에 이루어지는 단순한 분배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생산물의 판매나 생산요소의 구매를 위해 수송수단을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2-4 북한의 교통기반시설 현황

구 분		1975	1986	1990	1996
도로	도로연장(km)	20,000	22,000	23,000	23,369
	포장연장(km)	499	1,418	1,717	2,500
	고속도로(km)	-	-	-	682
철도	철도연장(km)	4,292	4,561	5,045	5,112
	전철화연장(km)	1,223	2,813	3,194	4,030
항만	하역능력(천톤/년)	2,835	3,390	3,490	3,501
공항	여객처리(만명/년)	-	-	-	2,000
보유대수	기관차 (대)	854	1,094	1,182	1,153
	객 차 (대)	700	860	1,050	1,045
	하물차 (대)	16,400	22,300	23,920	21,271
	자동차 (천대)	109	229	265	269
	선 박 (대)	12	50	54	92
	항공기 (대)	-	-	-	21

주: 선박은 만톤 이상이며, 항공기는 민간항공기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의 경제지표(1996)」, 1997.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7.

북한지역의 주요 도로망은 서부간선도로(개성→신의주), 동부간선도로(고성→회령), 북부 동서횡단도로(신의주→무산), 동북부지역도로(나진→남양, 청진→회령, 나진→두만강, 청진→자유무역지대, 은덕→원정리), 고속도로(원산→고성, 평양→원산, 평양→순안, 평양→남포, 평양→개성, 평양→강동, 평양→향산) 등이 있다.

해운의 경우 화물수송 부담율이 전체의 약 3%에 지나지 않아 육로수송과 함께 철도수송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철도수송과 육로수송과의 연계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산물의 대량운송이나 대규모의 수입곡물을 취급하기 위한 항만시설도 매우 제한적이며, 또한 해운운송의 부담율은 전체의 1% 정도로 매우 낮으며, 주요 항만시설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동서해안이 분리되어 있고 항만시설의 미비, 보유선박의 부족 등으로 해운분야의 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으며, 현재 북한에는 8개의 국제무역항(남포, 해주, 송림, 나진, 선봉, 청진, 흥남, 원산)과 5개의 원양수산지(김책, 청진, 신포, 양화, 원산)가 있으나 전체 화물의 약 70% 정도가 남포, 원산, 청진, 흥남의 4개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농산물 특히 곡물의 수송체계를 보면 크게 민간용과 군용으로 구분될 수 있다. 민간용의 경우 국가수매분에 대한 중앙당국의 수집과 분배를 위한 수송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행정위원회 산하 양정총국의 도시 양곡수송대가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수송형태는 협동농장에서 결산분배후의 알곡을 시·군 양정사업소까지 수송, 양정사업소에서 농산물도매소나 배급소까지의 수송, 도매소에서 소매소까지의 수송 등이 있다. 그리고 농민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경우 소량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직접 인력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농가의 경우 특별한 수송 및 운반수단이 없으며, 협동농장의 경우 농장용 트럭, 트랙터, 손수레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용의 경우 인민무력부 소속 후방총국 양식국 산하수송대가 곡물수송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민간용 수송의 경우에도 수송차량의

노후화와 에너지부족에 의한 이용을 저하로 1992년부터 협동조합이나 민간인 양곡수송에 군수송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 저장·비축부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저장과 비축형태는 크게 개별유통참여자와 정부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유통참여자가 저장시설을 보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저장하는 것은 수확기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폭락을 막고 보다 큰 시간적 효용가치를 창조하기 위하여 출하 및 판매물량을 시기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즉 변동하는 시장상황에 저장이라는 형태로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여 총수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경우 생산자의 소득과 소비자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급변동이 심한 주요 품목을 정부나 국가기관이 수매나 매치를 통하여 저장 또는 비축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켜 생산자 소득과 소비자 지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농산물 저장과 비축은 대부분 국가가 계획적으로 농산물을 분배하기 위하여 협동농장, 군행정경제위원회 산하기관, 각종 도매소 등과 같은 기일정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다. 즉 중앙집중적 분배계획에 의거하여 분배량을 시기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단순히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이다. 일부 농민이 협동농장에서 분배받은 농산물이나 자기 소유의 생산물에 대한 저장은 대부분 특별한 개인적인 보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에 보관하여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는 저장시설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농산물 저장과 비축시설은 크게 군용, 양정사업소, 협동농장용의 3가지 형태가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이 단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가 협동농장으로부터 수매한 농산물의 저장·비축하는 창고시설은 군 단위 양정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고가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재용량 및 창고수가 부족하여 창고 비축율이 낮다. 또한 창고의 기능이 단순한 보관기능이기 때문에 저온저

장을 통한 상품성 향상이나, 유통중 상품성 변화를 방지하고 감모량을 줄일 수 있는 특수목적의 저장시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창고는 각 유통주체별로 이용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창고시설이나 기능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경우 대부분 특수시설이 없고 일반창고 형태이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중 감모비중이 매우 높으며, 품질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협동농장의 경우 농장별 수확농산물을 농장원들에게 분배하거나 국가의 의무수매에 응하기 위해 일시적인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역시 시설이 낙후되고, 시설수가 부족하여 야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동농장 공동시설로서 창고가 있으나 협동농장 생산물중 국가수매에 응하고 농장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협동농장 공동농산물을 저장하거나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농장원들의 개인 분배몹은 전부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간이저장하고 있다. 협동농장 저장시설의 경우 역시 시설이 낙후되고 용량이 부족하여 주로 농자재 보관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청과물이나 축산물 등 부패성이 강한 농축산물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나 냉동창고는 없기 때문에 협동농장에서의 농산물의 장기저장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시장시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농산물시장은 생산자의 생산활동 결과를 최종적·객관적으로 가치화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통참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시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시장은 공공재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시설을 건설하고 관리·유지하는데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시장시설의 건설 및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시장운영은 각종 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시장시설을 이용하는 유통참여자는 일정금액의 시장사용료

를 납부하는 것인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와 함께 개인이 합법적으로 농산물 시장을 건설하여 관리·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농민시장을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개인의 시장활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과 같은 각종 형태의 시장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농산물유통에 참여하는 주체들도 남한과 같이 다양하지도 않으며, 그 결과 유통참여자들이 상적 및 물류기능을 통해 유통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통시설이나 물류시설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농산물 유통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유통시설이나 물류시설은 없으며, 국가소유의 유통시설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통제하의 농산물 유통시설 및 관련 기구는 농산물을 수매제도에 의해 국유화하는데, 그리고 분배계획에 의해 공식유통망을 통해 분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주요 유통시설은 수매에 필요한 각종 수매사업소, 분배에 필요한 농산물도매소, 농산물을 소매공급하는 각종 소매소 등에 국한되며, 농산물이 대규모로 거래되는 도매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도매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는 경기침체와 농업생산 격감 등으로 식량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 부족이 심화되면서 공식적인 분배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농민시장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민시장은 가격형성이나 시장운영시스템이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시장시스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민시장시설 역시 현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농민시장은 전국에 약 300여 개소가 유개 또는 노천시장이 형태로 개설되어 있다. 농민시장의 규모는 시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회령의 경우 약 3,000평 정도의 규모이며, 대도시의 경우 훨씬 큰 시장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시장의 시설은 대부분의 경우 고정 점포시설이 있는 건물이 없으며, 대체로 간이천막형식이나, 나무로 만든 좌판상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바닥의 경우 대체로 노천상태로 비가 내리거나 기후가 불순할 경우 노천에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상품진열은 나무진

열대에 일부 물품을 전시해 놓는 경우가 있으나, 진열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난의 우려 때문에 좌판 아래나 포장용기내에 넣어둔 상태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군, 읍지역의 경우 유개시설이 있는 판매대는 거의 없고 대체로 지붕이 없는 무개시설이며, 판매시설이 협소하여 노천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당 부지면적은 시자의 입지나 도시규모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읍·군지역의 경우 대체로 약 400m² 이내로 협소한 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로 되어 있는 나진시장의 경우 시설은 콘크리트 연동건물로 매대시설을 갖춘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진시장의 경우 시장면적은 약 2,000m²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이며, 시설면적은 약 1,000m² 정도로 군·읍소재 농민시장보다 매우 크다. 나진시장의 경우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상품이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른 시장보다 많으며, 다른 시장의 가격형성 기준이 되기도 한다.

농민시장의 거래는 시장내에 대체로 공산품과 농수산물로 거래장소가 구분되어 있으며, 농수산물 중에서도 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음식류 등으로 부류별로 거래장소가 구획되어 있다. 농민시장은 1개군에 대체로 1개소가 있으며, 읍이상의 소재지에는 대부분 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상품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경지역 도시(무산, 회령, 청진 등)나 규모가 큰 대도시의 경우 2개소 이상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평양의 경우 4개 정도의 농민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도시일수록 시장의 규모가 크고 시장시설이 좋을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수가 많다. 농민시장의 거래규모가 증가하면서 참여상인수와 시장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농민시장수는 늘어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시장은 매우 혼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민시장은 대부분의 도시 변두리 지역이나 강둑 등을 따라 개장되고 있으며, 특별한 시장의 경계선이 없이 일종의 난장판 형태로 개설되어 있다.

3.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은 먼저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해 가지는 비효율성이나 자원 및 생산물 분배의 왜곡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농산물 유통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유통은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비생산활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유통부문 자체가 상대적으로 경시당하고 있다. 즉 유통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균형유지, 이윤추구 등과 같은 자본주의적 유통기능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북한의 공식적인 유통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 및 유통자원의 분배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러한 기능은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되지만 북한의 경우 계획적인 분배체제이기 때문에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은 생산 및 유통자원 분배에서 나타나고 있다.

생산자원 배분의 왜곡은 근본적으로 생산증대를 위한 개인적인 유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인 생산활동의 생산성이 저하되어 생산량의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집단적인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계획적으로 배정된 생산자원이 일부 사적인 생산으로 유출되어 생산성 저하와 저생산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즉 생산된 농산물의 사적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영활동의 결과가 그대로 개인에게 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의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 결과 농산물 생산과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서 일부 농산물의 사적 처분이 허용된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암거래가 성행하게 되었다. 또한 농민시장 가격이 국정가격보다 너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구조의 이원화가 이루어져 유통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유통이 단순한 중앙계획적인 공급행위이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시설 및 인적자원을 포함한 유통자원의 분배의 심한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유통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고 수급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통시설의 배치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이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통이 자율적인 가격기구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생산에 반영시키지 못함에 따라 농산물의 수요측면이 자율적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물선호 성향이 생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즉 농산물의 생산이 소비자의 선호를 무시하고 배급제에 의해 분배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기호에 의한 농산물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의 절대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급속한 공식 유통체계의 붕괴와 비공식 생산량 및 유통량의 확대이다. 북한에서 농산물의 비공식 유통이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배급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한 이후부터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이후 농업생산량의 감소와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농민시장을 중심으로한 농산물 거래는 현재 가장 활발한 거래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실상 농산물유통의 중심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공식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공급량의 부족과 유통체계의 붕괴는 농산물의 배급체제하에서 계층간·지역간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식적인 유통체계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도시와 농촌지역, 평야지역과 산간지역 등 지역여건에 따라 농산물 수급불균형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산지수집반출상, 중개상 등 각종 상인의 수가 증가하여 지역간 수급불균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공식적 농산물유통에의 참여여부 즉 농민시장 참여여부에 따라 개인간 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농민시장과 암시장 유통의 확산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이원화와 유통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사적 경작지에서의 농산물 생산량 증가와 암거래를 통한 수입의 증대는 농민이나 농산물 거래에 참여하는 상인들로 하여금 수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자본주의적 가격결정 메카니즘에 익숙해지게 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비공식 유통규모가 확산됨에 따라 나타나는 공식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상승 현상은 국정가격과 계획부문에서의 임금체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공식 가격체계를 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획적인 중앙통제하의 농산물 유통체계가 가지는 또다른 문제점으로 유통시설의 부족과 불합리한 배치, 이용의 제한성 및 시설의 낙후성 등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의 유통시설은 중앙계획에 의해 단순히 농산물을 국가소유화하고 계획에 의해 분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같이 유통참여자들이 그들의 상업이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개인이 투자하여 운영하는 유통시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농민시장 역시 특정 지역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수가 1개군에 평균 1개소 정도가 배치되어 일반농민 및 주민들의 시장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함께 농민시장은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시장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낙후되어 시장이용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농산물 시장참여에 대한 일반주민 및 농민들의 요구는 암거래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본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으로는 물류시설의 부족과 미비로 낮은 물류효율성을 들 수 있다. 수송의 경우 철도중심의 수송체계로서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90%를 넘고 있으며, 자동차·선박·3화수송 등은 보조적 수단이 되어, 수송의 정확성과 기동성이 낮은 상태이다. 특히 육로 수송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수송능력이 낮은 상태이다. 그리고 저장·비축시설은 군용, 민간용, 양정사업소용, 협동농장용 등이 있으나 양호한 저장시설의 대부분이 군사용이며, 민

간용 및 협동농장의 경우 대부분 시설이 낙후되거나 야적상태이기 때문에 감도와 변질의 우려가 높은 상태이다.

4.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향

4.1. 단·중기적 개선방향

궁극적으로 통일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전제로 한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은 식별로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지역의 농산물 유통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유통부문 협력시 단·중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단·중기적 유통개선 방향의 목표는 크게 농민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거래질서의 확립,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의 설치 및 보수, 유통참여자의 경제교육 등이 될 수 있다.

첫째, 농민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우선적인 사업은 소비지시장과 산지시장의 활성화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여건을 단기간 내 조성하는 것이다. 폭증하고 있는 농산물의 암거래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상설시장을 개설하여 농산물 시장활동을 공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민시장의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종합시장형태의 상설시장을 개설함으로써 현재 농민시장의 이용과 접근에 많은 제약성이 있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농민시장은 텃밭이나 부업경리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축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며, 가격도 수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자본주의 시장체제와 가장 근접한 시장으로서 농민시장의 활성화는 시장규모의 확대, 시설개선 등의 시장여건만 조성되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농민시장 활성화 방안은 도시지역의 소비지와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농민시장의 개편방향은 도시지역의 경우 소비자와 상인 그리고 생산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종합소매시장 형태의 상설시장으로 개편한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경우 군 단위의 지역중심지에는 상설시장화 하고 변두리 지역이 경우 정기시장화 하는 방안이 있다. 시장의 규모는 기존의 농민시장 거래규모와 시장생활권의 인구규모가 고려되어야 하며, 시장수는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개의 종합소매시장, 군 지역은 중심지의 상설시장 1개소와 농촌지역의 2~3개의 정기시장을 개설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농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 부지면적을 확대하고 거래시설을 유개 점포시설로 바꾸어 상인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장규모의 확대와 시설개선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기존의 농민시장을 보수·개선하여 상설 또는 정기시장화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규모확대와 시설개선은 농산물유통의 제도적인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이에 대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정부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소매시장의 활성화와 동시에 이들 소매시장에 대한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주요 거점 도시와 농촌지역에 도매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소비지 및 산지공판장의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산지에서 도매기능을 담당할 공판장이 소비지의 상설시장화와 동시에 개설되어야 하며, 산지공판장 설립의 주요 목적은 대도시 상설시장에 대한 농산물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한 것이다. 이들 농산물 공판장은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시·군 단위의 양정수매사업소, 식료종합수매상점 등의 부지와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 규모 및 시장 수 확대 건설과 함께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시장활동의 공개적인 조성을 위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한 상

업관행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형태의 시장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거래지침, 시장시설의 사용, 조세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사적인 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회만 있으면 장사를 하려고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통일 후 장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유통에 종사할 수 있는 시장 지역을 지정하고 상거래질서를 위해 상인을 공개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농산물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민시장 등 기존의 시장뿐만 아니라 각종 도매소와 소매소 등의 기존 유통망과 담당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기존의 국영유통망인 농산물 관련 도매 및 소매기관을 남한의 유통공사나 농협 등이 위탁 경영하여 농산물의 종합소매공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산지와 소비지 시장의 확대건설과 함께 중요한 것은 산지 유통시설 특히 각종 물류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물류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물류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나 산지와 소비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다. 우선적인 물류시설에는 단기적으로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저장시설을 개보수하고, 새로운 창고시설을 신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산지에서의 수급조절과 소비지 시장에 대한 원활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다섯째, 단기적인 농산물유통 활성화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파악을 위한 농산물유통에 대한 총조사 사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요원은 별도로 유통조사 교육을 받은 현지인과 남한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산물유통 총조사의 내용은 농축산물의 부류별·품목별 총유통량, 지역별 이동실태, 유통경로 및 비용, 산지 및 소비지 거래실태, 유통시설, 상인 및 유통종사인력, 물류시설 등이 될 것이다.

표 2-5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단·중기 정책과제

정책과제	주요 내용
○ 시장의 조기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시장의 제도화와 시장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지시장 상설화 - 농민시장 신규건설 및 개보수 - 산지공판장 건설
○ 거래질서의 확립과 시장활동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운영,거래지침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등록 - 기존유통망의 활성화
○ 산지유통시설 개보수 및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저장 및 물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송수단 확충
○ 시장경제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경제원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의식 함양교육 - 농산물 상품화 교육 강화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의 활성화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의식 및 시장경제에 대한 경제교육과 홍보가 단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의 원리, 거래의 공정성, 거래활동과 정상이윤의 획득, 수입과 조세 등 유통활동과 관련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될 것이다. 특히 농산물의 상품화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될 것이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 상품화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각종 상품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4.2. 중장기 유통체계 개선방향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의 중장기적 정책과제로는 크게 유통총조사 결과물을 기초로 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수립, 시범적 유통주체의 육성과 시범시설 확충, 유통조성기능 활성화 등이 있다.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은 첫째, 농산물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종합계획 수립은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유통체계의 확립과 조기에 남한 유통체계와의 완전한 통합과 일치룰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합계획은 농산물 거래현황, 상류 및 물류 등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농산물유통 총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장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단계별 시장설립 및 관련 물류시설의 구축방향과 관리·운영방안, 산지시장·도매시장·축산물처리장·물류센터 등 유통하부시설 건설 방향, 효율적인 물류발전 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각종 형태의 유통시설 확충이 중요하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중소도시에 생산자단체와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공판장, 물류센터 등의 건설을 유도한다. 즉 도매시장은 평양과 직할시 등에 3개정도의 대규모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제3섹타 형식이나 민영도매시장의 건설을 적극 유도한다. 북한지역의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소매시장이 활성화되어 도매거래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건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공판장과 물류센터는 생산자단체나 민간이 건설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시장경제체제에의 조기적응과 산지 유통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산지에 시범적 유통주체와 유통시설을 육성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범적 유통주체 육성과 모범적 유통시설 모델 개발은 협동농장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범적 유통주체와 유통시설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전국적인 조기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장기적인 농산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통조성기능의 활성화와 물류시스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농산물의 등급화와 규격화를 포함한 표준화는 남한의 표준과 일치시켜야 하며, 물류표준화 역시 일치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에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나 물류표준화와 같은 개념이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통체계가 통합될 경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

다. 농산물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산물유통의 표준화 추진과 동시에 유통정보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 북한에는 시장경제에 기초한 거래행위가 없기 때문에 유통정보화의 개념 역시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효율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물류표준화, 유통정보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홍보활동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통교육은 장기적으로 남북한 유통체계가 통합되는 통일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유통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장기적인 목표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단기나 중기적인 유통참여자 교육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통개선을 위한 전문 지도자를 양성해야 될 것이다.

표 2-6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주요 과제	정책방향
○ 유통산업발전 장기종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유통 총조사결과에 기초 • 단계별 시장 및 물류시설 건설방향
○ 시범적 유통주체 육성 및 유통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중심 시범 유통주체 육성 • 유통시설의 모델개발과 확충
○ 유통조성기능 활성화와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표준규격화 · 물류표준화 추진 • 유통정보화 추진
○ 시장경제체제 적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참여자 시장경제교육 강화 • 유통교육기관 설립과 유통전문가 양성

제 3 장

농업유통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

1. 남한 농산물 유통산업의 발전과정과 유통체계

한국에서의 농산물 유통산업 발전과정은 크게 맹아기, 유아기, 성장기, 확장기 등으로 시대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맹아기의 경우 1923년 중앙도매시장법이 공포된 이후 1945년까지의 일제하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말한다. 이 시기 도매시장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비록 일제하이지만 농산물유통의 체계화를 위한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치하 농정 목표는 국내 우수농산물을 일본으로 보다 많이 반출하는데 있었으며, 국내 농산물유통의 질서확립이나 체계화와는 관계가 없었다. 특히 국내 농산물의 저가격을 유지하여 보다 많은 우수농산물을 반출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다. 일제하의 주요 농산물 유통시설에는 산지의 경우 5일장을 대표되는 정기시장이 있었으며, 소비지에는 일본인이 건설한 민간법정도매시장이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주요 대도시에는 위탁상을 중심으로 하는 유사도매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요 유통참여자는 산지에서 상품을 수집하여 대도시 유사도매시장의 위탁상에 반출하거나,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회에 반출하는 정도의 산지 수집반출상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유아기의 경우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 상인들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가 재편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후반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문제가 농정 최대의 현안과제로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유통의 역할은 보다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산물을 도시화와 산업화를 위해 공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농산물유통에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증산을 장려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통의 역할은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전체유통체계의 효율화와는 큰 관련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유아기의 농산물유통 관련 주요 법령은 1951년 개정된 중앙도매시장법과 도소매진흥법이다.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그 대상은 일반 민간법정도매시장이었으며, 도소매진흥법의 경우 재래시장과 정기시장이었다. 이시기의 유통시설은 소비지의 경우 민간법정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이 대표적이었으며, 산지의 경우 정기시장과 재래시장이 있었다. 이 시기 농산물유통에서의 주요 유통참여자는 산지의 경우 산지수집상, 반출상, 중개상 등이 있었으며, 소비지의 경우 위탁도매상,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도매상)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소매상의 경우 재래시장 소매상, 영세전문점 및 이동상이 있었다. 그 외 이 시기부터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농산물유통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성장기의 경우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가 본궤도에 오르고, 농산물유통의 중요성이 생산부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생산자나 유통참여자, 소비자 모두에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농산물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급상의 불균형과 가격불안정이 본격화되면서 유통의 역할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즉 기존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새로운 유통기구 특히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통기구를 국가주도로 건설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였다. 대표적인 국가투자의 농산물 유통기구 건설은 공영도매시장을 들 수 있다. 공영도매시장 정책은 1970년대까지 나타난 농산물유통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투자하여 전국 주요 대도시에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함으로써 효율적

인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었다. 공영도매시장 건설정책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에 32개소의 도매시장 건설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21개소가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 시기 농산물유통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농산물 유통정책이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농정의 관심사가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되고 각종 유통정책이 추진된 것은 1976년 농산물유통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농안법은 농산물가격, 산지유통, 도매유통 및 도매시장을 포괄하는 법률이다. 농안법의 제정은 한국 농산물 유통정책상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안법의 발효로 오늘날 농산물 유통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가 본격적인 농정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성장기의 주요 유통시설은 산지단계의 경우 생산자단체의 산지공판장, 정기시장, 재래시장 등이 있었으며, 도매단계의 경우 정부가 투자한 공영도매시장, 소비지공판장, 유사도매시장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소매단계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 소매점포인 슈퍼마켓, 재래시장소매상, 영세전문점 등에 대표적이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첫째, 공영도매시장 건설정책에 의해 도매단계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됨으로써 유통단계별 불균형적인 발전이 초래되어 유통의 병목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농산물 유통 개선의 정책대상이 도매시장 건설에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산지유통과 소매단계의 유통발전이 저조하였던 것이다. 둘째, 새로운 유통기구인 대규모 공영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 슈퍼마켓과 영세소매상, 산지공판장, 정기시장 등과 같이 기존의 유통기구와 새로운 유통기구가 병존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셋째, 정부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가 본격적으로 농산물 유통개선에 개입하였다. 그 결과 산지의 경우 산지공판장, 소비지의 경우 소비지공판장 등과 같은 생산자단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많은 유통기구가 건설·운영됨으로써 전체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촉진시키게 되었다. 농산물유통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어 농산물유통에 있어서도 본격적으로 개방화·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의 확장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유통의 세계화와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 정부, 민간 유통업자가 역할분담을 하면서 급속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UR협상 타결에 의한 상품시장의 개방화뿐만 아니라 1996년 유통시장의 완전개방화로 한국 농산물유통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절대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 가장 큰 특징은 유통시장의 완전개방화로 선진외국의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전국적인 다점포화와 체인화를 주도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국내유통기구와 유통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입과 확산은 농산물유통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부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통부문의 경우 영세 소매업체가 급속히 탈락하고, 다양한 업태의 대규모화 중심으로 소매유통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도매단계의 경우 물류센터나 도매물류회사 등의 새로운 유통기구가 출현하여 유통경로나 거래방법을 다원화시키고 있다. 산지의 경우 이러한 소비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산지유통시설을 중심으로 산지유통기능을 단순한 출하기능에서 상적기능과 물류기능을 종합화하고, 브랜드를 창출하는 등 산지의 시장교섭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유통효율성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이다. 주요한 유통기구로는 산지의 경우 산지 종합유통센터, 산지공판장, 산지도매시장 등이 있으며, 도매단계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물류센터, 유사도매시장 등이 있으나, 새로운 유통기구의 확산과 공영도매시장의 지속적인 건설로 유사도매시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소매단계의 경우 다양한 업태의 대규모 소매점, 수퍼마켓, 재래시장, 전문점 등이 있으나, 재래시장이나 영세전문점 및 기타 영세소매상의 급속한 탈락과 업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유통정책 방향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 확충과 함께 유통효율화를 위한 물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물류효율화를 위해 표준규격화, 물류표준화 등이 최대의 관심사로 등장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산업의 발전단계와 특성을 요약하면 일제시대의 민간위주의 맹아기를 거쳐, 1970년대 초반의 유아기까지는 농정의 최대목표가 생산증대였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기능이 도외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통산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농업정책에서 유통정책의 비중도 크지 않았으며,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유통기능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까지 농업부문에서의 급속한 상업화의 진전과 유통량의 급증으로 유통기능과 유통효율성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수급 및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지출 측면에서 유통정책이 농정의 관심사로 급부상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부터 정부의 공영도매시장 건설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산업의 성장기를 맞게 되었다. 이 시기 유통정책의 목표는 수급 및 가격안정 등 본연의 유통기능 정착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이후 유통시장 및 상품시장의 개방화 이후 유통정책의 최대목표는 국제경쟁력 제고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산지 및 소비지에 본격적으로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정부의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민간유통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한편 남한 농산물 유통체계의 특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대별로 정부정책 주도의 직접투자나 개입 등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개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한 유통활동이라는 것이다. 전체 유통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주요한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설 등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지원을 하지만, 유통참여자 개개인의 시장행위는 개인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유통활동의 결과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표 3-1 남한 농산물 유통산업의 발전단계 및 특성

구 분		맹아기	유아기	성장기	확장기
시기구분		일제시대 (1923~1945)	1945~1973	1973~1993	1994~
관련법령		중앙도매시장법 (1923~1951)	중앙도매시장법 (1951~73) 도소매업진흥법	도매시장법(1973~76) 농안법(1976~) 도소매업진흥법	농안법(1976~)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정책 목표		생산증대를 위한 지원역할	생산증대를 위한 지원역할	수급안정 가격안정	수급 및 가격안정 제값 받기 국제경쟁력제고 효율성제고
주 요 시 설	산지	정기시장	정기시장 채래시장	정기시장 채래시장 산지공판장	산지공판장 산지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
	도매	민간법정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민간법정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민간법정도매시장 소비지공판장 유사도매시장	공영도매시장 법정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물류센터
	소매	정기시장 상설채래시장 영세농산물전문점	정기시장 상설채래시장 영세전문점,수퍼마켓	채래시장 전문점 영세수퍼마켓	대형유통업체 물류센터 채래시장
주요유통 참여자		산지수집상 산지반출상 산지중개상 소비지위탁상 채래시장 소매상 이동상	산지수집상 반출상, 중개상 소비지위탁상 농협 채래시장소매상 이동상	산지수집반출상 농협 위탁상 중도매인 채래시장 소매상 수퍼마켓	산지수집상 위탁상 도매상(중도매인) 밴더, 물류업자 채래시장소매상 이동상
유통 산업 주도자	산지	민간	민간, 농협	농협, 민간	농협, 민간
	도매	민간	민간	민간	정부, 민간
	소매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농협

현재 남한의 농산물 유통체계와 유통정책의 방향을 보면 먼저 유통시설 측면에서는 도매유통시설 중심에서 점차 산지 및 소매유통시설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유통정책도 소매단계와 산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정책은 유통질서 확립과 유통하부구조의 확충사업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유통하부구조 구축의 경우 상적기능 보다는 물류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물류표준화, 표준규격화 등 물류효율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농산물 시장구조는 유통참여자와 유통기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완전경쟁구조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유통단계별 실태를 보면 먼저 산지유통체계의 경우 생산자단체의 산지유통기능이 강화되고, 산지유통기능이 상적 및 물류기능을 포함하여 복합화되고 있다. 산지유통시설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부류별로 전문화되고 있으며, 유통기능은 종합화되고 있다. 주요 산지유통시설에는 산지도매시장, 산지공판장, 미곡종합처리장, 청과물 산지유통센터, 축산물종합처리장 등이 있다.

도매유통체계의 경우 도매시장 중심의 도매유통체계가 농산물 물류센터 등으로 다원화됨으로써 경쟁적인 도매유통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도매유통에서 민간의 참여가 증가하고,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도매유통시설의 대부분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건설하고 있으며, 주요 도매유통시설에는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물류센터, 유통업체 물류센터, 유사도매시장 등이 있다.

그리고 소매유통체계의 경우 농산물 전유통단계에서 유통체계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시설 및 조직의 대규모화와 체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매유통체계의 변화는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있으나 정부의 개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주요 소매유통시설은 대형유통업체(백화점, 할인점, 대형수퍼마켓 체인본부 등), 재래시장 등이 있다.

2. 남한 유통체계의 북한 적용 방향과 적정모형 검토

2.1. 남한 유통체계의 적용방향

남한과 북한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산업 발전단계의 구분에서 공동으로 적용된 시기는 유통산업의 맹아기인 일제하의 농산물 유통체계였다. 남한에서 유통산업의 유아기라고 할 수 있는 해방이후부터는 남한과 북한은 정치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체계의 발전단계나 특성 역시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냈으며, 그러한 유통정책의 결과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남과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 유통체계의 개선 또는 남북 유통분야 협력사업의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경제체제가 서로 다른 상태하에서 유통부문의 협력목표가 무엇이나에 따라 협력방향이나 수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서로 다른 상태하에서 농산물 유통부문의 남북협력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체제하의 농산물유통의 순기능을 무리 없게 도입시킴으로써 농산물의 증산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시에 농산물의 생산증대는 생산자와 유통참여자들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질서 있게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증대와 함께 농산물유통의 하부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지역간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 농산물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와 질서에 대한 순기능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유통참여자의 책임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품화 기술이나 능력을 제고시켜 보다 많은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시장가지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남북한 농산물 유통부문 협력을 통하여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적응되어 있고, 유통하부구조 측면에서 유리한 남한의 유통정책이나 모형을 북한에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남한의 농산물 단계별 유통체제와 유통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경제체제가 변화되지 않는 한 무리이며, 현 상태에서 협력사업으로 적용하여도 사업효과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다.

남한에서의 농산물 유통체제의 발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몇 십년간 또는 몇 백년간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부터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남한의 농산물 유통정책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유통정책 자체적으로 모순점이 노출되었고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정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비록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도 동일한 유통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체제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과 실패의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한 유통체제의 특성은 단기간 도매유통단계에 정부의 유통정책과 지원이 집중적으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북한 적용의 왜곡성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남한의 농산물 유통정책과 유통체제를 수정 없이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유통부문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한의 경우 본래적인 유통의 순기능이 중요시되고 유통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남한의 농산물 유통산업 발전단계상에서의 유통정책들을 단계별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결국 남한 유통산업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수많은 유통정책 중 정책효과가 우수하고, 정책추진상 장애요인이 많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책 중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 하에서 가장 수용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여 협력사업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모델은 최소의 비용과 시행착오로 협력사업을 통해 최단기간

에 북한 유통체계를 남한 동등한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남북한 유통협력사업을 위한 남한 유통체계의 적용은 크게 유통정책, 유통제도, 유통시설 분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유통제도와 정책을 북한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유통부문 협력사업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와 정책에 대한 협력사업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 하에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산물 유통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현 북한 경제체제와 농산물 유통체계는 인정하고 유통시설 측면이나 유통하부구조 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현재의 낙후된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 하에서 가장 빠르게 협력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협력사업 중 가장 용이한 부문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2. 남북협력사업의 적정 모형

남북한 농산물 유통분야 협력사업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은 크게 추격형(catch-up)모형과 도약형(leapfrog)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통분야 협력사업에서 추격형모형은 남한이나 선진국의 유통체계변화 또는 발전단계를 수정 없이 단계적으로 적용시키는 모형이다. 이것은 남한의 농산물 유통산업 발전단계에서 추진한 유통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북한에도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발전단계별 유통시설이나 유통하부구조도 순서대로 건설하거나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모형은 일국 중심의 개방투자사업 모델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추격형 모형을 적용할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첫째, 추격형 모형의 경우 유통산업 발전단계별로 주요한 유통정책이나 유통제도도 그대로 도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경제체제가 동일하여야 된다. 즉 동일한 경제체제하에서 적용대상국의 현 유통체계의 특성과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유통정책을 적용하고 유통하부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협력사업에서 적용모형이 되는 국가의 유통산업 발전단계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발전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다. 협력사업의 적용모델이 되는 국가의 유통산업 발전단계가 단계적이면서 지속적인 발전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셋째, 적용 모델이 되는 국가의 유통산업 발전단계에서 추진한 유통정책이나 유통하부구조 구축사업 등에서 일관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만약 정치적인 요인 등을 유통산업 발전전략상 일관성이 없고 변화가 심한 경우 협력 상대국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한편 도약형 모형은 유통산업 발전전략에서 몇 가지의 발전을 위한 주도부문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전체 유통산업에서의 시너지 유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델이 되는 국가의 유통산업 발전단계에서 가장 정책효과가 우수하였거나, 유통하부구조의 구축효과가 큰 사업을 선택하여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체 유통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모델이 되는 국가의 유통산업 발전형태가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성장하여 선진 유통체계를 구축하였거나, 현재 높은 성장률로 발전하고 있는 경우에 적합한 모형이다. 그리고 이 모형은 모형 적용 대상국과 모델이 되는 국가간에 발전격차가 매우 커 추격형 모형의 적용으로는 일정 기간 내 협력사업의 효과를 단축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경우 적용하면 합리적이다.

현재의 농산물 유통부문에서 남북한간의 차이는 경제체제의 차이뿐만 아니라 발전수준에서 큰 격차가 나고 있다. 일한 남북한의 격차를 고려하면 유통부문 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형은 추격형보다는 도약형모형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추격형모형은 단시간에 다양한 유통분야에서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협력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정보·지식 혁명시대에 산업사회의 단계적 발전모델이나 정책을 답습할 경우 협력사업의 경쟁력 취약 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리고 도약형 모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국적 의존형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유통하부구조 구축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은 외국자본·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3-2 남북한 유통부문 협력사업모형의 개념 비교

구분	추격형모형	도약형모형
내용	• 선진 유통발전모형을 단계별로 추격	• 유통산업 주도부문을 부문별로 협력·육성
시대배경	• 산업화시대 • 유통산업 투자자본·기술 및 개발계획이 준비된 상태에서 효과적	• 산업화시대+정보화지식기반시대 • 유통산업 투자자본·기술 및 개발계획이 미비상태에서 효과적
파급효과	• 유통산업 내 부문별 시너지효과 미약 • 협력사업 기간 장기간 요구 • 협력사업 성과 단계적으로 나타남	• 동일산업 내 부문별 시너지효과 극대화 • 협력사업 효과 동시다발형 극대화 • 협력사업기간의 단축가능
비용기간	• 물적자본 중심 협력개발비용 과다 • 단계별 추진으로 협력기간 장기간 소요	• 협력·개발시기 단축 • 단계적 추진에 비해 협력비용 절약
가능성	• 현 북한 유통체계상 성공가능성 낮음	• 현재 남북한이 가지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원을 고려하면 성공가능성 높음

현재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남북한간에는 극심한 발전수준의 격차와 제도 차이에 의해 호혜적인 유통분야 협력사업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이 거의 일방적으로 협력 또는 선도하는 형태의 협력사업 모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특히 남한의 유통산업 발전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형태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단기간에 압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농업유통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

남북간 농산물 유통협력 모형에서 도약형 모형을 적용한다면 우선적으로 적용가능한 남한과 북한간 농산물 유통부문 협력사업의 주요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농산물 유통정책과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효과가 가장 탁월하여 북한에 적용하여도 사업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

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바람직한 협력사업 대상분야로는 첫째, 산지 및 소비지에서 충분한 거래공간을 확보하여 생산의욕과 유통참여의욕을 높이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다. 현재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유통경로와 함께 농산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농민시장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농민시장은 시장부지가 협소하고, 시장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매우 낙후되어 충분한 유통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활성화된 농산물 유통기구인 농민시장에 대한 시설확충 및 신규건설사업 등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민시장에 대한 협력사업은 크게 농민시장수의 확대와 신규건설사업, 기존 농민시장의 시설확충과 개선사업 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소비지의 원활한 농산물 공급체계 조성을 위한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을 들 수 있다. 소비지의 대표적인 유통시설은 역시 농민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 지금의 농민시장 규모와 수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시설 또한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농산물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면 농민시장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건설과 운영이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도매시장은 반드시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농민시장이 활성화되어 농산물의 대규모 도매거래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건설의 필요성이 있는 유통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수송, 저장, 가공 등 유통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하부구조 개선사업 등이 적합할 것을 판단된다. 이 사업은 산지와 소비지의 각종 물류시설 건설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농산물 물류시설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이 낙후되어 농산물의 유통 중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산지 협동농장의 각종 저장시설이나 단순 가공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신규건설사업이 필요하며, 소비지의 경우 역시 창고시설이나 가공시설의 신규건설과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고의 경우 사용요도나 입지에 따라서 일반창고에서 필요하면 저온저장고까지 포함될 수 있

다. 그리고 가공시설의 경우 산지의 정미소와 도축장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산지유통센터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통조성기능에 대한 협력사업이 매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업은 시설물의 건설이나 개보수가 아니라 시장경제에 자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북한 농산물의 국내수요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상품화 기술에 대한 교육 등도 포함된다. 현재 북한은 시장경제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유통전략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산물의 생산이 크게 증가되면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개척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농산물 생산 및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생산된 농산물이 대부분 시장에 출하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개인적인 시장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된다면 농산물의 판매전략이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품화기술 등의 습득으로 현재의 중국과의 국경무역 등에서도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농산물 유통부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내용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모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협력사업의 성격상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사업도 있으며,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과 상대적으로 덜 소요되는 사업이 있다. 이와 함께 협력사업의 착수가 용이한 사업과 사업착수에 많은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도 있다. 따라서 사업착수전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협력사업의 사업기간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초기 정부차원의 유통부문 협력사업은 현재의 남북한 사정으로 미루어볼 때 일방적인 지원성 협력사업이 되기 쉬울 것으로 전망되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유통부문의 협력사업은 선별적 프로젝트 중심의 경제적 효율

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지원·협력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일방적인 남한정부의 지원성 사업은 협력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협력사업이 진전되면 상호 투자·협력하는 사업형태로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호투자 협력방식이 협력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이다. 또한 농산물 유통부문에서의 협력은 유통부문 독자적인 협력보다는 농업 생산과 유통분야의 협력사업이 연계되어야 전체 농업부문 협력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협력사업의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농산물 유통분야 협력사업의 기본원칙은 첫째, 협력사업분야 다변화

표 3-3 시기별·사업별 유통부문 남북 협력사업 유망분야

기간	협력사업 과제	주요 내용
단·중기	• 농민시장 활성화	• 농민시장 신규건설 및 개보수 • 소비지 농민시장 개보수 및 상설화
	• 거래질서 확립 및 시장활동 조성	• 시장운영, 거래지침 마련 • 사인등록 및 기존 유통망의 활성화 사업
	• 산지 유통시설 신설 및 개보수	• 산지 저장 및 물류시설 확충 • 산지 가공시설 개보수 및 신설
중기	• 시범적 유통주체 육성	• 협동농장 주임 시범적 산지유통주체 육성 • 시범적 산지유통시설 확충
	• 유통산업발전 장기종합계획 수립	• 농업 및 농산물유통 총조사 실시 • 단계별 시장 및 유통시설 건설 방향
	• 시장경제 교육	• 시장경제원리 교육사업 • 농산물 상품화 및 유통전략 교육
장기	• 유통조성기능 활성화	• 농산물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사업 • 유통정보화사업 추진
	• 대규모 유통시설 건설	• 대도시 소비지 도매시장 거닐사업 • 산지 종합유통시설 건설 사업 • 민간유통업체의 유통시설 건설사업
	• 시장경제 교육	• 유통교육기관 설립 및 유통전문가 양성 • 농산물유통의 세계화와 수출 교육

원칙이 중요하다. 이것은 농산물유통의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협력분야를 다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점진성 및 일관성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농산물 유통분야의 경우 농업생산 증대 및 자생력 회복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전략 바탕 위에 점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 및 민간주도의 적정 배분 원칙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정부 또는 민간주도의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제 4 장

남북한 농업유통부문 협력방안

1. 단기적 협력방안

1.1. 남북한간 농산물 교역 확대

1.1.1. 북한산 농산물 반입 현황 및 향후 반입 가능 품목

가. 반입실적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대북한 문호개방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남북한간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교역액은 1989년에 1870만달러이던 것이 1999년에는 3억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10년간 약 17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는 9월까지의 교역액이 이미 3억달러에 달해 연말까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간 교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여 무관세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남북교역으로 인해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피해방지가 필요한 품목은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반입 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승인대상품목은 HS 10단위 기준 171개 품목이며, 반입자유품목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통공사가 직접 반입하였거나 민간이 반입한 후 유통공사가 인수한 농산물의 반입실적을 살펴보면, 유통공사가 직접 반입한 것으로는 1990년과 1991년 2년에 걸쳐 감자 13,716톤, 그리고 1995년과 1996년 2년간 팔 1,862톤으로 금액으로는 총 542만7천 달러이다. 민간이 반입한 후 유통공사가 인수한 농산물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이루어져 왔으며 반입품목은 땅콩·팥·참깨·울무·녹두·콩·감자 등이며, 누적수량은 9,713톤이고 금액은 7백만달러를 초과하였다.

표 4-1 남북한 농산물 반입추이

단위: 톤, 천달러

년도	유통공사 직반입			민간반입분 인수			합계	
	품목	수량	금액	품목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0	감자	10,071	3,230				10,071	3,230
1991	감자	3,645	1,053	땅콩	300	405	3,925	1,458
1992				감자, 울무	544	255	544	255
1993				울무, 녹두	252	225	252	225
1994				땅콩	523	448	523	448
1995	팥	862	559	땅콩, 팥 등	2,524	1,721	3,386	2,280
1996	팥	1,000	585	팥, 참깨 등	2,446	1,443	3,446	2,028
1997				팥	97	68	97	68
1998				팥, 참깨 등	2,744	2,332	2,744	2,332
1999				팥, 콩 등	283	155	283	155
계		15,578	5,427		9,713	7,063	25,291	12,490

나. 북한산 농산물 반입 가능 품목

북한에서 반입할 수 있는 농산물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의 주요 국영무역 품목의 수급현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시장접근물량 증량품목의 경우 생산량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주요 국영무역 농산물 품목은 참깨, 팥, 콩, 녹두, 메밀 등이며, 이들 품목은 수요량에 비해 국내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농산물 반입품목 선정은 국내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극히 부족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품목중 북한으로부터 반입이 가능하고, 또한 국내농가에 대한 피해가 적으면서 북한 농업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간 북한산 농산물 반입실적과 대북한 교역업체에 대한 조사(유통공사 실시) 결과에 의거 선별한 반입 가능 북한산 농산물 품목중 승인품목은 참깨, 팥, 콩(콩나물콩), 녹두, 메밀 등이며 반입자유 품목은 강낭콩과 호두이다.

1.1.2.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가. 배경

국내 일부 주요 농산물은 생산량 부족으로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품목별 연간 수요량 대비 수입 비중은 참깨 65%, 대두(콩나물콩 포함) 66.2%, 팥 48.3%, 녹두 52.6%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남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중 북한에서 재배하여 반입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계약재배를 통해 남북한간의 상호 보완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 농산물 생산체계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큰 작물로 전환함으로써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경지구조를 보면, 전체 경작면적의 70%가 밭이며 현재 밭작물은 옥

수수와 감자 위주의 작부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옥수수 재배면적을 축소시키고 여기에 국제가격이 높은 참깨나 팥 등을 재배하여 생산물을 남한에 공급할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남한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할 것을 북한으로부터 반입하게 되어 수입대체 효과를 얻게 되고 아울러 남북 농업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그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나. 추진방안

1) 계약재배 품목 및 수량 결정

국내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극히 부족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품목 중 북한으로부터 반입이 가능하고 또한 국내농가에 대한 피해가 적으면서 북한 농업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최근 남한의 주요 국영무역 농산물 품목의 수급현황과 북한의 농업생산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과 참깨, 팥, 콩(콩나물콩), 녹두, 메밀, 땅콩 등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급 및 가격조건 등에서 가장 유리한 팥과 참깨의 2개 품목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차츰 녹두, 콩 등 기타품목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 남한의 주요 국영무역 농산물 품목의 수급현황(1999년)

단위: 톤

품 목	수요량	생산량	수입	시장접근물량 (2000년도)
참깨	93,800	24,100	60,963	6,731
팥	43,100	13,000	20,833	12,508(녹두포함)
콩 (콩나물콩)	450,000 (50,000)	116,120 (30,000)	298,045 (8,000)	185,782
녹두	10,500	2,200	2,283	
메밀	7,000	4,500	1,659	1,048

그리고 계약재배 규모는 초기에는 적당 규모로 시작하고 그 추진 성과와 재원 확보 상황 등을 보가며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계약재배의 추진 주체

일반적으로 농산물 계약재배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나 국가의 식량안보 또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과 농산물 계약재배를 실시할 경우 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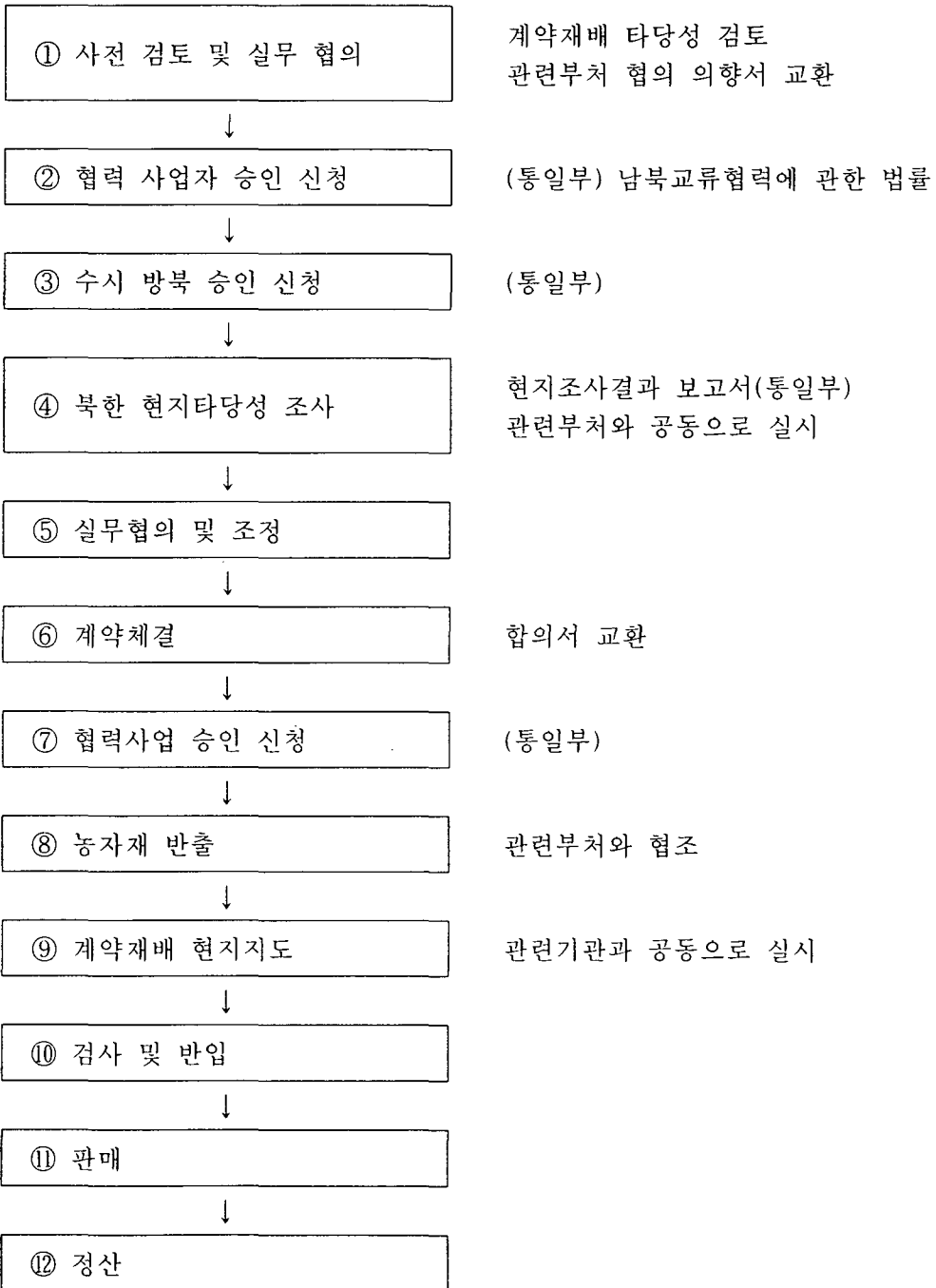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계약재배 추진 주체가 될 경우 정부의 허가 및 승인 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 한다. 따라서 계약재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곧 사업의 수익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북한 농산물 계약재배사업은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만약 민간차원에서 대북한 계약재배를 추진할 경우 북한의 경제여건이나 개방 수준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과 동시에 반입승인, 투자보장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경우 계약재배 경험이 있고 현재 농산물의 국영무역을 관장하며 북한농산물 반입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담하되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농협은 농기자재 공급을 담당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은 관련정책 및 제도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 기관이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할 경우 계약재배 협력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3) 추진절차 및 검토사항

계약재배의 추진절차는 그림 4-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사전검토와 실무협의,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 현지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그림 4-1 계약재배 추진절차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협력사업 승인 신청, 계약재배를 위한 남측 분담물의 공급을 위한 소정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계약재배 실시 도중에도 현지지도를 해야하고, 검사·반입·판매 등 생산물의 처리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재배를 위한 주요 사전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재배 가능 품목 및 물량 선정
- 계약재배사업 추진방식
- 품목별 재배지역 및 면적
- 영농자재(비료, 농약, 농기계, 포장재 등)의 시기별 소요량 및 공급방안
- 영농자재의 보관방법 및 투입 확인방법
- 품목별 생산비 및 계약재배 금액
- 품목별 선적 및 반입시기
- 교역방법 및 대금정산방법
- 생산물 현지검사 및 반출입 방법
- 클레임 발생시 처리대책
- 재원확보 및 결손보전 대책

그리고 북한 현지 타당성 조사 항목으로는 첫째, 계약재배지역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현지조사이다. 구체 조사내용은 농업생산여건, 기본시설 구비, 생산요소 조달 등이며 조사 후 「계약재배 타당성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타당성 심사의 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북한 당국의 확인서 또는 보증각서의 징구이다. 계약재배 사업내용에 대한 「북한의 협력당사자 보증서」는 사업내용의 이행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단서의 하나이다. 이상 두 가지는 모두 남북한간 협력사업 추진시 통일부에서 요구하는 자료이다.

4) 단계별 세부검토 사항

계약가격 : 최근 1년간의 국제평균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내국간 거래로 면

제되는 관세상당액(관세율 3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방식 : 단순계약재배와 복합계약재배² 방식 중 택일한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선후구분형 계약재배³ 방식이 있으나 이는 남북한 협력사업이 다양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의 남북한간의 협력사업 방식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다. 다만 장차 남북한 통일이후 한반도의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확인 및 기술지도 : 관련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운영하여 생육환경, 생산기반, 유통환경 등에 대한 생산지의 사전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배기술지도를 위한 전문요원을 구성하고 지도 내용 및 기간을 확정한다.

품목별 재배 면적 : 농산물 품목별 단위 수확량과 목표수확량에 대한 최저소요면적을 살펴보자. 가령 참깨·팥·녹두·콩에 대해서 품목당 1,000톤을 목표량으로 정했을 경우 ha당 예상수확량에 의거 품목별 최저소요면적은 참깨 1471ha, 팥 893ha, 녹두 952ha, 콩 637ha이다.

영농자재의 공급시기 및 방법 결정 : 남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영농자재는 일괄 제공할 경우 파종기 1개월 전까지 인도하고, 단계적 제공시 작물 및 농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요시기에 맞추어 제공하여야 영농계획에 따른 영농활

표 4-3 계약재배 유망품목의 소요면적

구분	참깨	팥	녹두	콩
예상수확량(톤/ha)	0.68	1.12	1.05	1.57
최저소요면적(ha)	1,471	893	952	637

주: 최저소요면적은 각 품목당 1,000톤 기준임.

- 2) 순수 영농위주의 단순형 계약재배와는 달리 복합형 계약재배는 영농분야만으로는 채산성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농분야와 비영농 분야에 동시 진출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즉 영농과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영농사업 등이 복합형에 속한다.
- 3) 만일 현실적으로 북한 내에서 직접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농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한 공동으로 제3국에서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 때 북한에 제공할 영농기자재는 입찰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농기자재의 보관방법 및 투입 확인방법 : 영농기자재의 보관장소는 현지 보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현지 상주시에는 수불관리 및 사용확인 등 직접 관리하고 미상주시에는 수시로 북한 현지를 방문하여 수불 및 사용현황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품목별 선적시기 및 반입시기 : 작물별 생육기간과 수확기간에 의거 참깨는 10~11월에 선적하여 11~12월에 반입하고, 팥과 콩은 11~12월에 선적하여 12월~이듬해 1월 사이에 반입한다.

계약방법은 구상무역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신용장 방식을 병행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양측 당국명의로 보증각서를 교환한다.

생산물의 현지검사 및 반출입 방법 : 생산물의 품질, 위생 등 계약내용에 포함된 규격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생산물의 처리 방침을 확정한다. 생산물의 처리 방법은 북한 자체소비용, 남한으로의 반출용, 제3국으로의 수출용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물에 대한 품목별 품위 및 검역검사 기준 설정 : 품위는 공사의 외자 구매입찰 도입규격을 준용하고, 식물검역은 북한측 식물검역실시기관 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검정하며, 식품검역은 식품의약품 안전농약검사 기준에 합치되도록 한다.

현지 수확, 선별포장, 보관관리 기술지도 : 품목별 품위 및 검역검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며, 포장재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계약재배 물품임을 표시한다.

표 4-4 계약재배 작물의 선적 및 반입시기

품목	생육기간	수확기간	선적시기	반입시기
참깨	5월 상순 - 8월 중순	8월 상순 - 9월 중순	10 - 11	11 - 12
팥	6월 하순 - 10월 상순	10월 상순 - 11월 상순	11 - 12	12 - 1
콩	5월 상순 - 10월 상순	10월 상순 - 11월 상순	11 - 12	12 - 1

품위 및 중량에 대한 선적지 검정 : 검정기관은 북한측 검정실시기관 또는 남북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검정하며, 품위검정서에는 구매품위규격별 검사 결과를 명기토록 한다.

클레임 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 수확물의 임의처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배지 농작물 피해, 반입불능품 과다발생, 수확물의 고가 책정, 재배활동 비협조 등 계약재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대책으로는 수확물의 처분권 확보, 다른 지역의 동종 대체물품 인도 등 내용을 계약서 등에 명시한다.

재원확보방안 : 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 받은 수확물을 반입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상환하도록 한다. 반입농산물의 판매대금이 투입 비용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에 불입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보전토록 한다.

5) 계약금액 산정

계약재배를 실시할 경우 계약재배 물량의 계약금액은 계약재배방식에 따라 상이하나 그 품목의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한다. 남북한간 계약가격은 최근 1년간 국제평균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내국간 거래로 면제되는 관세를 가산한 가격을 최고한도로 설정할 수 있다.

1.2. 북한산 농산물 수출 지원

1.2.1. 북한 여건

북한의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은 버섯류, 인삼류, 건조채소류 등이고, 북한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가는 일본, 중국 등이다. 단, 최근에는 경제난 등으로 해외시장개척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4-5 북한의 농림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US\$, %)

구분(HS)	'98		'99		증감율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교역전체	559,331	100.0	514,962	100.0	△ 7.9
동물제품 (수산물 포함)	60,996	10.9	87,777	17.0	43.9
식물제품 (곡물 포함)	57,734	10.3	22,520	4.4	△ 61.0
광물생산물	42,627	7.6	26,628	5.2	△ 37.5
목제품	17,752	3.2	16,186	3.1	△ 8.8

1.2.2. 남한 여건

일본, 홍콩 등 주요 수출국에서 박람회 등 해외홍보 행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 농산물 시장개척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TV·라디오·인터넷 등 전파매체, 빌보드·멀티비전 등 옥외매체, 신문·책자·포스터 등 인쇄매체, 기타 관촉물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1.2.3. 수출지원의 필요성

북한산 농산물 홍보지원을 통한 남북한 상호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저조한 북한산 농산물을 홍보매체를 통해 우수성을 알림으로서 수출확대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2.4. 추진방안

북한농산물 중 비교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남한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공이나 포장기술을 지원하고 동시에 홍보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고유브랜드 또는 해외인지도가 높아 조기

표 4-6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01	2002	2003	2003이후
박람회참가 지원	2회	2회	2회	2회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한 북한농산물 소개	2회	2회	2회	2회

시장개척이 가능한 북한의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조건을 구비한 북한 농산물에는 송이버섯, 호두, 잣, 약재류 등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남한이 박람회를 통해 우리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수행할 때 북한산 농특산물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북한산 농산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다. 둘째, 해외박람회장내에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남한 농산물과 병행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북한농산물 소개 및 거래알선이다.

1.3. 남북한 농산물 교역 POOL제 운영

1.3.1. 기본방향

남북한 농산물 교역 Pool제는 남한과 북한에 공히 이익이 되도록 교역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 일부 농산물의 과잉생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남한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남한은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농산물을 북한에 주고 북한으로부터 광산물 등을 받음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남북한 당국의 보증하에 계획적이면서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한 교역이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농산물 교역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1.3.2. 세부추진계획

가. 농업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합의서 교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와의 대화채널 확보가 필수적이다. 합의서 내용은 남북농산물 교역의 범위, 반출입 절차, 원산지증명, 정보교환, 인적접촉·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남북 농산물교역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경험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적·지속적 교역추진을 위해 「남북농산물유통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남북한 농산물유통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POOL화 품목선정 및 확보방법

1) 품목선정

남한 : 남한에서 생산이 유리한 작물 및 작황호조 등으로 과잉생산 되어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있는 농산물로는 마늘, 양파, 가을 김장채소, 감귤, 돼지고기 등이 대표적이나, 매년 수급여건 변동이 심함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북한 : 북한에서 생산이 유리한 잡곡류 등의 농산물을 교역대상으로 하되 반입품목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수산물이나 광산물도 교역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표 4-7 1999년도 주요 품목 반입실적

품 목	물량(톤)	금액(천달러)
농산물	26,949	15,057
임산물	2,607	4,484
수산물	20,010	28,237
광산물	7,903	2,462

2) 물품확보방법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하여 북한측에 인도하며, 대금 결제는 청산계정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 추진주체

남북한 농산물 교역 Pool제는 상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북한산 농산물의 반출입 노하우를 구비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농산물 Pool 전담기구가 담당한다.

민간차원의 교역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한다. 현재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북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인정되어 무관세로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교역방법

추진시기 : 가칭 「남북농산물유통협력위원회」를 구성 후 상호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한다.

교역조건 중 품목은 양측 추진기관이 상호 교역가능 품목을 제시 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가격은 농산물의 구매가격에 제비용(수송비, 관리비 등)을 합한 가격을 한도로 설정하여 북한측과 협의하여 거래하는데, 농산물 중 통일부 승인대상품목을 반입할 때에는 내국간 거래로 면제되는 관세(30%) 한도 내에서 가격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한다.

수송은 남북한 직수송을 원칙으로 하여, 남북한 도로, 철도 등 SOC 연결 등을 고려하여 물류비용이 최소화되는 경로로 수송하도록 한다. 대금결제방법은 청산계정을 활용하도록 한다.

국내판매 : 반입품목은 pool제 전담기관에서 판매토록 하는데, 판매대금은 국내 구매시 지원하는 기금에 불입한다. 현재 북한 농산물 반입에 따른 판매 이익금은 농안기금에 불입하고 있다.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Pool제를 실시할

경우 농산물 이외의 반입 품목에 대한 판매이익금의 기금 불입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북측에서 교역 Pool제 대상품목으로 구리, 아연 등 광산물을 보낼 경우를 대비하여 농안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될 내용이다. 현재 광산물은 반입 자유품목으로 반입에 문제가 없으며, 국내 판매시에도 광업진흥공사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판매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남북한 공동시범농민시장 개설 운영

1.4.1. 기본방향

남북한간 전면적인 직접교역이 실행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특정지역에서의 부분적인 물자교류를 실시하고 점차 지역과 상품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기시장(5일장) 형태와 유사한 농민시장을 시범적으로 공동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4.2. 세부추진계획

가. 장소

휴전선 부근 경의선 철도역 주변, 금강산 관광지역내 등지에서 접근성, 효율성,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택일한다.

나. 주체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의 주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운영방식

남북한 정부가 선정한 일정 수의 상인들로 하여금 지정된 시장에서 상업활

등을 통해 상호 물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한 시장참여자간의 현격한 구매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 방식 위주로 운영하 되, 남북한 상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상업자금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상환하도록하는 조치를 아울러 실시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4.3. 기대효과

남북한 물자교류의 증대, 남북한 농업인 또는 상인간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시장운영과 상업활동에 관한 전시효과 제공으로 북한 농민시장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 수행 등을 기하여 남북한 농산물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2. 중장기적 협력방안

2.1.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2.1.1. 배경

북한의 농산물 유통인프라는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계약재배 및 구상무역 물량을 보관·관리하는데 필요한 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감모 및 변질로 인한 상품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나마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감모되거나 손실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중반 들어 급증하고 있는 농민시장은 최근에 약 350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규모와 시설에 차이가 크고 대부분이 상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장설비가 미비되었거나 취약한 실정이다.

2.1.2. 필요성

북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북한의 개방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시장경제의 확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여 단기적으로는 북한 경제의 회복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통일비용을 축소시켜 통일 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2.1.3. 추진방안

첫째는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보관 및 선별·포장작업에 필요한 간이저장고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간이집하장의 경우 남한은 전국에 3,102개소가 있으며 규모별 표준설계도를 보유하고 있어 대북지원 추진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간이저장고는 계약재배 또는 구상무역 품목 생산권역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고 차츰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며, 규모는 100평 내외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⁴.

둘째는 수확한 농산물을 생산농민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농민시장의 시설을 지원하여 시장경제 확산 및 농가자산 축적 여건을 조성한다. 농민시장의 지원대상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500평 규모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시장 내 거래실적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간이저장고와 농민시장은 각 시·군(구역)에 1개소씩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209개이며, 시장규모에 대해서는 1차년도는 500평 규모로 설치한 후 활용정도를 감안하여 규모를 조정한다.

4) 현재 남한의 농산물간이저장고의 87%가 100평 이하이므로 이 정도의 규모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2.1.4. 기대효과

유통인프라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간 농산물 교역물자의 품위향상과 원활한 집배송을 통한 교역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북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결국에는 통일비용 감소 효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2.2. 북한의 농업유통부문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훈련 추진

2.2.1. 기본방향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분배중심체제 하에서 필요한 물적 유통부문을 중심으로 관련담당자들에게 유통교육을 실시하여 분배활동의 효율화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 상업 및 유통에 대한 개념과 논리를 교육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농산물유통체제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2.2. 세부추진계획

가. 교육담당주체

유통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사업은 비록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 주민의 의식전환에 가장 직접적인 분야로서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농수산물 유통조성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1985년부터 농수산물유통교육원을 운영하여 국내 농산물유통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유통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비용과 효율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나. 교육대상

- 시·군단위 농축산물도매소 및 배급소 관리자
- 시·군단위 농민시장 관리자
- 국영유통기업소 관리자
- 식료수매종합상점 관리자

다. 교육내용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유통에 대한 개념과 분배중심체제의 물적 유통개선에 필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산물 유통의 기초,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요령, 농산물 저장 관리 기법, 규격포장화 기술, 가공기술, 유통정보 등 유통 전반을 포괄한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농산물 유통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 시장의 기능과 역할 등 자본주의 개념정립을 위한 내용과 농산물유통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과목중심으로 교육분야를 편성한다. 구체 내용으로는 시장경제원리, 시장의 기능과 역할, 농산물 산지유통, 농산물 도매유통, 농산물 소매유통, 농산물 물류표준화, 농산물 유통정보, 농산물 수출 등이다.

라. 교육방법

시·군 행정단위별로 교육대상자를 시·군의 일정장소에 소집하여 1주일 기간동안 합숙교육으로 실시한다. 월 1회를 기준으로 년 12회 실시하며, 1회당 교육인원은 50명 단위로 하여 연간 교육인원은 600명 수준으로 한다.

강사는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교육진행요원을 포함한 이동유통교육원(가칭)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는 이동교육원에서 준비하여 별도의 차량으로 이동한다.

교육대상자 선정 및 차출은 북측 현지관련기관에 전적으로 위임한다.

2.2.3. 기대효과

현재 북한에서는 유통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유통을 생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생산활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유통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의 유통기능이 무시당하고 있다. 특히 개방화와 세계화가 보편화되어 있는 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유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통기능을 강화하지 않고는 세계시장에서의 교역증대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대외교역 증대를 통한 외화 획득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은 물론 품질경쟁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농산물의 경우 생산 후 유통과정을 통해 품질을 제고시켜야만 수출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 체제 하에서 북한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실제 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북한의 국가수매사업소, 국영도매소, 배급소 등의 유통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산물 저장관리 기법 등에 관한 유통교육을 실시하여 비록 제한적이긴 하나 유통 중 분배 활동만이라도 효율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북한의 농산물 무역실무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에게 규격포장화 기술, 가공기술, 홍보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북한의 농산물 수출을 도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영상점, 식료품점 및 농민시장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상인들로 교육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주의, 상업 및 유통에 대한 개념과 논리, 시장경제원리, 시장의 기능과 역할, 농산물 산지유통, 도·소매유통, 물류표준화, 유통정보, 수출 등을 폭넓게 교육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함으로써 장차 통일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농산물유통부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 유통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고 유통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분배중심 체제하에서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산물의 생산 증대는 물론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적응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분야가 곧 상품시장에서의 상업활동이므로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교육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2.3. 농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2.3.1. 농민시장의 문제점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서는 경기침체와 농업생산 격감 등으로 식량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 부족이 심화되면서 공식적인 분배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농민시장이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300여 개소의 농민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시설면에서 유개시장과 노천시장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민시장은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시장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낙후되어 시장이용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시장의 시설은 대부분의 경우 고정 점포시설이 있는 건물이 없으며, 대체로 간이천막형식이나, 나무로 만든 좌판상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바닥의 경우 대체로 흙바닥의 노천상태로 비가 내리거나 기후가 불순할 경우 노천에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품진열은 일부 나무로 만든 진열대에 전시해 놓는 경우가 있으나, 진열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난의 우려 때문에 좌판 아래나 포장용기 내에 넣어둔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 대부분의 군과 읍 지역의 경우 유개시설이 있는 판매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 무개시설이며, 판매시설이 협소하여 노천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음. 남양시장의 경우 약 40평 정도의 간이 비가림 시설과 매대 약 50개가 있으나 대부분은 노천거래이며, 전체 부지면적은 약 400m² 이내로 협소한 편이다.

개인소유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농민시장 역시 특정 지역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수가 한 군에 평균 1개소 정도가 배치되어 일반농민 및 주민들의 시장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농민시장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는 공산품과 농산물의 교환, 일부농산물의 소규모 현금거래 등으로 아주 초보적인 거래단계에 머물고 있어 농민시장을 통한 대규모 도매상인이나 소매상인의 출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3.2. 농민시장 활성화 방안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활성화 방안은 소비지역을 도시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만 효율적일 수 있다.

농민시장의 개편방향은 도시지역의 경우 소비자, 상인, 생산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종합소매시장 형태의 상설시장으로 전환하며, 농촌지역의 경우 군 단위의 지역중심지는 상설시장화 하고 변두리 지역은 정기시장화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농민시장의 거래품목은 곡물류, 청과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과 생활필수품 위주로 구성하고, 시장규모는 기존의 농민시장 거래규모와 시장생활권의 인구규모가 고려되어야 되며, 시장수는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1개의 종합소매시장, 군 지역은 중심지의 상설시장 1개소와 농촌지역의 2~3개의 정기시장을 개설하도록 한다.

농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농민시장 부지면적을 확대하고 거래시설을 유개점포시설로 바꾸어 상인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규모의 확대와 시설개선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기존의 농민시장을 보수·개선하여 상설 또는 정기시장화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농민시장의 시장규모 및 시장수 확대 건설과 함께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시장활동의 공개적인 조성을 위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농산물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지도 및 관리·감독, 거래지침, 시장시설 사용, 상인등록, 조세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생산물의 자유 처분이 허용되는 텃밭 등 개인경작지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민시장의 공급물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3.3. 농민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가. 추진방안

첫째, 농민시장의 시설물 설치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각 도별 1~2개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노천시장은 시장건축물을 짓고, 유개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설이 미비하거나 노후화 된 건축물은 개보수를 추진한다. 그리고 매대를 설치하고, 물품저장시설을 건설하며, 시장시설물 건설은 정부차원의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활동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주민의 소득제고와 시장경제 의식 배양에 두드러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나. 기대효과

첫째, 사적생산물에 대한 개인소유 및 처분권 허용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둘째, 농민시장 활성화가 북한경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주민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독립활동 증대로 경제부문의 사적 자율화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시장 지향적 개혁의 전조가 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생산증대를 위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간 물자수급 불균형을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물자난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동원 가능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물자를 조달해 옴으로써 심각한 물자부족 현상을 완화하는데 일조를 한다.

제 5 장

농산물 가공산업의 남북협력방안

1. 남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실태

1.1. 농산물가공산업의 개요

광의의 농산물 가공산업은 1차 가공과 식품가공으로 구분되는데, 국내의 1차 가공산업의 규모는 1995년을 기준으로 정미정맥제분 6조 6,583억원과 도축도계 4조 4,343억원이며, 2차 가공인 식품가공분야는 농산가공품 14조 801억원, 축산가공품 3조 8,317억원, 수산가공품 1조 5,675억원으로 구성된다⁵⁾.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인하여 농산물가공산업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또한 농산물가공산업에서의 원료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산원료이용률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가의 수입농수산물을 이용하여 대량생산·판매하는 대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라 농산물가공산업과 국내 농수산업과의 연계가 계속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북한농산물가공산업의 규모나 기술

5) 한국은행, 1995년 산업연관표, 1998.

수준은 남한의 1960~70년대 수준으로 매우 영세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1. 식품산업의 현황

우리 나라의 식품산업체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1998년도 식품제조업체 중 식료품 제조업체가 87%를 점하고 있으며, 음료 제조업체는 13%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산업 내의 업종별 구성비는 수산물가공이 34%, 곡물가공이 11%, 기타 식품가공업이 7.4% 순이다. 1970년대와 1990년대를 비교 해 보면 수산물 가공업, 육가공품 제조업, 낙농 제품 제조업, 과일, 채소 가공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커피, 다류 제조업 등은 증가하고 곡물가공업, 식용유지 제조업, 주류제조업의 수는 감소하였다.

식품산업의 1998년 총 시장규모는 29조 5,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식료품이 22조 5,200억원이고, 음료시장은 주류 4조 8,000억원, 비알코올성 음료 2조 2,300억원 포함, 총 7조 3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점은 신상품군인 냉동·레토르트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이 소비자의 건강선호추세와 경제활동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식품산업의 매출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식품업체 중 0.03%에 해당하는 20여개 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국내 식품 산업계는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고 강력한 영업 조직 바탕으로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특히 유명 상표를 보유한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 지배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외국 유명상표 까지 가세하여 시장 쟁탈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용인 50명 미만의 소규모 식품 기업이 전체의 85%정도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영세한 업체가 많은 산업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 식품산업의 신규투자는 전체 제조업 평균 투자 규모의 80% 수준이며, 연구개발비도 1% 미만으로 타 업종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 나라는 식품자원이 부족하여 식품산업의 원료인 농수축산물의 수입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가공식품 수출입은 1990년을 분기점으로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8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

승과 내수침체로 인한 반입물량 축소로 전년대비 31.6%나 감소하였던 수입은 1999년 6월에는 실질임금 상승과 내수 회복세로 인하여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호주, EU 등이며 수입 품목은 고품질 제품의 수요증가로 육류 조제품, 버터 및 치즈 등의 유가공, 식품 원자재인 유지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향후 가공 식품업의 수급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수증가의 주요 요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세 지속과 생활구조의 변화로 인한 외식, 기능성식품 및 편의식품 등의 수요 증가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품군별 식품소재는 제과, 제빵 등의 성장지속과 외식사업, 가정용품 출하 급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며 식료는 전반적인 상승 속에서 소비수준 향상에 따른 고품질, 고가품인 치즈, 마가린 및 햄류와 다양한 제품출시가 예상되는 제과 등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다.

1999년 이후의 경제상황 호전으로 실질소득의 증가와 건강선호 추세에 따라 국내산 경작물 또는 어획물, 무공해 경작산물 등의 고급 원재료를 이용한 고품질, 고가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될 것이며, 기존의 화학적 식품첨가물을 가급적 적게 사용하고 다양한 천연원료로 대체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각종 고품질의 신제품 출시로 2차 가공식료품의 내수 증가폭이 식품소재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군별로는 2차 가공식료품 중 통조림 등의 수산물가공, 동식물성 유지, 냉동식품 등은 신선제품 선호와 대체제품의 출현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제빵, 제과, 유가공은 실질소득 증가와 간편한 식생활 양식 확산으로 그 증가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산업발달의 진전과 소비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편의식, 영양식 등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유가공, 레토르트식품, 제과류 등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품업계의 대북진출은 남북한의 6.15선언을 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이후 한동안 뒷전으로 밀려 있던 대북 진출 움직임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식품그룹인 CJ그룹(제일제당그룹)은 북한이 밀가루, 설탕, 식용유 등 기초생활필품과 의약품이 부족한 사실에 착안, 이 분야를 중심으로 단독진출, 합작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중이며, 1998년 1월 북한당국으로부터 초코파이 및 과자류 생산과 관련해 합작형태의 사업승인을 획득한 롯데제과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판단하고 공장부지 물색, 생산규모 검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7년과 1998년 2년에 걸쳐 북한에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마친 동양제과, 이외에 샘표식품, 해태제과 등 다른 식품업체들도 된장, 고추장, 간장, 제과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대북 진출에 걸림돌이 돼온 이중과세 문제 등 제도적 제약이 해결되었고,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식품업계의 북한진출 움직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앞으로 대기업 군의 대북 진출은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2. 임산물가공산업의 현황

남한의 목재가공업은 제재, 합판 등 목재의 1차 가공산업을 중심으로 1977년도까지 수출위주로 발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목재자원 보유국이 가공품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국내가공 생산업체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지원목 가격이 상승하여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합판 생산업체는 1990년말 72개 업체에서 1996년도에는 경영난 가중으로 업체들이 대부분 폐업하거나 조업을 중단하여 14개 업체로 감소되었다. 제재업체는 1996년말에 1,343개 업체로 1990년도에 비해 316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나 가동율은 50%로 저조한 실정에 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가공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앞으로 목재가공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생산시설의 자동화 자금지원, 원자재의 수급알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한은 기후 여건이 좋아 다양한 임산부산물(임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부산물은 산야에 자생하고 있는 천연생과 인공재배생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최근 무공해 자연식품 선호경향에 따라 산림내에서 생산되는 산과실류, 버섯류, 산약초류, 산채류, 수액류 등을 단기 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임업의 장기투자에서 오는 취약성을 해결하고 산지를 집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산촌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단기소득 임산물이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전국 37개소의 특산지를 주산단지로 지정하였으며, 이들 지역에 자금 및 기술·행정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남한의 임산물 수출은 1959년 일본 및 미국에 합판 수출이 처음 시작되어 1971년에는 151백만달러에 달하였고, 합판수출이 절정에 달했던 1979년에는 738백만달러로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보였으나, 1980년대 접어들면서 자원보유국의 가공 수출증대로 임산물 수출을 주도해오던 합판과 목재의 수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석재와 버섯 등 임산부산물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 임산물 수출은 406백만달러로서 수출품목은 석재, 밤, 송이, 목제품, 목재, 합판, 표고 등이다. 또한 수출시장은 일본(전체수출의 79%), 중국, 미국, 대만 등이다. 임산물 수입은 원목, 제재목, 합판 등 목재류가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 석재, 기타 부산물 등이 있다. 이중 남한의 목재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목수입의 추세를 보면 1975년에는 5,119천m³이었으며, 1985년에는 5,578천m³, 1995년에는 8,229천m³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원목 수입국은 1960년대에는 주로 필리핀이었으나 1970년에 들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등지로 도입선이 전환되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 인도네시아 등 자원보유국의 원목수출 규제 강화로 도입선을 점차 다변화하고 있다. 1996년 이후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뉴질랜드, 칠레, 중국,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1999년 임산물 수출액은 298백만달러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여 1995년 이후 계속되던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이중 목재류의 수출액은 118백만달러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으나,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액은 145백만달러로 전년대비 22.5%가 상승하였다.

표 5-1 임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천달러

구분	품 목	1995	1996	1997	1998	1999
수출	소 계	504,554	405,205	339,072	288,420	297,714
	목 재 류	118,639	121,806	109,593	122,716	117,946
	석 재 류	176,932	122,563	93,693	47,575	35,112
	단기소득임산물	208,983	160,836	135,786	118,129	144,656
수입	소 계	2,778,983	2,787,995	2,583,884	1,006,217	1,521,347
	목 재 류	2,596,257	2,554,726	2,366,262	908,750	1,399,431
	석 재 류	91,226	113,099	97,295	32,480	38,638
	단기소득임산물	91,500	120,170	120,027	64,987	83,278

자료: 산림청

한편 1999년 임산물 수입액은 1,521백만달러로 전년대비 51.2% 증가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목재류의 수입액은 1,399백만달러로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입액은 83백만달러로 전년대비 28% 증가하였다.

2000년 2월중 목재류의 수입은 전월보다 약간 감소하였으나 금후 원화가치의 하락추세 및 성수기를 맞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소득임산물 중 밤, 잣, 송이는 1999년 수입량이 크게 감소된 반면, 대추와 표고의 수입량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산 밤(상품)은 주로 일본 등지에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국내 소비는 염가의 중국산 밤으로 충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근 표고의 국내 소비 및 수출 증가로 염가의 중국산 표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생산을 위축시키고 가격불안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5-2 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 목재류, 천m³. 단기소득임산물, 천kg

구 분		1998 (A)	1999 (B)	1999.2 (C)	2000.1 (D)	2000.2 (E)	증감율(%)		
							B/A	E/C	
목 재 류	수 출	원 목	0	0	0	0	-	-	
		칩	0	0	0	0	0	-	
		제재목	0	0	0	0	0	-	
		합 관	141	135	14	5	8	△4.3	△42.9
		파티클보드	0	0	0	0	0	-	-
		섬유판	90	95	5	6	6	5.6	20.0
	수 입	원 목	4,360	6,623	356	579	407	51.9	14.3
		칩	583	1162	73	94	64	99.3	△12.3
		제재목	487	752	44	58	59	54.4	34.1
		합 관	494	792	14	89	57	60.3	307.1
		라티클보드	114	378	16	42	41	231.6	156.3
		섬유판	29	219	16	28	31	655.2	93.8
단 기 소 득 임 산 물	수 출	밤	2,112	2,245	0	0	0	6.3	-
		잣(피잣)	0	0	0	0	0	-	-
		대추(건)	0	0	0	0	0	-	-
		표고(건)	367	392	33	30	30	6.8	△3.0
		송이(생)	7,643	3,283	0	0	0	△57.0	-
	수 입	밤	200	178	0	0	0	△11.0	-
		잣(피잣)	21	12	0	0	0	△42.9	-
		대추(건)	106	223	0	0	0	110.4	-
		표고(건)	1,136	1,040	89	97	97	8.5	9.0
		생송이	554	36	0	0	0	△93.5	-

1.1.3. 축산물가공산업의 현황

남한의 축산물 가공산업은 축산의 역사, 국민소득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이전부터 전쟁 이후 근대 경제개발계획 추진시점까지는 일부 계층에 축산 가공 제품을 공급하는 수준이었다. 그 후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축산장려가 시작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및 축산관련산물의 소비량도 증가하면서 축산물 가공산업도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초까지는 축산업 및 관련산업이 가장 왕성하게 발전한 시기였으며, 일부 축산물이나 축산가공 제품의 경우 수출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를 정점으로 국내 축산업 및 관련산업은 외국 수입축산물과의 경쟁, 축산식품소비를 저해시켰던 일련의 사건, 수질 및 환경오염과 관련된 축산업계의 곤경, 피혁, 모피 산업 등 일부 축산물 관련산업의 국내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발전 추세가 둔화되고 일부 산업은 오히려 퇴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육가공 업계의 경우 향후 북한지역에서의 소비창출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 육가공 업계는 어육혼합 육가공 제품생산에 축적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어 북한과의 육가공 제품생산 협력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육가공업도 1990년대 중반부터 우유소비가 둔화하며 유체화가 증가하고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발전정체 상태이며, 체화 분유의 소진과 향후 소비창출 측면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육가공업의 경우 북한의 영유아 영양 개선 차원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사료산업은 현재 세계 제 5대 배합사료 생산국으로까지 발전되었으나 국내 축산산업의 담보가 지속되면서 배합사료업계 및 원료사료업계도 정체 또는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과잉 공급상태인 사료제조 시설, 축적된 사료제조기술, 과잉투자 등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획기적인 타개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들어 유일

한 조사료자원인 볏짚의 부족현상까지 가중되면서 해외 조사료 자원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그 수입 대상국으로 북한이 대두되고 있어 사료산업분야의 남북협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한국의 피혁관련 산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3대 우피 처리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임금수준에서 동남아 및 중국과의 경쟁력 약화로 현재는 쇠퇴 또는 답보상태에 있다. 현재 피혁업계는 해외투자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지역의 경우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수준이 낮아 피혁산업 분야의 협력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밖에 축산관련 산업을 살펴보면 최근 깃털을 활용한 장식 제품의 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관건인 사업이므로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축산식품을 소재로 한 고부가가치의 민방 또는 전통음식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의약 보조 식품의 조제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북한은 전통 민방과 한방요법, 천연소재의 개발과 생산측면에서 축적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남북협력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농산물가공산업의 구조변화 전망

농산물가공산업의 성장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집중도가 심화되어 농산물가공산업에서 영세업체(종업원 5인 미만)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저가의 수입농수산물을 이용하여 대량생산·판매하는 대기업의 경영전략 결과 농산물가공산업과 국내 농수산업과의 연계가 계속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산물가공산업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식품소재산업을 제외한 국내산 농수산물의 가공비율은 미미하게 증가했으며, 가공식품의 수입유발계수는 대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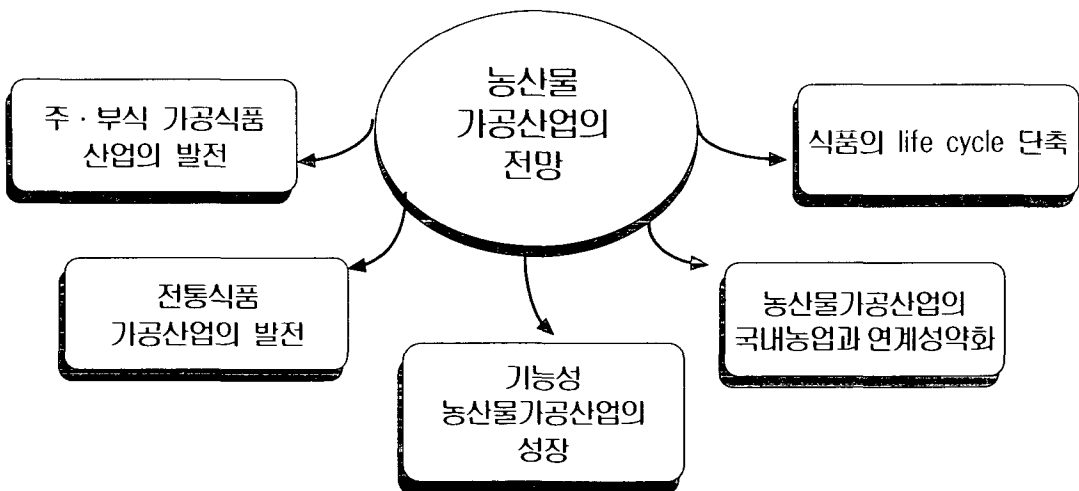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에 따른 과급효과가 국내농업과의 연계강화보다는 원료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우리농산물을 가공하는 산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내산 농산물의 가공 비율을 제고하고, 생

산된 부가가치를 농업소득으로 귀속시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더욱이 향후 농산물가공산업은 계속 높은 성장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농수산부문은 저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여 농어민의 가공산업참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여야 한다.

농산물가공산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도시화의 진전 지속에 따라 식품의 조리공에 필요한 인력, 시간, 공간이 부족하게되어 주·부식의 구입의존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증가에 따른 주·부식 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이며, 개인적으로 입맛의 차이가 큰 품목은 ready-to-eat 보다는 ready-to-cook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젊은 층의 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맛, 향미, 형태 등에 있어서 이들의 식기호에 부합되는 전통식품의 현대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일상화되고 외국의 음료와 식품의 국내유입이 대폭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식기호도 일부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전통식품의 국제화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림 5-1 농산물가공산업의 전망



셋째, 소득증가에 따라 여성은 미용, 중년 이상은 건강증진,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적·지적 발육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약리적 부작용이 적은 기능성식품에서 해결하려는 소비자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기능성 식품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넷째, 소비자는 끊임없이 새롭고 다양한 맛을 추구하기 때문에 출시된 식품의 시장 생존기간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부식 이외의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의 신제품개발비와 소비자 인식을 위한 광고비 부담이 늘어 중소식품업체나 농민참여 식품업체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과 관세율의 점진적인 인하로 원료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농산물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1.3. 남북한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1.3.1. 농산물 교역현황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반입품목은 철강금속 71.1%, 석유류 12.4%, 농임산물 6.6%, 수산물 3.1%, 광산물 2.5%, 기타 2.2% 등이다. 1998년 이후의 농수산물의 반입량은 23.6~39.4%로 급증하였다.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으로부터 반출입된 농산물의 품목은 <표 5-3>와 같다. 반입품목은 채유용 농산물, 식물성 재료 및 제품과 같은 식품소재가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조제과실, 한약재, 음료 등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반출물품은 식물류·의류부속품·TV부속품 등 위탁가공교역 원부자재이며, 특히 1997년에는 경수로 물자, KEDO 지원중유와 밀가루·분유·감자 등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지원물품이 많았다.

한편, 대북지원 물품으로는 대한적십자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한국제이티에스, 유진벨, 남북나눔, 월드비전, 한국이웃사랑회 등에서 비료, 분유, 밀가루 등의 물자를 반출하였다.

표 5-3 연도별 농수산물 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 분		'89~'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반 입	농수산물	5,911 (19.1)	7,653 (7.2)	15,520 (9.5)	10,552 (5.9)	14,784 (8.4)	20,460 (9.2)	21,654 (11.9)	24,974 (12.9)	21,978 (23.6)	47,868 (39.4)
	전체	30,933	105,722	162,863	178,166	176,298	222,855	182,399	193,069	92,264	121,604
반 출	농수산물	-	1,607 (29.0)	64 (0.6)	6 (0.1)	151 (0.8)	865 (1.3)	3,162 (4.5)	8,004 (6.9)	19,944 (15.4)	17,834 (8.4)
	전체	1,256	5,547	10,563	8,425	18,248	64,435	69,638	115,269	129,679	211,832

자료: 통일부

1.3.2. 임산물 교역현황

임산물의 2000년 1월중 교역액은 746천달러로서 총 교역액의 2.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반입액은 731천달러, 반출액은 15천달러로서 반입액 우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1월중 임산물의 반입액은 전월대비 325% 증가한 반면, 반출액은 전월대비 92.5% 감소하였다.

1999년 임산물 반입액은 총반입액의 37%를 점하는 4,484천달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98년대비 27.2% 증가하였다. 주요 반입품목은 호도 등 견과류와 버섯류 등으로 이 두품목이 총임산물반입액의 71%에 해당하는 3,163천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0년 1월중 총반입액은 11,148천달러로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하였으나, 이중 임산물 반입액은 1월중 총반입액의 7%에 해당하는 731천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중 반입품목은 견과류, 표고버섯, 석재류, 제재목 등이었으며, 이 중 견과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607천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1999년 임산물의 반출액은 총 반입액의 0.8%를 점하는 1,796천달러로, 1998년대비 252% 증가하였다. 임산물의 주요 반출 품목은 석제품·제재목·합판·목제품·재생목재 등으로 이들 품목이 임산물 총 반출액의 71%에 해당하는 3,163천달러를 점유하였다.

표 5-4 1992년~1998년도 북한산 임산물의 반입현황

단위: 톤, 천달러

연도	계	호 두		고 사 리		도 토 리		나뭇젓가락		표고버섯		기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2	3,999	1,020	1,811	276	810	1,243	505	134	119	5	48	706
1993	6,411	2,145	3,627	424	1,653	1,510	602	-	-	3	26	533
1994	8,160	3,110	6,349	244	843	310	149	6,989	195	7	47	577
1995	7,523	2,518	4,806	141	324	767	342	256	131	8	41	1,879
1996	3,804	355	866	183	666	68	52	41	42	12	121	2,057
1997	7,217	507	1,637	144	662	-	-	74	30	57	389	4,499
1998	4,298	852	2,068	170	660	75	42	-	-	31	214	1,865

자료: 통일부

표 5-5 1999년도 이후의 북한산 임산물 반입 동향

단위: 천달러, %

	1999						2000	전 년 동월대비
	계	1월	1/4	2/4	3/4	4/4	1월	
총 계(A)	121,604	7,908	22,466	9,526	47,991	41,621	11,148	41.0
임산물계(B)	4,484	771	1,926	882	1,148	528	731	-5.2
B/A	3.7	9.5	8.6	9.3	2.3	1.3	6.6	-
원 목	84	0	0	71	0	13	0	-
제재목	42	0	2	29	6	5	3	-
단 판	8	0	0	8	0	0	0	-
기타목제품	5	0	0	5	0	0	0	-
석재류	24	0	2	2	0	20	15	-
스레이트	0	0	0	0	0	0	0	-
표고버섯	811	80	108	296	111	296	100	-25.0
송이버섯	705	0	0	0	701	4	0	-
기타버섯	255	0	39	33	163	20	6	-
기타건과류	2,435	650	1,720	563	59	93	607	-6.6
산림수 등	115	41	41	0	0	74	0	-
조수류	(15)	0	(15)	0	0	0	0	-

자료: 통일부

표 5-6 1992년~1998년도 북한산 임산물의 반출현황

단위: 톤, 천달러

연도	계	벽 지		호 두		목제페렛		가 구 류		솔잎기름		기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92	-	-	-	-	-	-	-	-	-	-	-	-
1993	-	-	-	-	-	-	-	-	-	-	-	-
1994	-	-	-	-	-	-	-	-	-	-	-	-
1995	251	128	27	-	-	-	-	-	-	-	-	224
1996	240	-	-	-	-	3	10	-	-	2	18	212
1997	1,036	-	-	-	-	-	-	-	533	-	-	503
1998	1,285	-	-	-	-	-	-	67	734	-	-	551

자료: 통일부

표 5-7 1999년도 이후의 북한산 임산물 반출동향

단위: 천달러, %

	1999						2000	전 년
	계	1월	1/4	2/4	3/4	4/4	1월	동월대비
총 계(A)	211,832	15,506	34,203	85,227	58,548	33,855	18,988	22.5
임산물계(B)	1,796	294	340	94	680	682	15	-94.9
B/A	0.8	1.9	1.0	1.1	1.2	0.2	0.1	-
제재목	449	0	21	49	263	166	0	-
단 판	-	0	0	0	0	0	0	-
합 판	299	141	141	44	0	114	0	-
재생목재	153	153	153	0	0	0	0	-
목상자	0	0	0	0	0	0	0	-
목제품	195	0	12	0	69	114	0	-
벽지	149	0	0	0	0	149	0	-
석제품	485	0	0	0	298	187	14	-
버섯류	12	0	12	0	0	0	0	-
밤	2	0	0	0	2	0	0	-
산림수 등	51	0	0	2	47	4	0	-

자료: 통일부

2000년 1월중 남북교역의 총 반출액은 18,988천달러로서 전년 동월대비 22.5% 증가하였으나, 이중 임산물 반입액은 1월중 총 반입액의 0.1%에 해당하는 15천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9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차산업 품목의 1월중 반출액은 2,369달러로 총 반출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2,347천달러로 1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임산물은 15천달러로 0.1%를 차지하였고 수산물은 8천달러에 불과하였다.

1.3.3. 축산물 교역현황

한국의 무역규모는 1999년에 수출 143억달러, 수입 1198억달러로서 총 교역액이 2,635억달러에 이르렀다. 그 중 한국의 농림축수산물 수출규모는 최근 3년간 평균치가 년 31억달러 정도이며, 주로 일본과 미국, EU, 중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은 총 교역액 기준으로 년 2~3억달러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며 이중 농업관련 교역이 약 21% 수준이다.

북한의 농업관련 교역은 수출의 경우 수산물과 농산물이 대부분이며, 수입의 경우 주로 식량인데 최근 들어 식량 관련 수입량이 다소 감소하고 에너지원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축산관련 교역은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여 확인하기 어려우나 수출의 경우는 주로 수산물을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으며, 수입하는 축산물로는 식량자원차원에서 유제품과 냉동육, 그리고 중국, 유럽으로부터의 동물성유지, 중국으로부터의 타조(22만달러 상당)등 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대 한국 교역내역은 <표 5-8>과 같은데 북한의 수출품목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나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북한으로부터의 반입 농림수산물은 주로 수산물과 임산물이며, 축산분야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현재 <표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량의 육류 조제품, 가죽 및 모피 제품 등이 반입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반출 품목내역을 살펴보면 <표5-10>과 같은데 최근 3년간 상당량의 유제품과 쇠고기가 일정수준 반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북

지원차원에서의 소, 양 등 생축의 지원여부에 따라 축산물 반출규모가 큰 변동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북한으로의 축산분야 품목의 반출내역 중에는 산 동물, 분유 등 대북 인도지원적 성격의 품목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순수 교역액으로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표 5-8 남북 교역중 축산물 반입내역

단위: kg, 천달러

품 목	1998		1999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육류조제품	-	-	4,281	13
기타 산동물	-	-	520	115
동물사료	74,940	42	7	-
새의 깃털	-	-	-	-
가죽 및 모피제품	-	-	11,593	191
계	74,940	42	16,401	319

자료: 통일부

표 5-9 남북 교역중 축산물 반출내역

단위: kg, 달러

품 목	1998		1999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우유와 크림	1,021,463	3,442	151,220	560
버터와 치즈	-	-	-	-
면양, 산양 및 소	495,330(소)	1,543	25,500(양)	90
동물사료	181,000	55	-	-
새의 깃털	14,213	141	17,034	128
쇠고기	96,571	425	417,557	856
가금고기	-	-	42,515	68
기타육류	37,203	36	809	4
동물성 유지	-	-	16,100	10
가죽 및 모피	5,785	37	10,339	125
계	1,851,6	5,679	681.0	1,184

자료: 통일부

1.4. 북한의 농산물가공산업 현황

1.4.1. 식품가공산업의 현황

북한의 식품가공 산업 현황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북한산 농산물 가공 완제품을 통하여 북한의 식품 가공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 남한에서 판매되는 북한산 농산물가공 완제품은 20여종에 불과한데, 주류 10여종, 산삼, 장뇌 가공 건강식품, 송홧가루, 금강사계 등이다. 주류 10여종으로는 장뇌산삼술, 백두산들쪽술 (백두산에서 나는 들쪽열매를 1년 이상 숙성시킨 토속주), 강계술(맛이 좋기로 유명한 북한 강계산포도와 머루를 담귀 만든 와인), 평양술(북한의 대표적 대중술), 아바이술 (묘향산에서 채집한 천연 벌꿀과 청학 청정약수로 빚은 벌꿀 소주), 선홍락성주(선홍 지방의 인삼과 천연재료로 만든 인삼주), 개성고려인삼술(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개성고려인삼주), 특급소주(평양소주, 개성소주, 용성소주, 대동강소주 등), 백두산 천지주, 역도산술, 금강홍삼술, 인풍술, 백로술, 오갈피술, 산머루술, 류경곡주가 있다.

산삼, 장뇌 가공 건강식품으로는 만년 양계론골드(북한 장수문제 연구소가 10년간의 정밀한 임상 시험끝에 지난 1992년 개발에 성공, 김일성 전 주석의 80회 생일선물로 진상했던 장생장청제, 성분은 금강산 산삼, 오봉산 삼구장청초, 평원새삼씨, 백두산 관목 더부사리, 개성고려인삼, 흰삼주 뿌리, 온새삼씨, 마른지황, 육종용, 뱀도랏열매, 백두산 풀꽃 등임), 가루지기(장뇌를 주성분으로 한 강정 건강보조식품)가 있다.

그 밖에도 송화가루(금강송 소나무 꽃가루를 그늘에서 말린 뒤 맑은 물에 띄워 이물질 제거한 뒤 건조시켜서 만든 건강식품), 금강사계 (백두산과 묘향산의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솔잎에서 추출한 기능성 천연향), 강서약수(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정화리의 암반에서 용수되는 자연산 탄산수) 등이 있다.

실제로 북한내에서 팔리고 있는 가공 식품류는 상당부분이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들로는 분말간장, 장류 등은 중국제,

과립함유 오렌지 주스, 캔 커피 등은 일본의 POKKA상표가 있으며, 북한산은 포장되지 않은 건조 옥수수 국수, 별사탕, 비스켓 등으로서 제품이 다양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내 현지 판매 및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의 종류나 품질 수준으로 보아 아직까지 농산물 가공관련 산업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한국의 식품산업 발전단계로 보면 1950~1960년대의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4.2. 임산물가공산업의 현황

북한의 산림정책은 생산목표 달성보다 조림과 원목의 실수량 증가에 있다. 따라서 임업은 펄프원료 및 산과실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사를 위한 사방, 방풍 및 수원함양 등을 위해서도 조림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원목제재는 부산물로서 목삭판(하드보드)과 목섬유판(택스)을 생산하게 되어 있으나 「7개년 계획」 이외의 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임산물 사업을 중공업부문내의 「건재공업 및 임업」과 「농촌경리속에서의 삼림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경제생활 분야를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에서 분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공업과 농촌경리의 구분은 국가직영대 협동체의 개념과 2차 산업과 1차 산업의 개념이 혼합된 것이고, 공업내의 중공업과 경공업은 임업중 산림의 보존, 조성 등에 관한 것은 ‘농촌경리’에 들어가게 되고, 수목의 벌채·제재는 시설재료 생산이므로 ‘건재공업’에 포함시켜 중공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해외 임산물 생산사업은 1956년에 북한과 구 소련간 목재벌채에 관한 체그도문 협정이 체결되어 생산원목의 30~40%에 해당하는 원목 및 제재목을 반입하는 조건으로 한때 약 1만3천 여명의 산림작업원이 시베리아 하바로브스크, 체그도문, 엔가 주변의 15개 사업소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에는 구 소련 주재 북한 벌목인부의 밀수 사건으로 1991년 말부터 벌목인부의 철수가 이루어지고 또한 매 2년마다 연장하던 협정연장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구 소련에서 반입해 오던 연간 약 150만㎃의 원목 및 제재목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북한의 사과로 이 협

정이 잠정적으로 연장되어 목재반입은 계속되고 있으나 협정이 파기될 경우 만성적인 외화부족 상태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산림과벌과 산림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1.4.3. 축산물가공산업의 현황

북한의 축산물 가공산업의 규모나 현황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식량위기로 가축사육 규모가 대폭 감소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는 축산물 가공산업 및 관련산업 또한 영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공식 비공식 보도자료나 방문객의 면담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북한의 음용 시유, 유제품, 가공육 제품 등에 관한 언급이 없고 북한 시중에서 이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아 축산가공산업은 현재 정지되어 있거나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축산물을 이용한 일부 전통요리, 민방 조제품 등의 조리가공, 또는 제조기술(단고기, 수육, 닭 육개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나뭇대로의 천연 물 약재,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여 식품이나 의약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남한 또는 홍콩 및 대만지역을 중심으로 이들 천연 민방식품이나 의약보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하여 이들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남북한 업체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장식품 가공, 피혁가공 산업 규모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타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 이미 남북간에 새 깃털 가공품의 임가공 수출 경험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북한이 축산 부산물 가공이 가능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남한 농산물 가공기업의 북한투자 의향

농림축산물가공분야 168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 기간동안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업체의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대북 투자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상업체의 92%가 북한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 투자방향이 없을 경우 그 주된 이유로 사회간접자본의 부족(16%), 정치적 불안정(13%), 투자수익 불확실(13%), 행정 비효율(8%), 외환관리 위험 부담(4%), 주거·교육·환경 열악(4%), 무응답(33%) 등을 들었다.

<그림 5-2>에서 대북 투자방향이 있다고 답변한 대상업체에 한하여 투자대상업종을 우선 순위에서 따라 선택하라는 물음에 대해, 제조업의 경우 식품가공(31%), 축산식품가공(21%), 사료제조(21%), 임산물가공(14%), 농업기계(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응답은 6%였다.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임업(27%), 축산(18%), 원예·화훼(18%), 관광농업·요식업(18%), 무응답(1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농산물가공산업의 대북투자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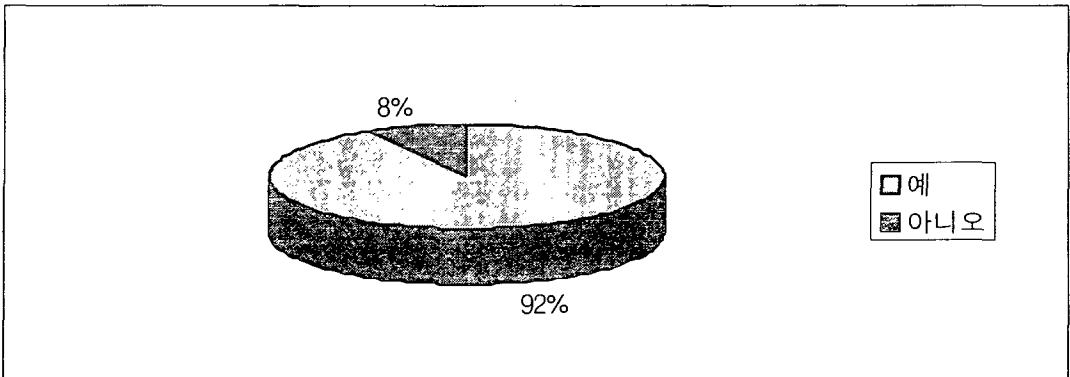


그림 5-3 대북 투자대상업종(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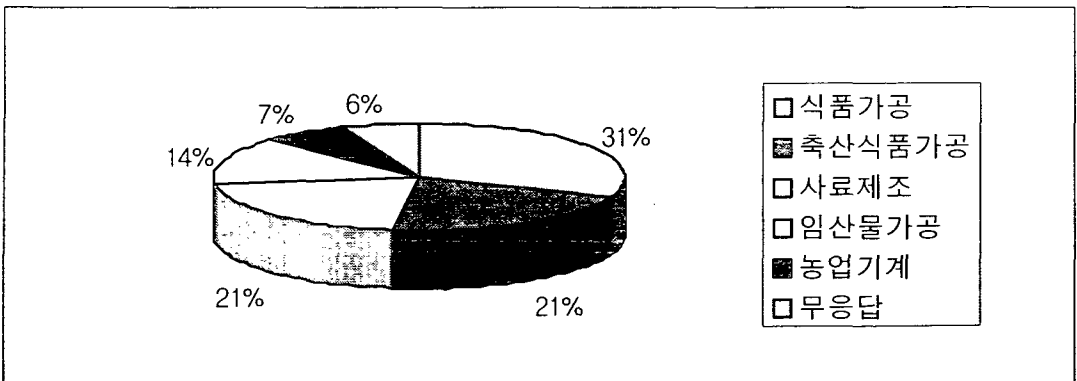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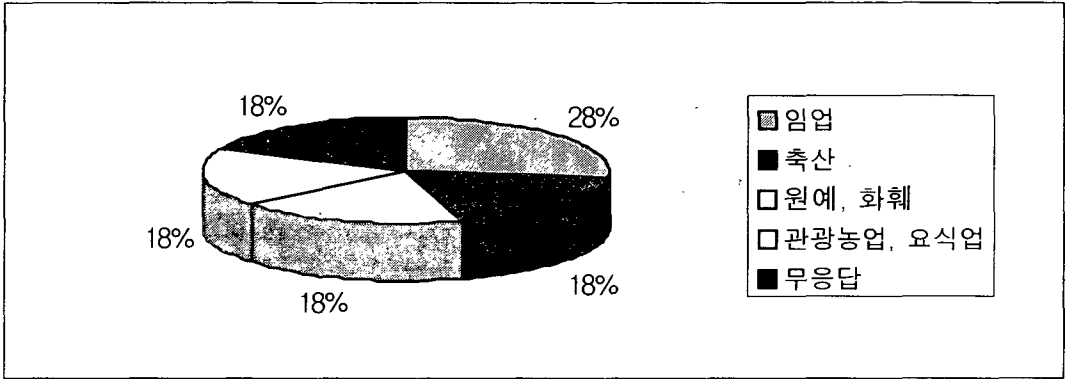


그림 5-4 대북 투자대상업종(비제조업)



제조업에 투자할 경우 그 유형이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한 물음에 중급기술 투입형(36%), 고급기술투입형(36%), 저기술투입형(27%)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계약유형으로는 완제품 생산(45%), 임가공(36%), 계약생산(18%)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투자 예상비용으로는 10만달러 이하(18%), 10만달러~50만달러(18%), 50만달러~100만달러(27%), 100만달러~500만달러(27%), 무응답(9%)로 나타났다.

그림 5-5 제조업투자시 기술투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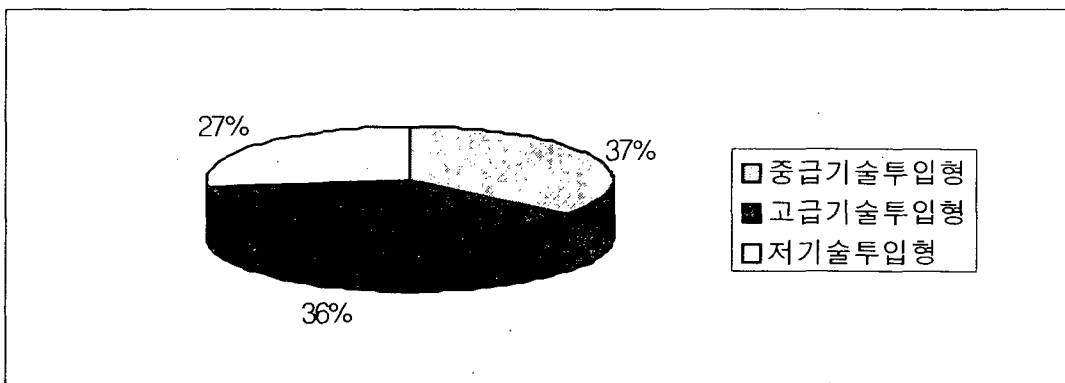


그림 5-6 대북투자시 계약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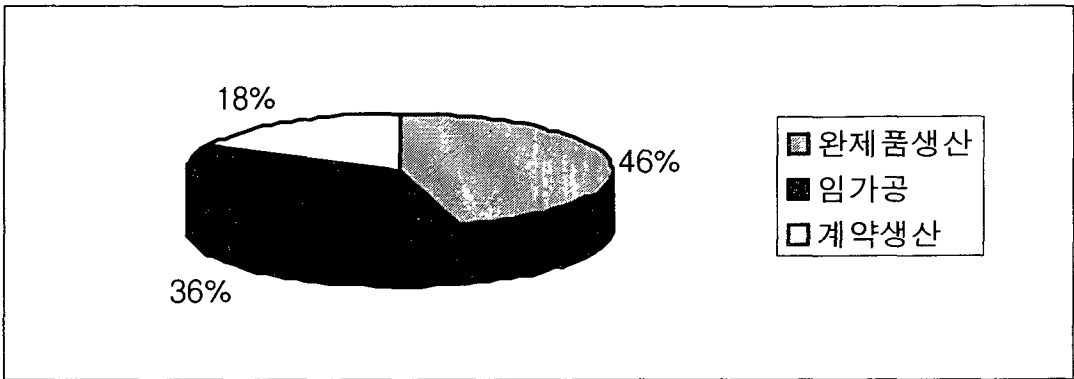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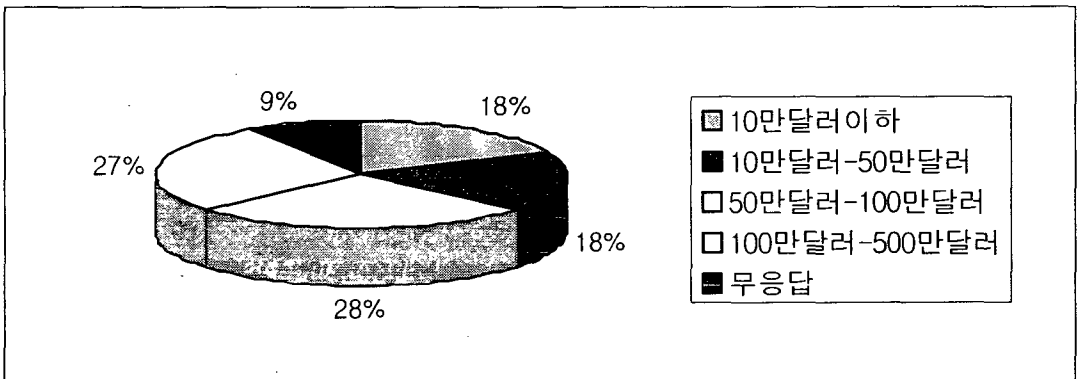


그림 5-7 대북투자 예상비용



북한에 투자할 경우 투자업종에 대한 북한의 현재 산업발전 단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산업화 초기단계(75%), 제품수출가능 단계(17%), 기술이전 단계(8%)로 답변하였다.

또한 투자업종에 대한 소유권 관계설정 유형에 대한 물음에 임대 및 구입 혼합 형태(45%), 장기임대(36%), 초기 임대후 구입(18%)로 답변하였다.

북한에 투자할 경우 각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물음에 대해, 북한정부로부터는 건물 및 부지(41%), 안전보장(23%), 사회간접자본(18%), 행정절차(9%), 외환 및 수익관리(4%), 기타(4%) 등을 지원 받고자 하였다. 또한 남한정부로부터는 재정(41%), 세제(32%), 사회간접자본(9%), 외환 및 수익관리(9%), 안전보장(9%) 등을 지원 받고자 하였다.

그림 5-8 투자업종에 대한 북한의 현 산업발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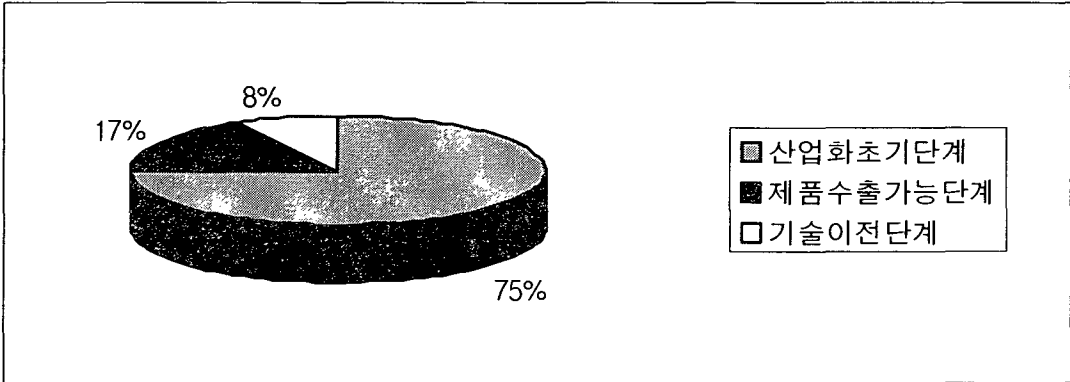


그림 5-9 투자업종에 대한 소유권 관계설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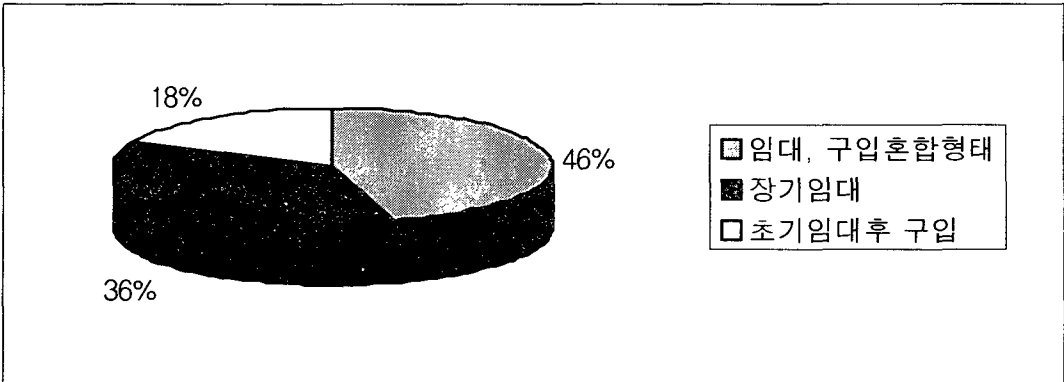


그림 5-10 대북투자시 북한정부에 대한 지원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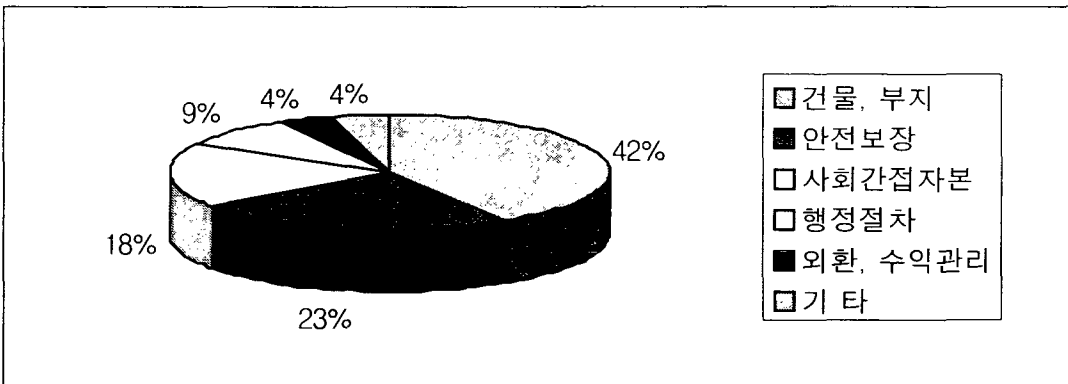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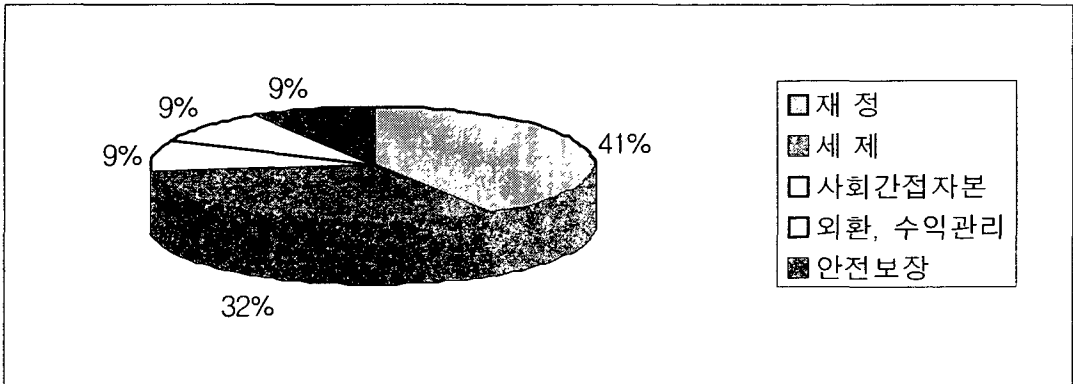


그림 5-11 대북투자시 남한정부에 대한 지원요구사항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점을 선택하라는 물음에 대해 수송 및 운송(41%), 저장·유통망(23%), 공단·산업구역 지정 및 조성(13%), 통신·정보망(13%), 주거·교육환경(9%) 순으로 답변하였다.

북한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동북아 시장잠재력(27%), 저임금(27%), 원자재 및 부품조달의 수월성(23%), 북한의 요구(5%), 낮은 지가(5%), 외자유치계획(5%), 기타(9%)로 조사되었다.

북한 투자를 희망할 경우 투자의 적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남북협력 활성화 이후(55%), 북한이 시장경제원리 도입시(36%), 현재(9%)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대북투자의 실현가능 년도에 대해서 대상업체의 91%가 2001~2005년 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림 5-12 대북투자의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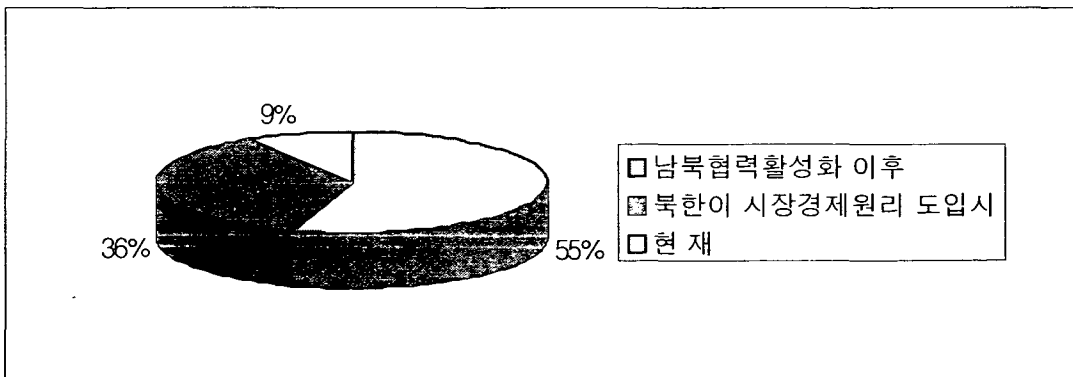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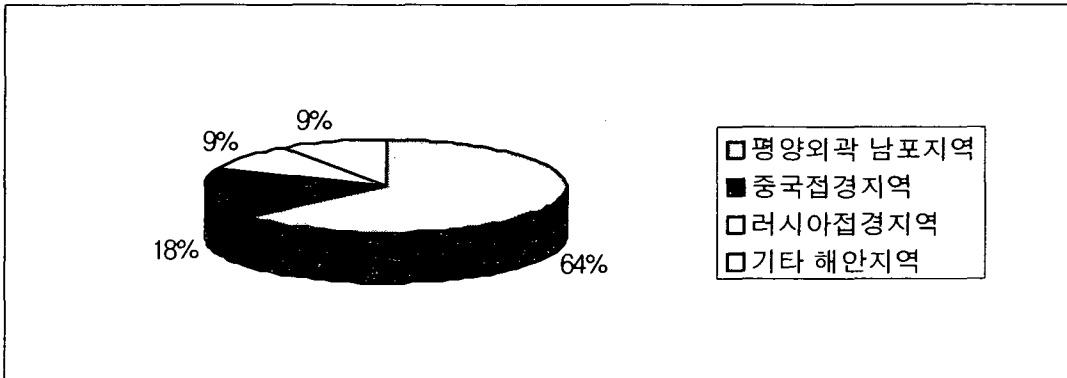


그림 5-13 대북투자 희망지역



북한에 투자할 경우 투자에 필요한 용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1,000~5,000m² (27%), 5,000~10,000m² (27%), 10,000~50,000m² (27%), 50,000m² 이상(9%), 무응답(9%)으로 조사되었다. 북한내 우선 투자 희망지역으로는 평양외곽 남포지역(54%), 중국 접경지역(15%), 러시아 접경지역(8%), 기타 해안지역(8%)로 나타났다. 북한 투자시 투자할 시설 및 기계로는 신규시설(55%), 자회사내 기성 유희시설(29%), 타회사의 기성 유희시설(9%), 기타(9%)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 의견으로는 북한에 투자할 대상산업의 통계 및 정보가 절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농산물 가공산업의 남북한 협력방안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협력 활성화 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농산물가공산업의 북한진출 가능성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낮은 생산성과 에너지 부족, 열악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연중 내내 가공공장을 가동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남한의 농산물가공산업이 북한에 진출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품목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취지는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발전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품목 및 협력규모 결정시에는 현실성과 수익성에 현실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미래 발전가능성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의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나 국제기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 분야별 계약 사업을 재조명해 보고, 보다 규모화·선진화된 가공산업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가공산업을 북한과 협력 할 때, 협력의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사업의 활성화로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민족적 차원에서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1. 농산물가공산업의 구조개편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시 농산물가공산업의 구조개편은 첫째, 남북협력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반도 전체 농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별·품목별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한다. 둘째, 남북한 상호보완적인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수직적·수평적 분업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남북한 입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셋째,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목표로 선 계획·후 개발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가공산업입지와 관련된 난개발(개별입지 등),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적 특성, 원료 및 소비시장과의 접근성, 경제성 여부를 고려한 점진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추진 등이다.

남북한 농산물가공산업의 구조개편은 농산물가공산업 협력 초기단계, 성숙단계, 완성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반가공 또는 낮은 단계의 단순가공산업 유희설비를 중심으로 북한이전을 도모한다. 중장기적으로 남한의 기술인력 및 설비이전, 북한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때 비용구조, 분업구조, 국제경쟁력 구조 등 변화요인을 고려하며,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특화 추진하고, 남한 농산물가공산업 발전 모형의 북한지역에의 접목을 도모하여 공간 및 부문간 균형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3.2. 농산물가공산업의 품목선정

북한에서 가공하는 것이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품목의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의사를 확인한다. 이 때 향후 남북한 협력 가능성이 가장 큰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쌀, 감자, 인삼, 축산물(오리, 흑염소 등), 임산물, 담배, 참기름, 김치가공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북한과의 협력 가능품목으로는 1차 산업과 관련된 것과 농림축산물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가령, 김치공장은 농업생산과 직결되므로 관심분야가 될 수 있다. 농업생산 측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은 고랭지작물 재배에 유리하므로 해당작물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농가소득 관련 품목 및 농업기술 측면에서 북한이 우위에 있는 품목을 선정한다. 또한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북한이 낙후되어 남한기업이 북한의 대상 업체와 협력시에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송이버섯 포장가공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3.3. 농산물가공산업의 가공방식

북한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중국산 원료를 북한에 들여와 가공하여 외국에 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치가공산업에서 자본과 기술은 남한이, 원료생산과 가공은 북한이 맡고 교통망이 편리한 경의선 부근에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된 제품 중 일부는 북한에서 판매하고 일부는 타국가로 수출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남한으로 반입하는 방법이다.

이때 북한의 자본과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가공산업 계약시 품목에 따라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의 생산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및 위탁재배 등 농산물생산에서의 여러 협력사업을 연계한다면 농산물가공산업 협력을 활성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산업은 필수적으로 유통과 수출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남북한 농산물유통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4. 단계별 대북 협력방안

표 5-10 남북한 농산물가공산업의 단계별 협력방안

단계	협력방안	추진사업
초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농산물가공산업의 협력 분위기와 제도적 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재, 분쟁 조정절차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함 - 남한기업은 잠재적 이익에 현혹된 북한특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함 - 북한의 지속적인 개방 및 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업종 특히 남한, 미국, 일본으로의 수출경쟁력이 큰 가공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농산물가공업체 기술 및 경영지원 투자사업 · 남북한 전통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사업 · 대외수출 경쟁력 강화
성숙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단계에서는 협력초기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한 가공산업 등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둠에 따라 주요 가공산업단지의 규모 확장은 물론 교류협력이 질적·양적으로 더욱 확대·제고되는 시기임 ○ 또한 남북은 더욱 상호분업적이고 의존적으로 친밀해 지는 단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추가로 경제특구를 포함한 가공산업 단지를 확대·조성함 - 남북한 동일가공산업간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구조를 구축하며, 소득탄력성이 높은 가공분야를 북한지역에 본격적으로 입지함 - 남한은 북한의 가공산업발전을 계속 지원해 가면서 아직까지 봉쇄되었던 기타 가공품목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여 남북간의 농산물가공산업 교류·협력을 완전히 개방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농산물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사업 · 남북한 가공산업의 공동 브랜드 및 공동판매체제 구축사업 · 남북한 농산물가공업체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사업 · 수출가공산업 육성
완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기본이념으로 가공산업 입지 개발과 가공산업구조를 재정비하고 남북 균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개발투자사업 · 핵심기술개발투자사업 · 친환경 가공산업단지조성

3.5. 분야별 대북 투자방안

3.4.1. 농산물가공산업의 대북 투자방안

식품산업의 매출액은 전체 식품업체 중 0.03%에 해당하는 20여개 기업에서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금력과 영업능력을 보유한 대기업 군의 북한 진출은 커다란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 될 수 있다.

북한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 산업에는 대기업보다는 가공분야가 뚜렷한 소규모의 농산물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의 경우 자금력, 북한 진출과 관련한 협상력 및 추진력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농산물 가공산업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다양한 가공식품의 생산과 더불어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능률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국내에 반입된 제품으로부터 판단하면 소품목의 원시적인 가공정도가 이루어 질 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제조설비나 기술력을 이용하는 가공산업의 진출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북한만이 가지는 특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갖는 특성을 반영한 제품들로는 발달한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제품, 많은 산간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제품, 신선제품 이미지를 갖는 산채, 특산물 가공품,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가공제품 및 수입대체 품목 등이 있다.

가. 호프 가공공장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호프 국산화의 일환으로 국내의 맥주 제조업체인 두산과 조선맥주에서 생산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재배면적이 급감하여 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호프는 한냉하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재배적지이다. 우리 나라 최초의 재배는 1934년부터 개마고원 부근의 함경남도 혜산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남한보다는 북한의 재배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다.

호프를 맥주 양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공이 필요하다. 호프의 가공에는 건화 가공, 파우더 가공, 펠렛 가공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 중 파우더 가공 특히 펠렛 가공의 경우 이에 필요한 시설의 투자가 필요하다. 건화 가공은 꽃을 그대로 말린 것으로 저장 과정중 품질의 저하 및 부피가 커서 수송에 문제가 있다. 파우더 가공은 건화 가공에 비하여 부피가 줄어들어 수송상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되나 저장중 품질의 저하가 계속되며 양조 공정에 투입시 분진의 발생이 문제가 된다. 펠렛 가공은 파우더 가공보다 부피를 감소시켜(파우더의 1/4~1/6) 포장과 운반비를 절감 가능하며 따라서 저온 저장고의 규모도 작아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저장중 품질의 저하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호프 산지에서 펠렛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호프의 개략적인 펠렛 가공 과정은 건화 →(압축) → 호프 파우더 → 냉각 → 체인 컨베이어 → 펠렛 탱크 → 계량 → 질소 충전 → 포장 → 출하이다. 이 과정을 완전 자동화 할 수도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적으므로 생산 현장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반자동화 공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생산된 호프의 가공전후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분석시설도 북한 생산 가공 현지에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호프의 품종이나 재배기술, 그 이후 가공기술이나 시설을 남한의 업체가 투자하고 북한이 토지와 생산 노동력, 재배 관리를 담당하는 협력 방식을 도입하거나, 전체 투자 후 계약 재배로 위탁 생산하는 협력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산삼, 장뇌가공 건강보조식품

북한은 한의학을 바탕으로 많은 종류의 건강 보조 식품을 생산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식물성 원료를 채취하여 식품으로 개발하였다. 북한에서 사용하는 식물성 원료로는 산삼, 오봉산 삼구장청초, 평원새삼씨, 백두산 관목 더부사리, 개성고려인삼, 흰삼주 뿌리, 온새삼씨, 마른지황, 육종용, 뱀도랏열매,

백두산 풀꽃, 장뇌, 송화가루 등이 있다. 적은 설비 투자로 가능한 가공품의 주된 형태는 기능성 차, 리큐르, 기능성 음료, 선식 또는 생식 완제품, 농축액, 캡슐 봉입 제품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요설비로는 추출기, 농축기, 건조기, 분쇄기, 병입기, 타정기 등이 있다.

다. 메밀제분 및 면류 가공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 메밀이 남한으로 반입되고 있으나 수확 후 저장상의 문제, 이물질의 혼입 등 품질이 고르지 않아 중국이나 기타 외국산에 비하여 선호도가 낮은 실정이다.

메밀제분 가공에는 막대한 설비가 필요치 않으므로 소규모의 가공공장 형태로 다수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생산현지에서 제분, 가공함으로써 제품의 고급화 및 부가가치 부여가 가능하다.

최근 북한과 교류의 폭이 넓어지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는 냉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냉면의 원조는 역시 북한이라는 등식 아래 북한산 마른 냉면에 대한 선호도도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의 메밀제분 공장에서 생산된 메밀가루를 마른 냉면가공으로 연계하여 생산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라. 청정제품, 신선제품 이미지의 산채가공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GMO 식품의 유해 논란으로 안전한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의 외화난과 에너지난으로 인해 농약의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북한전역이 청정지역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산 농산물의 청정 이미지를 최대한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가공제품의 생산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무공해 천연식품이란

관점에서 산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재배되는 산채가 생산되기도 하나 자연에서 채취된 산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북한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많은 종류의 산채가 대량 채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채는 신선한 상태로 반입하기 곤란하므로 데친 후 건조하는 가공 형태가 필요하며, 주요 설비로는 건조기, 포장기 등이 있다.

3.4.2. 임산물가공산업의 대북 투자방안

임산물가공산업의 남북 협력분야는 단기적으로는 관상수 생산사업, 송이 등 임산부산물 채취가공사업 등이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사업으로는 소경재 및 폐목질 자원의 이용사업, 저비용 펄프제지사업, 목재추출성분으로부터 고기능성물질의 개발사업의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가. 단기사업

1) 관상수 생산사업

관상수는 양질의 노동집약관리가 필요한 업종이며,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남한의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과 기술을 접목할 경우 소득 창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남한의 경우 주요 관상수로 가문비나무류, 개나리, 곰솔, 팥나무, 구상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동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모과나무, 목련류, 무궁화나무류, 무화과, 배롱나무, 버즘나무류, 벗나무류, 사철나무류, 섬잣나무류, 소철, 연산홍, 은행나무, 잣나무, 장미, 전나무, 조팝나무, 종려나무, 주목, 쥐똥나무, 철쭉류, 측백나무류, 치자나무류, 팔손이, 편백나무류, 향나무류, 화백나무류, 회양목, 후박나무, 히말리야시다 등 연간 1억 5천만분을 생산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남한에서 관상수로 사용하고 있는 수종중 북한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한 가문비나무류, 개나리, 곰솔, 구상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리기다소나무, 목련류, 무궁화나무류, 버즘나무류, 벗나무류, 섬잣나무류, 은행나무, 잣나무, 장미, 전나무, 조팝나무, 주목, 쥐똥나무, 철쭉류, 측백나무류, 향나무류, 회양목 등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여 반입하도록 한다. 따

라서 관상수 묘포조성에 필요한 종자 및 재료,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료 등을 남한이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과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임산부산물 채취가공사업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연산 임산부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식품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자연산 임산부산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급은 전통적인 인력채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물량이 적으며, 농산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공급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송이, 들쭉, 도토리, 호두 등 북한에서 채취된 임산물에 대한 가공, 상품화 및 판매 업무를 남한기업이 담당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년도에 북한에서 반입한 주요 임산물은 호두, 고사리, 도토리, 나무젓가락, 표고버섯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식용(고사리, 참나물, 고비, 더덕, 두릅, 도라지, 도토리, 고추나물, 참취, 기름나물, 송이), 약초(산삼, 만삼, 족두리풀, 참당귀, 삼주, 오미자, 삼지구엽초, 당귀, 참당귀, 땃두릅, 천남성, 함박꽃, 독뿌리풀), 유지식물(생강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가래나무, 분지나무) 및 산과일(밤나무, 다래, 머루) 등에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중·장기사업

1) 소경재 및 폐목질자원의 고도이용사업

남한의 목재산업의 문제점은 목재생산의 70%가 간벌작업에서 얻어지는 소경재이므로 그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목재사용량의 약 85%를 수입재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된 공급과 수입원가의 상승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경재와 년 570만 m³에 달하는 목재폐기물의 효과적인 활용사업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재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경재 및 목질폐잔재를 이용한 슈퍼목재(포르말린

화목재, 아세틸화목재, WPC, 세라믹화목재, PEG처리 목재 등) 개발사업과 엔지니어링목재(파티클보드, 집성재, OSB, MDF, LVL, PSL 등)에 관한 개발사업 등이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국내산 소경재의 활용방안 제시, 국내산재와 수입재의 재질 비교로 대체재의 가능성 평가, 목질신소재의 개발로 고부가가치의 재료 개발,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국가경쟁력 강화, 소경재와 목질폐잔재의 이용기술개발로 간벌작업의 보편화, 임지내 폐잔재의 유효활용 및 임지의 청결유지 등이다.

2) 저비용 펄프제지사업

현재 남한의 지류생산량은 약 770여만 톤에 달하여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소비량도 일인당 170kg에 이르고 있으나 펄프의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펄프가격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북한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중국의 목재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남·북한의 펄프·제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재 남한의 동해펄프와 같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펄프를 공급하는 것과는 달리 건식 펄프에서 바로 파이프를 연결하여 종이를 제조한다. 특히 화학펄프를 많이 사용하는 고급지보다는 기계펄프나 소량의 화학펄프를 사용하는 신문용지와 같은 지중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북한과 근접한 중국의 임산자원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운반할 수 있어 남·북한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펄프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북한에 산재해 있는 인적자원을 이용하고, 남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펄프·제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3) 목재추출성분으로부터 고기능성물질의 개발사업

남한의 임산관련 산업은 주로 물리, 기계적인 1차 가공분야에 치중하여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외국산 수입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임업분야도 첨단

과학기술과 생물공학기술을 응용한 목재가공 분야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임산공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 수목의 추출성분을 분리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구조규명을 실시하며, 생리활성 및 약리효과 검정에 의하여 천연 항균성 물질이나 천연 항산화성 성분을 분리하여 이를 신기능성 약제의 개발에 응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를 통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수목의 추출성분으로부터 고기능성물질의 개발, 추출성분의 분리 및 분석(후라보노이드, 테르페노이드, 쿠마린 등), 추출물의 약리효과 및 효능 실험(항산화, 항충 및 항균, 약리효과 등), 수목의 추출성분을 이용한 제품개발(엑기스, 음료 및 차, 농약, 알약 등) 등이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남·북한에서 자생하는 목재로부터 새로운 화합물 발견, 목재의 고부가가치화, 목재 수피 및 목질부, 수피 등의 완전 이용화, 새로운 고기능성 항충, 항균, 항산화 등의 약제 개발, 새로운 고기능성 보조식품 개발 등이다.

3.4.3. 축산물가공산업의 북한과의 협력방안

남북한 축산물 가공산업의 교류협력은 <표 5-11>에서와 같이 그 발전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남한의 대부분 축산관련 산업의 경우 그 발전추세가 둔화되고 있거나 수익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시장개척, 생산 방식의 다각화,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을 도모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정상적인 자원 순환에 필요한 축산뿐 아니라 국민의 영양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축산식품의 소비가 필요하다. 최소 수준의 국민 건강유지를 위하여 북한에 필요한 육류 및 유제품 소요량은 연간 고기 20 만톤, 우유 7만톤 정도인데 현재 북한 자체의 생산능력은 고기의 경우 8~9만톤, 우유의 경우 3~4만톤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어 소요량의 50~60% 가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남한의 축산관련 산업이 겪고 있는 애로점을 북한의 잠재력을 이용

하여 해결하고 남한의 축산업계가 협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으로서도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기존 농업생산에 의한 식량 공급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북한 간 축산분야의 주요 산업별 특성을 도출하여 보면 <표 5-11> 과 같은데 각 분야 마다 나름대로의 협력의 가능성이 실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협력의 방향도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축산 전 분야에 걸쳐서 남북간 산업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 보다 우선 북한의 여건상 대응 협력이 가장 유리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의 단계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식량수급 차원에서의 북한 축산업 발전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축산물 소비촉진은 북한으로서 그 추진 우선 순위가 낮아 북한 대응업계의 적극성이 낮을 것이다.

표 5-11 축산관련 산업의 북한투자, 교류협력의 잠재력

남 한	북 한
축산업 포화 농후사료 자원 수입과다 조사료자원 수입(중국, 캐나다, 미국) 분뇨 처리문제 포화 축산물 수급안정(수출가능)	축산업 유치필요 - 유기질 비료 필요 - 조사료생산 잠재력 존재 - 토양 피복작물(목초) 필요 - 국민 영양상 축산물 공급 필요 - 중국 동북3성 곡물수입 유리
축산관련산업 담보 - 고임금으로 수지타산 감소 - 환경 위해성(피혁, 신발, 도축) 논란 - 축산식품 고급화 필요 단계 - 부산물 활용처리 문제 - 가공기계, 기반시설산업 담보	축산관련 산업 유치 필요 - 저임금 노동력 풍부 - 위해 산업의 계획유치 가능 (예: 중국, 동남아) - 축산식품 보급필요 단계 (남한의 현 기술 이전가능) - 부산물 활용처리 유리 - 축산식품의 대 중·러시아 수출유리 - 남한의 가공기계·시설, 냉장냉동 산업 동반발전 잠재력 막대

또한 일부 축산관련 산업의 경우 질병검역 문제, 환경오염 문제, 도축문제 등으로 업계의 실질적 협력이 성사되기 이전에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다.

그밖에 다량의 배합사료, 생축 및 종축 이동 등 물류 운송과 직결된 산업의 경우 산업도로나 운송시설 해결이 실질협력의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축산업이나 축산물 가공산업의 경우 남북간 체계적이고 점진적 교류 협력 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질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단계별로 축산분야 교류협력방향을 제시하여 보면 <표 5-12>와 같다. 우선 남북한간의 신뢰회복 및 적응이 필요하고 그 후 축산기간시설 투자 및 생축 사육투자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축산업의 효율적인 교류 협력이 성공할 경우 향후 축산관련 생산물 및 가공제품의 대 중국, 대 러시아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우선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신뢰회복과 산업적 협력의 적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산업을 예시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우선 북한의 협력여건이 우수한 분야로서 전통축산식품 가공산업, 조사료 생산업, 피혁 및 깃털 가공업을 들 수 있다.

가. 전통 축산식품 가공

전통축산 식품이란 축산물과 천연 약재를 이용하여 전통의 조제비법으로 생산하는 식품을 의미하는데 최근 우리나라 및 동남아에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전래의학을 고려의학이라는 이름아래 계승 발전시켜 독보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천연약품 및 식품소재의 개발과 활용에도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축산식품 재료를 남한측에서 조달하고 북한의 천연재료와 조제비법 및 기술을 활용한 민방전통식품을 북한에서 생산하여 남한으로 도입 판매하는 방식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표 5-12 현재 남북한 축산분야 산업별 특징

산업분야	남한	북한
유생산	과잉생산, 분유적체 사육두수 감소 추세 조사료 부족	유생산 기반 약화 종축확보 난점 조사료 생산기반 존재 우유, 유제품 필요
한우	고급육으로 전환 소 사육기반 감소 밀소 사육기지 필요 양질 조사료 부족	종축 확보 필요 양질 조사료 생산가능(기후) 양질 조사료 수출 유리 (물류이동거리)
양돈	돼지사육기반 포화 격리사육필요 배합사료 수출유리(거리) 우수종돈 확보	종돈 확보 필요 격리사육 가능
채란계	달걀생산 포화→난가하락 종계, 부화시설 포화 양질사료 생산가능 달걀소비 적체	종계, 부화시설 부족 채란계 유희시설 잔존 양질사료 부족 달걀소비 필수
유가공	유가공시설 포화 유제품소비 적체 음용유 수출 유리(거리)	유가공산업 부재 유제품 소비 필수 재구성유 생산시설필요
육가공	육가공시설 포화 가공육제품 소비 정체 과잉 육류 가공가능	육제품 소비필요 유통거래시설 미비
사료산업	배합사료생산시설포화 배합사료 생산량 감소추세 배합사료 생산 기술 확보 노동집약적 생산기술 퇴진	배합사료 생산시설 노후 및 부족 양질의 배합사료 절대부족 배합사료 생산기술 부족 노동집약적 배합사료 생산가능
원료사료 산업	주요원료인 곡류, 유실류 대부분 수입 조사료 자원도 부족-수입 산야초자원이용 불가능	조사료 생산 필요→토양, 토질보존 조사료 수출 유리:거리 원료곡류 육상도입 유리(중국인접) 노동집약적 산.야초자원 수거가능
피혁제화 산업	노동집약, 환경오염산업으로 퇴보 상태 피혁가공기술 축적 피혁가공시설 포화	노동력 풍부 환경제어가능 유희시설 유치가능(거리, 경제성)

현재 남한의 소비자가 선호하는 비닐 팩 포장형태의 제품이 유통이나 이용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나 장기유통에 적합한 멸균이나 살균을 거쳐야 하며, 또한 마케팅에 필요한 품질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포장이나 품질관리, 위생 처리시설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북한이 자체 생산한 축산물을 활용하는 방식도 도입할 수 있으나 북한자체의 축산물이 대부분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원가절감보다는 엄선된 품질이나 안전성 측면에서 원료수급 방식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엄선된 축산물을 주재료로 하되 들쭉이나 북한지역 고유의 천연재료를 활용한 보약성격의 제품이 상품성이 클 것이다. 그러나 보존이나 Cold Chain 체계가 구비될 경우 캔 또는 비닐 포장된 즉석요리 형태의 북한 전통 축산식품(평양 단고기, 육계장)을 제조하여 남한의 식품 슈퍼마켓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조사료 생산업

현재 남한의 경우 조사료 자원이 부족하여 캐나다나 중국으로부터 목초는 물론 야생 건초, 볏짚까지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수입 야생건초나 볏짚의 가격결정 요소 중 가장 큰 것이 운반거리이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에서 남한이 필요로 하는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남한의 업계가 지급하는 교역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토질과 기후 측면에서, 또한 목초를 재배하는 노동력 수급측면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토지나 산지를 활용한 목초재배는 북한 토양의 비옥도와 보습력을 증진시키고, 표토 유실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크고, 목초의 판매는 동일토양에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것 보다 더 큰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남한으로서도 운송거리가 가까워 양질의 목초를 국제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서 초식가축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된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깃털 및 피혁 임가공업

깃털이나 피혁 가공산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비와 양질의 노동력이 국제 경쟁을 좌우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피혁가공이나 깃털 장식 가공산업 분야에 축적된 기술과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고 국제시장에 고급의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은 이 분야에 저렴하면서도 중국이나 동남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깃털이나 봉제가공 분야에서는 이미 남북간 임가공 생산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이

표 5-13 남북간 축산분야 교류협력 발전단계

발전단계	사업내용
신뢰회복 및 적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종축 공급사업 · 조사료 생산 사업 · 가축질병 공동방역 사업 · 북한형 영양 혼합 육제품 가공업 · 재구성유 생산 사업 · 시범목장 조성사업 · 피혁제품 가공사업 · 배합사료 수출사업 · 어분생산사업 · 환경 처리 사업
시설투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축산 사업자 유치(승마, 요식업등) · 대규모 가축사육기반 이전 · 중국 곡물 수입 및 활용사업 · 사료 공장 시설 이전 및 유치 · 도축시설, 육가공 시설 유치 · 육가공시설, 시유 처리시설 유치
축산물수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육 및 돈육가공제품의 대중. 대러시아 수출 · 고급 쇠고기(냉장육)의 대중. 대러시아 수출 · 배합사료산업의 동북3성 진출

제품 디자인, 원자재 구매, 신기술 제공 등을 담당하고 북한에서 생산·가공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국제시장에 다시 경쟁력 있는 고급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북한 농업유통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

첫째, 북한에서의 유통은 단순한 중앙계획적인 공급행위이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은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시설 및 인적자원을 포함한 유통자원 배분의 심한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유통이 자율적인 시장가격기구에 근거한 소비자의 욕구를 생산에 반영시키지 못함에 따라 농산물의 수요측면이 자율적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물선호 성향이 생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급속한 공식 유통체계의 붕괴와 비공식 생산량 및 유통량의 확대이다.

넷째, 공식적인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공급량의 부족과 유통체계의 붕괴는 농산물의 배급체제 하에서 계층간·지역간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을 심화

시키고 있다.

다섯째, 농민시장과 암시장 유통의 확산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이원화와 유통질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유통시설의 부족과 불합리한 배치, 이용의 제한성 및 시설의 낙후성 등이다.

일곱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입장에서 본 북한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으로 물류시설의 부족과 미비로 낮은 물류효율성을 들 수 있다.

□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방향

가. 단기·중기적 개선방향

첫째, 농민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우선적인 사업은 소비지시장과 산지시장의 활성화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여건을 단기간 내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시장규모 및 시장수 확대 건설과 함께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시장 활동의 공개적인 조성을 위한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한 상업 관행을 유도하고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형태의 시장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거래지침, 시장시설의 사용, 상인등록, 조세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농산물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민시장 등 기존의 시장뿐만 아니라 각종 도매소와 소매소 등의 기존 유통망과 담당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셋째, 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산지와 소비지 시장의 확대건설과 함께 중요한 것은 산지 유통시설 특히 각종 물류시설의 개보수 및 신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다섯째, 단기적인 농산물유통 활성화 대책과 함께 장기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과약을 위한 농산물유통에 대한 총조사 사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의 활성화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율의식 및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단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중장기 유통체계 개선방향

첫째, 농산물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각종 형태의 유통시설 확충이 중요하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중소도시에 생산자단체와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공판장, 물류센터 등의 건설을 유도한다. 즉 도매시장은 평양과 직할시 등에 3개정도의 대규모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고,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제3섹터 형식이나 민영도매시장의 건설을 적극 유도한다.

둘째, 시장경제체제에의 조기적응과 산지 유통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산지에 시범적 유통주체와 유통시설을 육성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농산물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통조성기능의 활성화와 물류시스템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넷째,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홍보활동도 계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농업유통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

□ 남한 유통체계의 적용방향

남북한 농산물 유통부문 협력을 통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적응되어 있고, 유통하부구조 측면에서 유리한 남한의 유통정책이나 모형을 북한에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남한의 농산물 단계별 유통체계와 유통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유통부문 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남한 유통

산업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수많은 유통정책 중 정책효과가 우수하고, 정책추진상 장애요인이 많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책 중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 하에서 가장 수용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여 협력사업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모델은 최소의 비용과 시행착오로 협력사업을 통해 최단기간에 북한 유통체계를 남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남북협력사업의 적정 모형

남북한 농산물 유통분야 협력사업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은 크게 추격형(catch-up)모형과 도약형(leapfrog)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의 농산물 유통부문에서 남북한간의 차이는 경제체제의 차이뿐만 아니라 발전수준도 큰 격차가 나고 있다. 남북한의 격차를 고려하면 유통부문 협력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모형은 추격형보다는 도약형모형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유통분야 남북협력사업의 추진방향

첫째, 산지 및 소비지에서 충분한 거래공간을 확보하여 생산의욕과 유통참여의욕을 높이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둘째, 소비지의 원활한 농산물 공급체계 조성을 위한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을 들 수 있다. 셋째, 수송, 저장, 가공 등 유통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하부구조 개선사업 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유통조성기능에 대한 협력사업이 매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초기 정부차원에서의 유통부문 협력사업은 현재의 남북한 사정으로 미루어볼 때 일방적인 지원성 협력사업이 되기 쉬울 것으로 전망되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유통부문의 협력사업은 선별적 프로젝트 중심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지원·협력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일방적인 남한정부의 지원성 사업은 협력사업이라기 보다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협력사업이 진전되면 상호 투자·협력하는 사업형태로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상호투자 협력방식이 협력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이다. 또한 농산물 유통부문에서의 협력은 유통부문 독자적인 협력보다는 농업 생산과 유통분야의 협력사업이 연계되어야 전체 농업부문 협력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협력사업의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농산물 유통분야 협력사업의 기본원칙은 협력사업분야 다변화 원칙, 점진성 및 일관성 원칙, 정부 및 민간주도의 적정 배분 원칙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력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정부주도 또는 민간주도의 협력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남북한 농업유통부문 협력방안

□ 남북한간 농산물 교역 활성화

가. 계약재배를 통한 북한농산물 반입 확대

1999년 주요 국영무역농산물품목은 참깨, 팥, 콩, 녹두, 메밀 등이며, 이들 품목은 수요량에 비해 국내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산 농산물 반입품목 선정은 국내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극히 부족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품목중 북한으로부터 반입이 가능하고 또한 국내농가에 대한 피해가 적으면서 북한 농업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간 북한산 농산물 반입실적과 대북한 교역업체 대상의 조사(유통공사 실시) 결과에 의거 선별한 반입 가능 북한산 농산물 품목으로는 승인품목에는 참깨, 팥, 콩(콩나물콩), 녹두, 메밀 등이며 반입자유품목에는 강낭콩과 호두이다.

나.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추진방안 :

계약재배 품목 및 수량 : 최근 남한의 주요 국영무역 농산물 품목의 수급

현황과 북한의 농업생산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과 참깨, 팥, 콩(콩나물콩), 녹두, 메밀, 땅콩 등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급 및 가격조건 등에서 가장 유리한 팥과 참깨의 2개 품목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차츰 녹두, 콩 등 기타품목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계약재배의 추진 주체 : 현재 북한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대북한 농산물 계약재배사업은 단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계약재배 경험이 있고 현재 농산물의 국영무역을 관장하며 북한농산물 반입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담하되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추진절차 및 검토사항 : 사전검토와 실무협의, 협력사업자 승인 신청, 현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협력사업 승인 신청, 계약재배를 위한 납측 분담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약재배 실시 도중에도 현지도도를 해야하며, 검사·반입·판매 등 생산물의 처리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계별 세부검토 사항 : 계약가격, 추진방식, 현장확인 및 기술지도, 품목별 재배 면적, 영농자재의 공급시기 및 방법 결정, 영농자재의 보관방법 및 투입 확인방법, 품목별 선적시기 및 반입시기, 생산물의 현지검사 및 반출입 방법, 생산물에 대한 품목별 품위 및 검역검사 기준 설정, 현지 수확·선별포장·보관관리 기술지도, 품위 및 중량에 대한 선적지 검정, 클레임 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이다.

재원확보방안 : 계약재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부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 받은 수확물을 반입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상환하도록 한다. 반입농산물의 판매대금이 투입 비용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에 불입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서 보전토록 한다.

□ 북한산 농산물 수출지원

가. 추진방안

북한농산물 중 비교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남한과 경쟁 관계에 있지 아니한 품목을 중심으로 가공이나 포장기술을 지원하고 동시에 홍보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을 구비한 북한 농산물에는 송이버섯, 호두, 잣, 약재류 등이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남한이 박람회를 통해 우리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수행할 때 북한산 농특산물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북한산 농산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다. 둘째, 해외박람회장내에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남한 농산물과 병행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북한농산물 소개 및 거래알선이다.

□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첫째는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보관 및 선별·포장작업에 필요한 간이저장고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수확한 농산물을 생산농민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농민시장의 시설을 지원하여 시장경제 확산 및 농가 자산 축적 여건을 조성한다. 농민시장의 지원대상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500평 규모를 기준으로 설치하되 시장 내 거래실적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간이저장고와 농민시장은 각 시·군(구역)에 1개소씩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209개이며, 시장규모에 대해서는 1차년도는 500평 규모로 설치한 후 활용정도를 감안하여 규모를 조정한다.

유통인프라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간 농산물 교역물자의 품위향상과 원활한 집배송을 통한 교역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북한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결국에는 통일비용 감소 효과

를 거두게 되는 셈이다.

□ 남북한 농산물 교역 POOL제 운영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과 일부 농산물의 과잉생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남한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남한은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농산물을 북한에 주고 북한으로부터 광산물 등을 받음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품목선정 : 남한에서 생산이 유리한 작물 및 작황호조 등으로 과잉생산 되어 가격이 폭락될 우려가 있는 농산물로는 마늘, 양파, 가을 김장채소, 감귤, 돼지고기 등이 대표적이나, 매년 수급상황의 변동이 심함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북한에서 생산이 유리한 잡곡류 등의 농산물을 교역대상으로 하되 반입품목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수산물이나 광산물도 교역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하여 북한측에 인도하며, 대금 결제는 청산계정을 활용하도록 한다. 추진주체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 경우 남한에서는 북한산 농산물의 반출입 노하우를 구비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농산물 Pool 전담기구가 담당한다.

□ 북한 농업유통부문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훈련 추진

교육담당주체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맡고, 교육대상은 시·군단위 농축산물도매소 및 배급소 관리자, 시·군단위 농민시장 관리자, 국영유통기업소 관리자, 식료수매종합상점 관리자 등이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농산물유통의 기초, 농산물 수확 후 관리 요령, 농산물 저장 관리 기법, 규격포장화 기술, 가공기술, 유통정보 등이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 시장의 기능과 역할, 농산물 산지유통, 농산물 도매유통, 농산물 소매유통, 농산물 물류표준화, 농산물 유통정보, 농산물 수출 등이다. 교육방법은 월 1회 1주일과정으로 년 12회 실시하며, 1회당 교육인원은 50명 단위로 하여 연간 교육인원은 600명 수준으로 한다.

□ 농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

첫째, 농민시장의 시설물 설치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각 도별 1~2개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노천시장은 시장건축물을 짓고, 유개시장이라 하더라도 시설이 미비하거나 노후화 된 건축물은 개보수를 추진한다. 그리고 매대를 설치하고, 물품저장시설을 건설하며, 시장시설물 건설은 정부차원의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활동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주민의 소득제고와 시장경제 의식 배양에 두드러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남북한 공동시범농민시장 개설 운영이다. 휴전선 부근 경의선 철도역 주변, 금강산 관광지역내 등지에서 접근성, 효율성,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택일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으나 사업의 주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운영방식은 남북한 정부가 선정한 일정 수의 상인들로 하여금 지정된 시장에서 상업활동을 통해 상호 물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한 시장참여자간의 현격한 구매력 차이가 존재하므로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 방식 위주로 운영하되, 남북한 상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상업자금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상환하도록 조치를 아울러 실시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물자교류 증대, 남북한 농업인(상인)간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전시효과 제공으로 북한 농민시장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 수행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농산물 가공산업의 남북협력방안

□ 농산물가공산업의 대북 투자방안

북한이 갖는 특성을 반영한 제품들로는 발달한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제품, 많은 산간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제품, 신선제품 이미지를 갖는 산

채, 특산물 가공품,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가공제품 및 수입대체 품목 등이 있다.

호프 가공공장, 산삼·장뇌가공 건강보조식품, 메밀제분 및 면류가공, 청정 제품 및 신선제품 이미지의 산채가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임산물가공산업의 남북 협력분야는 단기적으로는 관상수 생산사업, 송이 등 임산부산물 채취가공사업 등이 가능성이 있으며, 중·장기사업으로는 소경재 및 폐목질 자원의 이용사업, 저비용 펄프제지사업, 목재추출성분으로부터 고기능성물질의 개발사업의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남한의 축산관련 산업이 겪고 있는 애로점을 북한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남한의 축산업계가 협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으로서도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기존 농업생산에 의한 식량 공급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시점에서 북한과의 신뢰회복과 산업적 협력의 적응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축산물 가공산업을 예시하여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협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은 우선 북한의 협력여건이 우수한 분야로서 전통축산식품 가공산업, 조사료 생산업, 피혁 및 깃털 가공업을 들 수 있다.

2. 결론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에너지 등 공업생산요소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업생산이 쇠퇴해지고, 그 결과 비료, 농기계, 비닐 등 농업생산자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농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게다가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공식적인 유통체계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북한의 농업유통체계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최근 우리 정부는 남북한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나 민간부문의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은 직접적인 식량지원이나 농업생산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 위주로 이루어져왔을 뿐 농업유통부문의 협력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정부 농정당국은 「남북 농업협력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통분야도 포함하였다.

21세기는 개방을 통한 세계화와 국제화 추세를 거역하고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란 불가능할지 모른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와 같이 경제가 쇠퇴한 나라는 자력으로 회생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정책을 실시하여 외화를 축적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북한이 개방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순조로운 시장경제체제로의 통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유통기반 조성 등 농산물 유통부문에서의 남북한간 협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남북한간 농림축산업의 유통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효율을 제고시킨다면 이는 곧 생산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직접적인 식량지원이나 농업생산자재지원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경제안정, 남북한 통일후의 경제질서의 완전통합, 경제통합의 시기단축 및 통일비용의 최소화 등을 위해 지금부터 남북한이 농업유통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남북경제협력 강화와 통일대비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 농산물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간 농산물 유통분야에서의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남북한 농업유통부문 협력방안으로는 첫째, 남북한간 농산물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방안의 하나는 계약재배를 통한 북한농산물 반입 확대이다. 북한산 농산물 반입품목 선정은 국내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

해 극히 부족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품목중 북한으로부터 반입이 가능하고 또한 국내농가에 대한 피해가 적으면서 북한 농업에 과급효과가 큰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에 준해야 한다. 그리고 수급 및 가격조건 등에서 가장 유리한 팔과 참깨의 2개 품목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차츰 녹두, 콩 등 기타품목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이다. 그 중 하나는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보관 및 선별·포장작업에 필요한 간이저장고 건설을 지원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수확한 농산물을 생산농민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농민시장의 시설을 지원하여 시장경제 확산 및 농가자산 축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 농산물 교역 POOL제 운영이다. 이것은 남한은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농산물을 북한에 주고 북한으로부터 광산물 등을 받음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넷째, 북한 농업유통부문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섯째, 농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이다. 최근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 농민시장의 시설물 설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업활동자금 융자사업 추진, 남북한 공동시범농민시장 개설 운영 등이다.

여섯째, 농산물 가공산업의 남북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남북한간 협력사업은 반드시 양측 정부당국의 사전 승인 또는 상호협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했다. 이 연구에서 남북한간 단기 및 장기 협력사업으로 제시한 방안 역시 남북한 양측의 상호협약을 통해서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용보다는 남북한 당국간의 협력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언급한 남북한 농업유통부문 협력방안은 우리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남북한 농업협력추진방안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제시한 우리나라 농산물 가공산업의 대북 협력 방안은 정부 또는 민간부문의 관련기업에 제공하여 농업유통부문에서의 실질적인 남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별 장

외국의 농업유통부문 협력사례

1. 대만과 중국의 협력사례

1.1. 양안간의 경제교류협력 현황

1.1.1. 개황

양안간의 경제교류는 양 지역의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교류가 제약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론 1979년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대외개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론 1987년 대만정부의 계엄령해제, 외화통제의 완화, 친척방문의 허용 등 일련의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서 양안간의 경제교류는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정부의 "하나의 중국"원칙 고수와 대만의 간접교류의 원칙 및 독립움직임은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경제교류의 확대를 제약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양안간의 농업교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양안간의 농업교류는 간접무역방식 및 “국가통일강령”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투자는 상호이익을 원칙으로 투자품목과 투자금지품목을 분리하여 허가함으로써 중국과 대만상품간의 경쟁을 피하게 하고 있으며, 농업무역은 상호보완을 원칙으로 간접무역을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종자교류 방면에 있어서는 호혜(互惠)를 원칙으로 상호간의 농업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다.

양안간의 농업무역은 “대만과 중국의 무역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간접무역”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999년까지 간접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농산물은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475종인데 대부분은 농공업 원료 및 한약재이다. 1998년도에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총액은 2.9억 달러로 1997년과 비교하여보면 9820만 달러(25.3%)가 감소하였는데, 수입액이 비교적 많이 증가한 품목은 건조채소, 가공채소, 과일쥬스, 면화, 붉은콩 및 콩 가공품, 종자, 어류 및 어류가공품 등이며, 수입액이 비교적 많이 감소한 품목은 전분, 건조과일, 가공과일, 한약재, 동유(桐油), 깃털, 가죽 및 가죽제품, 잠사, 목재 및 목제품 등이다. 1998년 대만이 중국에 수출한 농산품 총액은 2260만 달러로 1997년과 비교하여보면 804만 달러가 증가하였다(55.3% 증가). 수출액이 비교적 많이 증가한 품목은 화해 및 화해종묘, 경종식물종자, 냉동육, 소가죽, 냉동연체류 및 기타수산물 등이다. 대만기업의 중국에 대한 농업투자는 1998년 12월까지 3941건이며 총 투자금액은 19억 3126만 달러에 달하였다.

1.1.2. 대만의 농업현황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안간의 새로운 관계가 점진적으로 정립되고 있는 동안 대만농업은 대만화폐가치의 상승 및 생산비상승 등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하락함과 동시에 대내적으로 마이너스의 성장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부터 대만농업은 마이너스의 성장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의 성장이 보편화되었는데, 1992년, 1994년, 1996

년 농업성장률은 각각 -2.8%, -4.3%, -0.62%가 하락하였다. 대만의 국내총생산액 중 농업생산액의 비중 또한 계속하여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1980년 7.32%, 1990년 4.01%, 1996년 2.79%로 하락하였다. 농업 총 고정자본이 전체 총 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는 3%이었는데 1990년에는 2.5%, 1996년에는 1.43%로 하락하여 1960년 15.1%를 차지하던 상황과 비교 하여보면 상당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대내적으로 농업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국제화 및 개방화의 조류에 따른 농산품시장개방이라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만의 농업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농산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분야의 해외투자를 급속하게 증가시켰다.

농업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식품산업인데 대만의 식품산업은 아주 다양화되고 성숙된 내수형 산업이며, 과거 여러 해 동안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였다. 1986~1995년간 식품제조업 지수의 연평균 성장률은 2.7%이고 산업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3.0%이었다. 그러나 최근 1~2년간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심지어 1996년에는 -0.7%의 성장률이 나타나면서 식품가공업 또한 마이너스성장이 시작되었다.

대만의 식품가공업은 수입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데, 특히 사료산업에서 필요한 조곡, 제분업에서 사용한 밀, 식용유지산업에서 사용한 대두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수급변동은 대만식품가공업의 생산비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만화폐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경쟁력의 하락은 대만식품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최근 대만의 농업 및 식품가공업은 이러한 총체적인 생산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생산거점을 산업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풍부하게 구비하고 있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대만식품산업은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발전은 농업투자대상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품의 생산과 판매 및 품질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농업 및 식품공업은 해외투자를 통하여 원료획득의 내부화, 교역비용

및 교역상대와의 불확실성감소 등을 통하여 대만의 농업 및 식품공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1.1.3. 대만농업의 해외투자

대만식품공업의 해외투자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였지만 금액과 투자건수가 아주 미약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만의 농업 및 농업관련 산업은 대만국내외적인 투자환경의 변화 및 양안의 경제무역관계의 증가로 인하여 1980년대 초기부터 해외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말에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대만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991년 대만정부가 해외투자를 허가한 식품산업의 투자금액은 4063.5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중 중국 투자가 가장 많아 45.7%를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태국으로 30.1%를 점하고 있다. 특히 1991년 이후 식품가공업분야의 중국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1991~1996년 기간 중 대만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식품공업의 금액이 7.75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동기간 대만식품가공업의 해외 총 투자금액 9.95억 달러 중 77.9%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타 투자지역으로는 태국이 6.74%, 월남이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소량이 미주지역과 대서양 및 동남아지역에 투자되었다.

1997년 대만식품공업의 해외투자 중, 중국에 대한 투자비율은 해외투자총액의 76.5%를 점하여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월남경제의 대외개방으로 인하여 월남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다. 1997년 월남에 대한 투자총액은 7969만 달러에 달하여 1997년 대만의 해외투자총액의 9.1%를 점하여 중국 다음으로 높았다.

1.1.4. 대만기업의 중국농업투자

최근에 대만기업의 중국투자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대만정부는 대만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하여 약간의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만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금지, 투자규모의 제한 등이다. 농업투자와 관련하여 대만정부는 대만기업의 중국투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지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혹은 자급률이 낮고 대체성이 적은 상품. 둘째, 대만지역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산품. 셋째, 대만지역에서 상품의 생산비가 높은 농산물. 넷째, 대만과 중국의 농업발전에 모두 유리한 농산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정부는 중국에 대한 농업투자과 관련하여 다음 분야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첫째, 국제 상관법규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거나 혹은 제한하고 있는 농산물 및 그 생산과 관계되는 과학기술. 둘째, 대만지역의 안전 및 경제발전에 대하여 중대한 마이너스의 영향이 있는 농산물 및 그 생산과 관계되는 과학기술. 셋째, 정부가 투자하여 연구개발하고 있거나 혹은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및 그와 관계되는 과학기술. 넷째, 대만의 어선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근해 전통어장의 어업 등이다.

중국이 외국기업에게 농업투자를 허가하거나 장려하고 있는 항목과 대만이 중국농업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항목을 비교하여 보면, 중국은 희귀하고 귀중한 우량품종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녹차, 대마, 아편 등과 관련된 9가지 품목에 대하여 대중국 농업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대만이 대중국 농업투자를 허가하고 있는 품목은 주로 대만에서 생산비 및 오염성이 높거나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양산업을 허락하고 있다. 1996년 말까지 대만 경제부가 허가한 대만기업의 중국농업투자 항목은 모두 222개이며, 투자유형별로 보면 주로 식품과 음료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만경제부의 투자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만기업의 중국농업투자는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식품 및 음료제조업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규모가 작지만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투자는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경제부가 허가한 대만기업의 농업투자 중 식품공업이 94%를 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1에서 나타난 것처럼 투자규모 면에서 보면 1996년 식품 및 음료제조업의 평균투자규모는 각각 405.6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80년대 초기 대만기업의 중국투자와 최근의 대중국 투자산업은 그 형태 면에서 약간의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80년대의 중국농업투자는 주로 대만의 경제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 위주로 진행된 반면 최근에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목표로 투자규모 및 투자건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원인은 첫째, 1979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식품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분야의 중국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내수시장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둘째, 중국의 개혁개방초기에 많은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많은 외국자본은 비교적 장기간을 요하며 복잡한 농업분야의 투자를 쉽게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농업분야의 투자가 저조하였다.

별장표 1 대만기업의 중국농업투자(1991~1996)

단위: 천달러

년도	농·임업			식품 및 음료제조업			합계		
	건수	금액	평균 규모	건수	금액	평균 규모	건수	금액	평균 규모
1991	-	-	-	19	19308	1016.21	19	19308	1016.21
1992	-	-	-	27	46415	1719.07	27	46415	1719.07
1993	122	15740	129.02	791	324555	410.31	913	340295	372.72
1994	7	2330	332.86	73	145846	1997.89	80	148176	1852.20
1995	4	2149	537.25	32	117447	3670.22	36	119596	3322.11
1996	3	1100	366.67	30	121702	4056.73	33	122802	3721.27
합계	136	21319	156.76	972	775273	797.61	1108	796592	718.95

자료출처: 대만농업통계연감, 1998년.

그러나 개혁개방이 계속 진행되면서 중국의 경제정책이 과거로 회기 할 가능성이 적다고 예견되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중국투자 의욕이 개선되었다.

셋째, 중국에는 농업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풍부한 토지자원과 인력자원을 구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은 농업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경제개혁에 대한 확신, 내수시장의 점진적인 확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및 토지자원은 외국기업의 대중국 농업투자를 급속히 확대시켰으며 대만기업의 대중국 농업투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농업관련분야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발전결과에 부합되고 중국 내수시장확대의 잠재력을 구비한 업종에 대한 대만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초기 공업위주의 투자에서 최근에는 농업에 대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대만기업의 대중국 농업투자에 대한 동기는 주로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중국의 풍부한 농업자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자원을 이용하며, 셋째, 중국의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넷째, 제3국의 국제시장을 개척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농업투자의 동기 자체가 중국의 자원과 시장위주로 전환되면서 농업투자는 공업투자와는 달리 양두재외(兩頭在外)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문제에 직면하여 직접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의 특수성 때문에 공업투자와는 달리 비교적 소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대만기업의 농업투자는 양식업, 수산가공, 유지, 사료, 과일, 채소, 우량의 가금과 축산, 농·축산가공품, 차, 화훼 등 농업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투자지역은 초기에는 주로 복건, 광둥, 산둥, 해남 등의 지역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중국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식품산업의 중국투자는 합자와 독자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점차 독자투자의 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품산업은 현지에서 생산하여

6) 양두재외(兩頭在外)는 원자재의 공급과 제품의 판매시장을 국외에 두는 것을 의미함.

판매하는 상품위주로 중국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주력상품이 대만의 모(母)기업의 주력상품과 같은 종류였으나 중국투자가 내수위주로 변하면서 대만의 모기업과의 연관성이 점진적으로 취약하게 되었으며 중국투자사업의 자주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대만식품산업의 중국투자 경영수지의 손익상황은 기본적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중국의 가격체계는 식량, 면화, 유지에 대하여 계약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 계란, 채소에 대해서는 지도적인 자유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농부산물은 시장에서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로 되어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구매가격은 국가가격, 국가지도 가격, 자유가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당한 정도에 있어서 정부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유통체제하에 대만기업은 필요한 농업자원을 주로 각 지역의 공급 판매합작사, 국영기업, 자유시장⁷⁾의 각급 농민조직 및 개별농가를 통하여 구입하고 있다. 공급 판매소와 국영기업은 국가의 규제기구에 속하며 따라서 법에 따라 상품신청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원료공급의 측면에서 볼 때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다. 비록 일부 자원은 자유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그 구매가격이 공인가격보다 아주 높으며, 품질 또한 불안정하다. 이러한 원료공급의 불안정은 기업으로 하여금 중장기적인 계획의 제정과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기업은 현지농민과 계약재배를 하거나 향진기업이나 국영기업을 독자 혹은 합자경영 함으로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문제를 다소 완화하였다.

상품판매 방면에 있어서 내수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공급판매소, 국영상업기업, 자유시장인데, 자유시장이외에는 모두 중국정부에 의하여 규제되는 기구이다. 수출방면에 있어서는 대만기업의 수출농산물은 먼저 외국무역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각 성의 공급판매소 혹은 각 성의 무역회사를 통하여 수출이

7) 계획경제에서 계획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는 모든 시장을 이야기함. 따라서 자유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은 계획의 범주 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계획적인 생산부분에서 목표달성을 초과한 상품임. 자유시장의 가격체계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됨.

가능하며, 가공농산물의 경우 일부 합영기업은 스스로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가격은 반드시 보고를 하여야 되지만 가격이 품질이나 형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대외 수출가격에 관여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일부상품 수출은 대만기업이 외화를 획득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1.2. 대만기업의 중국농업투자에 대한 사례분석

1.2.1. 덩신(頂新)기업

덩신기업은 1989년 북경에 최초로 합자기업을 설립하고 중국투자를 시작한 후 1992년까지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생산기지를 산둥(山東)·천진(天津) 등지에서 시작하여 광주(廣州)·항주(杭州)·중경(重慶)·심양(瀋陽)·무한(武漢) 등 중국전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생산라인 또한 50여개로 증가하였다. 생산품목은 초기엔 라면·참기름 등 식품분야의 상품을 생산하였는데 점진적으로 식품과 관련된 PSP그릇·플라스틱·포장용종이·인쇄포장재료 등 식품관련 산업으로 확대하였다.

1995년 덩신기업의 중국영업총액은 4.8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덩신기업이 제정한 발전계획에 따르면 2000년에는 덩신기업의 중국투자총액은 20억 달러를 초과하고 영업총액은 24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6년 2월 덩신기업의 계열회사인 덩이(頂益)주식회사는 홍콩의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약 2억 달러를 순조롭게 취득하여 전액을 중국에 재투자하였는데, 이로서 덩이기업은 홍콩에서 상장한 최대의 대만출자기업이 되었다. 덩신기업의 중국투자총액은 10.29억 달러에 달하여, 유지·식품·음료·제과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덩신기업은 1997년 1월말 심양개발지구에 심양덩이(瀋陽頂益)국제식품회사를 설립하였다. 투자총액은 3000만 달러로 4개의 생산라인을 건설하여 매일 거의 5만 상자의 라면을 생산하고 있다. 1996년 동북지역의 라면 판매액은 0.7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덩신기업이 심양에 공장을 건설한 주요목적은 동북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1997년 이공장의 생산가치는 1.5억 달러에 달할 것으

로 예상하였다.

이로서 덩신기업은 중국에 42개의 계열회사와 공장 25개, 2만 6000명의 노동자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미국의 SGR회사가 제공한 중국의 라면시장조사에 따르면 현재 덩신기업의 중국라면시장 점유율은 26%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컵라면은 65%를 점하고 있다.

1.2.2. 통이(統一)기업

대만의 통이기업은 1979년 전후에 대남(臺南)에 토마토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토마토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1989년부터 시작한 대만의 화폐가치상승 및 국내의 생산비 상승 등으로 토마토제품의 대외경쟁력이 하락하였다. 따라서 부득이 대만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브라질·태국·중국 등지에서 현지조사를 마친 후 중국의 신강(新疆)지역을 선택하였다.

통이기업은 1992년 신강국제신탁투자회사와 합자로 중국신강지역에 신지양통이(新疆統一)를 설립하고 토마토주스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신지양통이의 설립자본은 1050만 달러이고 생산능력은 1일 130톤이며, 제품판매는 기존의 모(母)기업인 대만통이의 판매망을 이용하였다. 신지양통이는 안정적인 원료공급 확보 및 기업의 현지화를 위하여 현지주민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토마토주스의 원료를 수급하였는데, 토마토의 질적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약재배 농민에게 종자를 나누어주고 기술지도를 하였다. 그러나 현지주민의 계약재배에 관한 개념부족으로 현지가격이 상승할 경우 계약재배와 관계없이 토마토를 다른 곳에 팔아버리거나, 현지의 국영농장, 군대농장 등에 의한 수매질서 파괴행위가 종종 발생함으로써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어렵게 하였다. 그래서 통이기업은 과거 대만에서 계약재배에 종사하였던 대만농민이 신강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이미 일부 대만의 농민이 신강에서 토마토 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 신강지역이 항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품을 가까운 항구인 천진의 탕쿠(塘沽)항까지 운반하는데 7일에서 12일이 걸리며 운송비가 생산비의 10%나 차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밖에 기업경영면에 있어서 합작파트너와 자주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기업을 경영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통이기업은 이후 중국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독자투자로 전환하였다.

통이기업은 1992년 신지앙통이를 설립한 이후 투자지역을 중국전역으로 확대하였다. 1997년 중반까지 통이기업의 투자총액이 10.9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중국전역에 19개의 음료 및 식품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투자 거의 대부분이 독자투자의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거액의 투자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시장거점을 확보하는 과정 중 투입자금 회수가 비교적 느린 현상이 발생하면서 1998년까지 중국투자에 대한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통이기업은 1998년을 기점으로 경영상태가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통이기업의 영업목표는 중국내수시장의 개척에 있는데 이를 위하여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업활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특정지역에 적합한 상품은 현지 책임자가 그 지역에 적합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는 중국통이기업의 총본부에서 전면적인 계획아래 중국전지역에 적합한 광고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음료, 라면 등은 중국의 통이기업 총본부에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세워 광고를 하고 있는 품목이다.

1.2.3. 왕왕(旺旺)기업

“이란(宜蘭)식품”은 1991년 처음으로 중국에서 조사를 시작하여 광둥성의 주해(珠海)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주해지방관리들이 상품의 내수를 허락하지 않는 등 회사와의 상당한 의견 차가 발생함으로써 호남(湖南)의 장사(長沙)지역에서 다시 투자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사지역 지방관리들은 외국의 투자기업에게 높은 관심과 협조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외자기업의 내수판매를 허락하였다. 따라서 이란식품은 주해의 투자계획을 포기하고 1992년 장사에서 정식으로 “왕왕식품”의 명의를 가지고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란식품은 중국투자 초기 불충분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중국과 합자 형

태로 중국에 진출하였는데, 중국기업은 토지나 공장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지분을 소유하였다. 그러나 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호전되어 영업자금이 점진적으로 충분하게 되었으며, 또한 중국이 모든 외자기업에게 내수를 허락함에 따라 새로 설립한 공장들은 거의 대부분 독자투자의 형태로 전환하였다.

왕왕의 생산원료는 주로 쌀인데 원료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현지농민과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는 원료의 품질이 생산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씨를 제공하고 기술지도를 통하여 품질을 높이고 있다.

영업방면에 있어서 왕왕은 상해에 영업소를 설립한 것 이외에 상품을 각급의 학교에 보내 학생들로 하여금 시식을 하도록 함으로서 감사장을 받는 등 상품의 이미지를 중국에 깊게 심었다. 또한 영업의 일환으로 중국전역에 대대적인 광고를 함과 동시에 중국시장의 특수한 상황(賣方市場⁸⁾)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현금과 상품을 교환”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대륙에 현금판매방식을 수립하였다. 이밖에 왕왕은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1995년 말까지 중국에서 100여개의 상표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왕왕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상표특허를 획득한 원인은 중국에서 상표특허를 신청하여 획득하기까지 1년에서 2년이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신상품을 출시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왕왕은 1995년 싱가포르 국가발전은행의 추천으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왕왕주식회사 명의로 상장되었으며, 1997년 3월까지 중국에 9개의 합자회사와 14개의 독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투자총액은 2.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1.2.4. 치우쓰딩(邱氏鼎)식품주식회사

치우쓰딩식품주식회사는 대만에서 상당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1992년초 중국에서 투자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1997년까지 영업망이 중국 13

8) 과거 생산품이 부족한 시기의 중국시장특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산자가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이야기함.

개성(省)과 10여개시(市)로 확장되었으며 실제 투자금액은 77.2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치우쓰딩식품주식회사는 중국에 독자기업 형태로 진출하였으며 상품의 판매는 내수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개별영업소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하여 시장규율을 파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영업망은 국유기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유기업의 과도하게 경직된 단점을 보충하기 위하여 활동력이 강한 영업사원을 특별히 모집하여 판매상을 도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1.2.5. 하이빠왕(海霸王)기업

1994년 4월 하이빠왕기업은 산두(汕頭)에 국유기업인 식품통조림공장을 인수하여 어류식품을 생산하여 중국현지에서 내수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방법은 직접판매와 유사한 형태를 채택하고 장려금제도 및 판매소에 냉동창고 무료제공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이밖에 광고선전 등을 통하여 단시간에 시장개척을 하였다.

하이빠왕기업은 산두(汕頭)의 통조림공장을 인수한 이후 다시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지역의 직공이 2천여명, 부채가 약 842만 달러이고, 사천지역에서 가장 큰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해 동안 공장가동이 중단된 육류공장을 “경영자산의 임대”방식으로 29년간 인수한 후 공장을 개조하고 선진적인 냉동창고를 들여오므로써, 중국내륙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중국서남지역 최대의 냉동식품 도매중심으로 발돋움하였다. 공장을 인수하면서 매년 임대료는 24만 달러이고 시기가 성숙되기를 기다린 후 다시 전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공장의 임대기간 중 원래공장의 직공 250여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1997년 생산총액은 2774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6. 대만따청(大成)기업의 중국진출

대만의 따청기업은 1999년초 중국 천진(天津)에 있는 미국의 Continental Grain Corp(중국명 캉띠완다(康地萬達))을 인수하여 종계장(種雞場)·사료공장·닭

가공 공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캉띠(康地)의 자본금은 1774만 달러이며, 1999년 사료와 고기의 매출액은 3103만 달러에 달하였다. 가공닭고기생산품 중 13%를 수출하고 20%를 중국의 패스트푸드점에 판매하며, 나머지 67%는 북경과 천진의 소·도매상 및 슈퍼마켓에 판매하고 있다.

캉띠완따는 닭의 계약사육방식을 통하여 현지의 국영농장 및 개별농가를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서 기업의 현지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계약농가로 하여금 따청(大成)사료를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매월 따청사료의 생산량 8만톤 중 5.5만톤을 계약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대만에서 중국산 닭고기와 미국·태국·브라질의 닭고기가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중국산 닭고기의 경쟁력이 높아 수출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산 닭고기의 가격이 운송비를 포함하여도 대만국내가격의 2/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중국의 검역기준은 대만보다 더욱 세밀하여 고기상품의 안전과 위생수준이 높고, 셋째 미국과 태국의 닭고기 생산과 가공비용이 모두 중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1.2.7. 뿌핑(卜蜂)기업

뿌핑기업은 1921년 태국의 방콕에서 설립된 대만화교 기업으로 1977년부터 대만에서 사료 및 육류가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다. 뿌핑기업은 1979년 미국의 Continental Grain Corp기업과 함께 중국 심천(深圳)에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중국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전역에서 사료업·부동산·패스트푸드·맥주·자전거·전선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다.

뿌핑기업이 중국에서 최초로 투자한 분야는 사료업으로 대도시 주변을 중점적으로 선택하여 현지에서 사료와 목축을 관리하는 정부단위와 합자로 사료공장을 건설하였다. 이후 사료분야에 독자기업을 시범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인재모집의 어려움과 자원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시 합자형태로 투자 계획을 수정하였다.

별장표 2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기업	투자방식	투자분야	투자규모	투자시점	투자성과
따청캉 띠완다	· 대성기업이 미국 의 캉띠완다를 인 수함	· 닭 사육 및 가공 · 사료	· 총 자산 2천 4백 만 달러	1999	· 1999년 총매출액 26억위엔
통일 기업	· 초기합작 · 이후 독자로 전환	· 식품산업 · 식품관련산업 으로 확장	· 1997년 중국 투자총액 1억 달 러에 달함	1992	· 판매망중국전역 으로 확장 · 1998년 19개 식품 및 음료공장으로 확대.
왕왕 기업	· 초기합자 · 점차 독자로 전환	· 식품산업	· 1997년 중국 투자 총액 2억 달러에 달함	1992	
명신 기업	· 초기합자 · 점차 독자로 전환	· 식품산업 · 식품관련산업 으로 확장	· 1996년 중국 투자 총액 10억 달러에 달함.	1988	· 1996년 영업총액 은 55억위엔 예상
하이빠 왕기업	· 국유기업 인수	· 식품산업 · 어류		1994	· 1997년 매출총액 2.3억 위엔 예상
뿌핑 기업	· 초기합자 · 점차 독자로 전환	· 농업전반 · 식품가공 · 사료		1978	

뿌핑기업이 중국투자 초창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인재모집부분 이었다. 당시에는 태국·홍콩·싱가포르·대만·미국 등지에서 인재를 선발하여 중국에 파견하여 공장을 관리하였는데 종종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뿌핑은 한편으론 인재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론 지속적인 경영을 위하여, 현지에 푸단직업훈련소(復旦教育發展中心)를 설립하고 현지인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고용인의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영업부분에 있어서는 현지생산과 현지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현지의 농·목축업분야의 정부단위를 통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현재는 주로 개별농가를 중간상으로 교육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점진적으로 대고객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2. 동서독의 농업통합

2.1. 통일이전 동서독의 농업정책

2.1.1 통일이전 동서독의 경제교류

독일통일이전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를 내부교역으로 간주하고 경제적인 실리보다 동독주민의 생활을 개선시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는데 예를 들면 동독제품에 대한 무관세적용, 교통시설 및 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제3국에서의 합작투자 등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강화시켰으며 민간이전지출과 상업차관을 허용하였다.

동독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개인생활이 궁핍하게 됨에 따라 동서교류를 통하여 낙후된 산업의 기술향상, 외채위기 극복, 원자재 긴급조달 등의 실리추구를 위하여 서독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였다. 이러한 동서의 경제적 교류는 동서통일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1990년 5월 18일 조인된 통화·경제·사회동맹에 관한 국가조약이 7월 1일에 발효됨과 동시에 동서독간 국경이 철폐되었다.

2.1.2. 동독의 농업정책

동독은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1차와 2차에 걸친 토지개혁을 통하여 협동농장 국영농장 등이 중심이 된 농기업의 형태로 중앙계획경제 속에서 전문화된 대규모농장을 건설하여 공장의 형태로 운영되는 농업을 추진하였으며 작물생산과 축산업을 엄격하게 분리하였다. 이 결과 1988년에는 약 1250개에 달하는 작물생산 집단농장이 경지면적의 85%를 점하고 있었으며, 각 농장에서는 평균적으로 350명의 조합원이 약 4500ha를 경작하였다. 축산부분에서는 약 3000개의 농장이 모든 가축의 80%정도를 사육하였으며, 각 농장에서는 평

균적으로 150명의 조합원이 1800두의 소 또는 38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였다. 또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엄격하게 전문화하여 생산하였는데, 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였고 오히려 추가비용을 유발하였으며, 축산폐수가 한 곳으로 집중함으로써 환경 및 생태학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

동독농업정책의 최대목표는 식량의 자급자족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일부 품목의 생산목표는 달성하였지만, 농산물의 품질, 식량의 안정성 및 환경보호 등 질적인 측면에선 EU최소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동독정부는 1984년 농산물가격을 개혁함으로써 농업전반에 대한 발전을 기대하였으나 시장기능과 괴리된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가격계획은 시장기능을 왜곡시켰으며 생산과 소비부분에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농산물가격 개혁의 결과 농업부문의 생산자 가격이 평균 60%가 상승하여, 농업종사자의 평균소득이 1955년 산업근로자 평균소득의 2/3에 불과하던 것이 1985년에는 94%에 근접하였다. 이 결과 곡물이나 유지작물의 생산가격이 서독에 비하여 2배, 감자는 3배, 사탕무우는 1배반, 쇠고기는 3.9배, 돼지고기는 3.5배, 우유와 계란가격은 2배반이나 높은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기초식량의 소비자가격은 동독정부의 정책적인 낮은 가격정책으로 인하여 서독수준보다도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가격체제로 인하여 발생된 생산과 소비의 가격차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하여 정산하였는데, 1988년 이로 인한 재정부담은 320억MARK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액수는 동독의 식량관련 소매업 총 판매액의 4/5를 초과하는 규모이다(1988년 식량관련 소매부분의 총매출액은 380억Mark이었다). 이와 같은 왜곡된 가격지지정책은 왜곡된 소비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빵, 식용감자 등이 사료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생산자 가격지지정책이 농업생산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품질을 증가시키는 등의 생산효율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동독농업의 생산성 또한 서독에 비하여 크게 낙후되었다. 동독은 여러 차례의 계획을 통하여 생산성향상을 시도하였지만 중앙계획경제를 고수한 나머지 효율성을 제고시키지 못하였다. 노동력이 대규모의 농장에 과도하게 투

입되어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이룩할 수 없었고, 시장기능과 괴리된 왜곡된 가격지지정책은 비록 생산자 가격이 서독보다 높게 책정되었지만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생산에 대한 동기를 부여시키지 못하여 노동의욕은 오히려 저하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이외에 농약, 비료, 사료, 농기계 등은 품질이 낮고 노후화 되었고, 부품의 조달이 제때에 되지 않는 등 농업전반에 걸친 낙후로 인하여 동독의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은 서독에 비하여 아주 낙후되었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1988년 동독농업의 토지생산성은 서독의 70~80%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젖소의 우유생산량 및 닭의 계란생산량은 서독의 9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동독인구의 전체취업자 중 10%에 해당하는 86만명이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데, 1985년 동독에서는 한사람의 농부가 곡물로 환산하여 33.9톤을 생산하였으나 82.0톤을 생산한 서독의 농부에 비하여 단지 41%에 지나지 않았다.

별장표 3 동서독 농업부문의 생산성 비교(1988년)

품목	동독	서독	동독/서독(%)
1.작물 (ton/ha)			
- 밀	43.8	68.4	71
- 호밀	29.4	41.7	71
- 보리	43.4	52.2	83
- 유지작물	27.7	31.6	88
- 감자	261.0	372.9	70
- 사탕무우	233.9	490.8	48
2. 축산물			
우유 (liter/두)	4020.0	4739.0	85
- 계란 (개/수)	228.0	255.0	89

자료: Staatliches Zentralamt fuer Statistik, Statistisches Jahrbuch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989, p 196.

2.1.3. 동서독 농업의 차이점

별장표 4 동독과 서독의 농산물 생산자가격의 비교(1988년)

품목	동독(Mark)	서독 (Deutsche Mark)	동독/서독(%)
1. 작물(ton)			
- 밀	675.4	381.0	177
- 호밀	721.4	373.0	193
- 사탕무우	161.0	114.0	141
- 유채(ton/ha)	1598.0	788.0	203
- 감자(ton/ha)	519.0	166.0	308
2. 축산물(kg)			
- 소고기	10.1	3.1	327
- 돼지고기	7.9	2.2	353
- 가금류	8.6	2.0	442
- 우유	1.7	0.7	246
- 계란(100개)	36.8	14.9	247

자료: Stamer H., DDR-Beitritt und moegliche Veraenderungen der EG-Agrarpolitik, p12.

통일이전 동서독간 농업생산상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면 경영규모 면에서 서독은 평균 30ha인 반면 동독은 1000ha에 달하여 농장경영규모 면에서 동독이 훨씬 컸지만 농업 정책적인 면에서 서독은 시장조건에 맞는 품질위주의 생산방식을 장려하였는데 반하여 동독은 양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한 나머지 품질 면에서 동서독간의 많은 격차가 발생하였다.

가격체제는 서독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메카니즘에 따른 시장기능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반면 동독은 중앙의 계획경제체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동독의 이러한 가격체제는 국영 및 협동농장이 비록 이윤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자극하는 계기를 만들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독의 가격체제가 서독 또는 세계시장과 유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2. 통일이후 독일의 농업정책과 구조조정

통일이후 서독의 주요농업정책들이 동독지역에 적용되면서 동독지역의 농업정책은 계획경제체제하에 양적인 생산의 극대화를 지향했던 농업정책에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과의 조화 속에 지속적인 생산발전을 추구하는 농업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농업정책이 시장이 중심이 된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 중, 생산보조금 철폐, 동유럽시장에 대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 소비성향의 서유럽화 및 동독지역 생산물의 낮은 품질 등으로 인하여 동독지역 농산물의 생산자가격이 평균 약 65%가 하락하였는데, 그 중 작물부분은 약 50%, 축산물은 약 70%가 하락한 반면에 생산자재가격은 30%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생산자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하였지만 동독지역의 농산물재고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독일연방정부는 농산물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약 20억 달러에 해당하는 동독지역의 농산물을 긴급 구매하여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농산물시장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이와 달리 생산자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소비자 가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철폐되면서(1989년 : 320억 Mark) 기초식량에 대한 소비자 가격은 현저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통합과 함께 동독지역에 EU규정에 부합하는 시장질서체제가 도입됨으로서 농산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EU의 농산물시장 규정이 동독지역에서도 시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역내 농업과 농민의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변부과금 제도와 과잉농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시장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수출환불금제도 등이 실시되었다.

통일이전 동독의 농업구조는 협동농장(경지면적의 85%, 전체가축의 80%)과 국영농장(경지면적의 7%, 전체가축의 12%)이 중심이 된 농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은 바로 이 농기업을 처리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 따라서 동독의 인민회의는 1990년 농

업구조조정법을 제정하여 사적토지소유권을 부활하고 농업구조가 서독과 유사한 시장경제에 적합하도록 농업부분의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시하는 과정에서 모순점이 발견되어 1991년 독일의 연방의회는 이 법을 수정하였다.

농업구조조정법의 주요 내용은 집단농장체제인 농기업을 해체하여 다른 기업형태로 전환하거나 가족농 설립을 위한 조합원의 탈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구의 70%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농기업은 1990년 7월 1일 기준, 약 76억DM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이는 동독지역 농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커다란 제약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통일이후 이러한 농기업의 문제는 신탁관리청의 감독아래 구조조정이 실시되었다.

동서독의 통일이후 서독은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을 설립하고, 신탁관리청의 감독 아래 동독지역의 국영기업 및 각종의 국유재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신탁관리청은 기본법 제 23조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민영화시키고 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파산시키며 소생이 가능한 기업은 지원을 통해 정상화시킨 후 민영화시킨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과거 동독지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아래 신탁관리청은 통일조약 제25조 3항 및 16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농기업의 과거채무에 대한 상환조치를 하였다. 그 첫 번째로 신탁관리청은 과거 동독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농기업에게 강요한 채무 중 약 14억DM을 인수하였다. 두 번째는 신탁관리청에 의하여 인수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상의 변제조치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탕감이 아니라 구채무에 대한 지불정지가 주된 내용으로, 대차대조표상 별로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구채무의 지불은 오르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도 이익의 최고 20%만을 지불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장운영상 필요한 건물과 재산의 일부를 1995년 말까지 구채무 상환용으로 매각하거나 저당을 잡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구채무 76억DM 중 약 55%에 상당하는 42억DM의 구채무를 탕감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여 경감조치 하였다.

2.3. 동독의 농산물의 유통

2.3.1. 통일이전의 농산물유통체계

동독의 유통형태는 국영상업유통, 협동상업유통 및 자영상업유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품 분배를 위해 유통조달부 산하에 7개의 중앙상품판매망을 조직하였는데 그중 3개가 식품을 취급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das Zentrale Warenkonto WtB(Waren taeglichen Bedarfs) : 일상의 필수품을 취급하였음.

둘째, das Zentrale Wirtschaftsvereinigung OGS(Obst, Gemuese, Speisekartoffelen) : 과일 채소 그리고 식용감자를 취급하였음.

셋째, die Hauptdirektion volkseigener Einzelhandel(HO)은 국영 개별상점들의 종합조직이었음.

그리고 나머지 상품판매망 DELIKAT, FOTUM, EXQUIST, FRUCHTMEX(무역기업)은 각기 다른 특별임무를 가지고 특별한 상품을 취급하였다. 농산물의 수집 및 가공은 생산품목별로 전문화된 국영기업소가 담당하였으며 국영기업소 산하에 여러 공장을 두어 해당지역의 특정 식료품을 조달하였다. 지방에는 중앙상품판매망의 산하인 지역국(Bezirksdirektion)이 있었고, 지역국의 하부구조로 가공과 운송을 책임지는 기업 이외에 소비상점에 물건을 조달하는 도매상점이 존재하였지만 Interhotel, CENTRUM-상점, 조달기업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였으며, 또한 소매상점도 쉽게 상하는 물건은 직접 조달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Verband der Konsumgenossenschaft : VdK)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주로 농촌지역의 유통을 담당하였다. 농촌지역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은 수적인 면에서 국영상점보다 2배정도 많았으나 식료품 판매액으로 평가할 때 국영상점(38%)과 협동상점(36%)은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국영상점에 비하여 소비자협동조합은 불완전한 물량의 공급, 낮은 품질, 판매장소의 지역적인 열세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았고,

별장표 5 동독의 소매유통 형태별 거래액과 비율

단위: 10억 마르크, %

구분	소매유통 전체	사회주의적 소매유통 (국영판매업소 + 소비조합)	국영 판매업소	소비조합	개별적 소매유통
1950	17,3 (100)	8,2 (47.4)	5,2 (30.1)	3,0 (17.3)	9,1 (52.6)
1955	31,7 (100)	21,6 (68.1)	12,8 (40.4)	8,8 (27.8)	10,1 (31.9)
1960	45,0 (100)	34,8 (77.3)	19,8 (43.9)	15,0 (33.3)	10,2 (22.7)
1971	67,1 (100)	54,6 (81.4)	30,6 (45.6)	24,0 (35.8)	12,5 (18.6)
1977	90,5 (100)	79,4 (87.7)	47,2 (52.1)	32,2 (35.6)	11,1 (12.3)
1980	100,0 (100)	88,3 (88.3)	53,6 (53.6)	34,8 (34.8)	11,7 (11.7)
1982	103,5 (100)	91,5 (88.4)	55,5 (53.6)	35,9 (34.7)	12,0 (11.6)

자료: Hartmut Zimmermann et.al., 「DDR Handbuch」,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 Koeln, 1985.

상점의 경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2.3.2. 통일이후 식품가공 및 유통업의 변화

과거 동독의 다수의 중소규모의 유통업소는 구조전환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에 의해 직접 관리되거나 혹은 서독의 유통업체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합병되었는데, 식료품 소매유통분야에서 상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그 규모는 전체적으로 확대되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판매장 면적이 과거동독시절에 평균 128m²이었으나 1991년 9월에는 평균 157m²에 달하는데, 이를 통해 통일 후 동독지역에 대형매장의 형태가 매우 빨리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통일이후 서독기업 및 유럽대형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고 동독시절 국가소유 판매조직들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시장자유화 조치법을 시행하여 각 개별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1990년 12월 31일부터 「농업구조와 연안보호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농업전반에 걸쳐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일정부는 동독의 왜곡된 가격지지정책의 폐지 및 EU시장질서체제 편입에 따른 생산자가격 폭락의 피해를 줄이고 국영기업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2억8천5백만MARK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산물 가공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독일정부는 육류, 우유, 과일, 채소의 가공과 유통분야에 대한 시장구조개선을 위하여 1990년 5억 2400만DM의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가공 및 유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GAK에 의한 촉진재원 9억 7400만DM과 EU 특별계획의 일환으로 5억 6800만DM이 투입되었다. 이로서 이 분야의 투자규모는 39억 1800만DM에 이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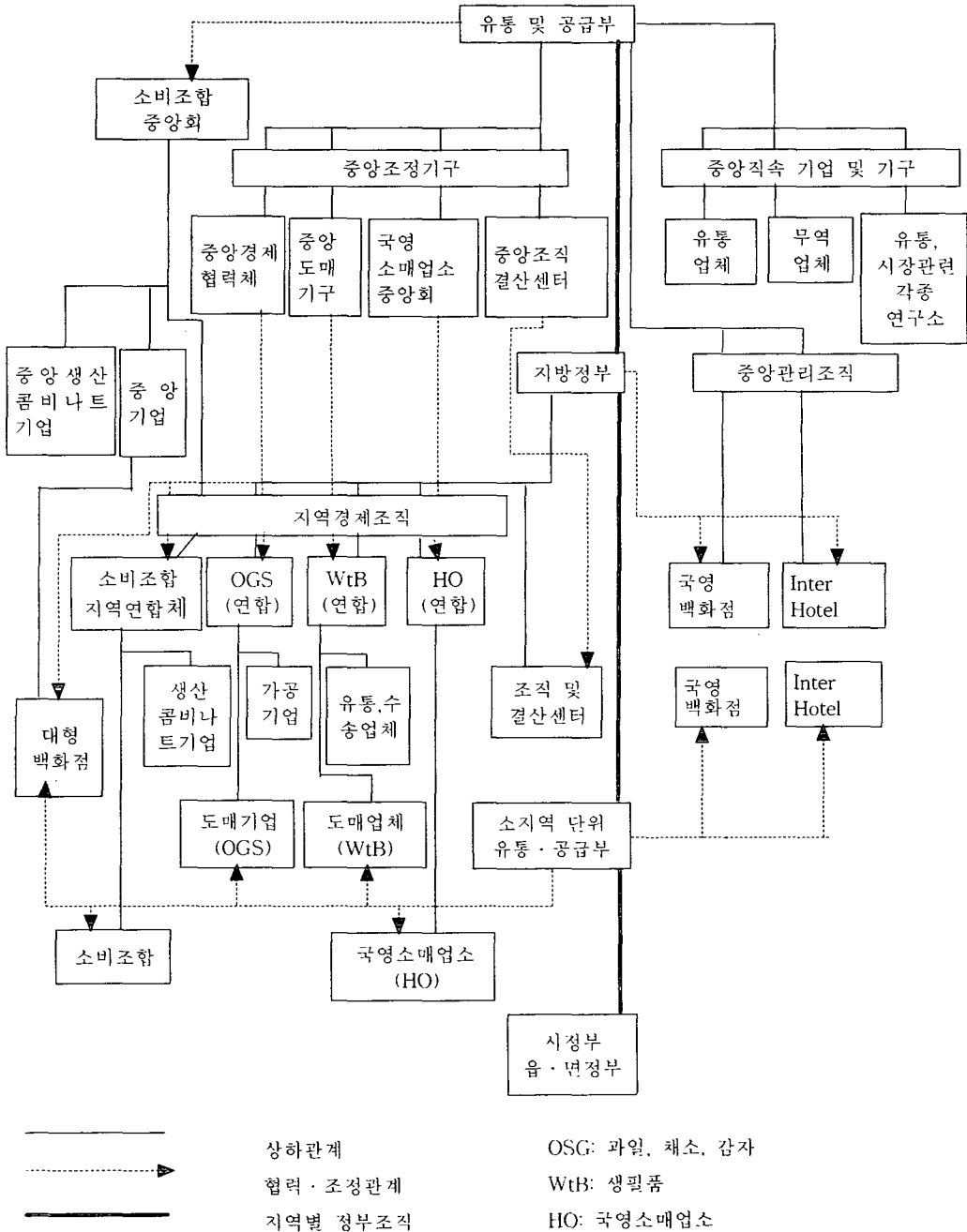
그러나 독일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독 도매유통업체들이 풍부한 경험과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서독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란 역부족이었다.

특히 통독이후 동독주민의 서구상품선호, 동독기업의 낙후된 유통체계, 서독기업의 적극적인 시장점유율 확장 등으로 인하여,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독지역의 도소매유통분야는 동독의 기업이 서독기업에 의해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붕괴되었다.

동독의 소비자 협동조합은 통일 전 동독시장의 30%이상을 점유하였으나 통일 후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1989년 판매액이 35,583백만MARK에서 1992년에는 6,358백만MARK로 감소하여 약 82%가 감소하였다. 결국 동독지역의 유통구조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점차 서독지역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였다. 또한 동독시절 중앙이 지도했던 도매유통기업을 계승한 회사들은 극히 일부만이 시장경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동독지역에서 상품 유통은 대부분 서독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체제전환 과정 중에 과거 동독의 유통구조는 극히 일부분만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동독의 국영유통업체들은 서독기업에 의하여 인수 또는 합병됨으로서 동독의 유통구조가 서독에 흡수 합병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서독의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별장그림 1 동독의 식품유통체계



자료: Hartmut Zimmermann et al., 『DDR Handbuch』,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 Koeln 1985.

별장표 6 동독지역 진출 서독유통업체별 경영실태(1991)

업 체	상점망 (개소)	판매액 (백만마르크)	투자액 (백만마르크)	고용인원 (명)
메트로/마사 (Metro/Massa)	대형상점 (41)	1,000	20	1,500
레베 (Rewe)	편의점 (200) 슈퍼마켓 (300)	3,100	190	10,000
알디 (Aldi)	편의점 (100)	1,000		
에 데카 (Edeka)	식품품가게 (300)	2,500	200	
텅엘만 (Tengelmann)	편의점(150) (그외 약종업(22), 슈퍼마켓 (400), 자재상점(4), 비식품품 상점 (13))	4,000	160	12,000
아스코 (Asko)	편의점 (60) 상점 (66) 슈퍼마켓 (115)	400 1,700		
슈파 (Spar)	식품품가게 (400) 자재상점 (3)	4,000	450	11,000
리디운슈바르츠 (Lidi & Schwarz)	편의점 (51) 백화점 (22)	1,400		4,000
알카우프 (Allkauf)	백화점 (18)	1,100	300	
아파우아 (AVA)	백화점 (12) 자재상점 (5)	1,000	15	1,400
쿵 (Coop)	대형상점 (10) 슈퍼마켓 (27) 백화점 (1)	400	180	
돌레(Dohle)	대형상점 (4) 슈퍼마켓 (22) 백화점 (1)	400	15	
판쿠흐 (Pfannkuch)	슈퍼마켓 (32) 백화점 (1)	400	60	
카슈타트 (Karstadt)	백화점 (9)	800	220	4,600
카우프호프 (Kaufhof)	백화점 (7) (그외 신발가게 (115), 판매점 (35), 전문점 (24))	1,500	400	8,000
헤르티 (Hertie)	백화점(6)	400	0	
호르텐 (Horten)	백화점(14)	700	60	
오토 (Otto)	배달판매(배달업소(1,000))	2,500	100	3,000
큐벨레 (Quelle)	배달판매(배달업소(1,300)) 전문상점 (70)	2,50	1,000	7,000
넥커만 (Neckermann)	배달판매(배달업소(4)) 전문상점(24)	1,000		1,500

자료: Forschungsstelle fuer den Handel (FfH).

첫째, 독일최대의 유통업체인 쾰르너레베그루페 (Koelner Rewe Grupe)는 동독지역에 투자한 지 4년만에 1,020개소의 매장에서 5억MARK 판매액을 달성하여 동독지역 시장총매출액의 11%를 점하였다.

둘째, 주식회사 슈파유통(Spar Handels-AG)은 동독의 국영소매상점 642개소 가운데 221개 국영상점(HO)의 고정자산 매입하였다.

셋째, 한편 Edeka를 비롯한 AVA, BNA, Nanz등의 소매회사들도 약1억 MARK를 투자하여 동독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이밖에 농산물가공업체(제1차 가공단계)의 사유화는 1993년에 대체로 완료하였는데 신탁관리청의 본청 관리하에 있던 317개 식품업체 중 169개의 기업이 매각되었고, 약 235개의 공장이 기업분할 방식으로 매각되었으며, 51개 기업이 신탁관리청 지청에 양도되었으며 2개 업체는 자치단체의 소유로 이관되었고 7개 업체는 재반환 되었으며 88개 업체는 해체되었다.

또한 6개 기업과 10개 기업의 일부가 과거의 경영자에게 매각되었으며(기업내 경영인에 의한 경영권 인수 : Management-Buy-Out), 8개의 기업은 외부의 인사에게 매각되었으며(Management-Buy-In), 17 기업 및 기업일부는 외국인에게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420억DM 상당의 투자와 21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식료산업의 사유화는 1992년 중 대부분 완결하였는데 식료품 및 기호품 부문의 865개 기업 중 약 68%가 사유화되었으며 주로 유한책임회사라는 형태를 띄고 있는 기업의 29%는 해체중에 있다. 인수자들은 계약을 통해 총 83억DM의 투자에 합의했으며 458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3. 외국 농업협력 사례의 시사점

3.1. 대만·중국간 협력의 시사점

양안간의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의 질적 향상, 안정적인 확보 및 기업의 현지화를 촉진하였다. 중국에 투자한 대만기업은 우량한 원료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량한 종자보급과 기술지도를 통하여 품질을 재고시키는 한편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업의 현지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지기업의 횡포, 계약재배 농의 개념부족 및 낙후된 유통체계로 인하여 종종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둘째, 중국내수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내수를 목적으로 한 현지투자가 증가하였다. 중국투자 초기에 대만기업은 상품을 중국현지에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수출을 하였으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중국의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내수판매의 증가가 새로운 관건이 되었다.

셋째, 현지 합자파트너와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독자적인 투자가 증가하였다. 대만기업의 초기 중국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합자투자의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였는데 현지 합자파트너와 자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합자투자는 감소한 반면 독자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고용인력을 현지화 하였다. 뿌평(卜蜂)기업은 초기에 중국에서 필요한 인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한편으론 인재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고용인력의 현지화를 위하여 중국 현지에 복단교육발전센터(復旦教育發展中心)를 설립하여 현지인원의 교육훈련을 다양한 과정으로 양성하고 있다.

3.2. 독일 통일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독일의 통일은 경제 및 기타 당시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현 남북한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사회와 사회주의사회의 통합이란 면에서는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북한간 경제력의 차이가 통일 당시 동서독간의 차이보다 크고, 북한의 폐쇄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통일 전에 북한이 경제개혁을 통해 경제수준을 어느 정도 제고시켜야 통일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에 따라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교류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전체적인 통일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민족내부거래 원칙과 상호보완 및 호혜의 바탕 위에서 남북양측의 경제적 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교류협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한반도는 독일과는 달리 지리적인 조건이 중국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몽골 등 동북아 대륙의 항구역할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유통분야의 협력은 아주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경험에서 보았듯이 급속한 유통분야의 협력은 북한지역의 유통구조 자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상호간의 신뢰구축, 민족의 동질성회복 및 서로 상이한 체제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남북의 동일한 유통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체제전환에 따른 문제를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재산권, 민영화 방안, 화폐통합 등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급속한 경제통합의 대안으로 점진적인 경제사회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통화교환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존통화의 상업교환비율, 상품의 국제경쟁력, 노동생산성, 임금 그리고 인구의 유동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토지 및 주택소유권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정기간 거주자 및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유화 과정에서도 공개념을 도입하여 투기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기업의 민영화는 신속성이 우선 과제이나 통합지역의 주요기간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공기업으로 관리하여 지나친 기업 도산 및 실업증대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독일통일은 국민이 선택한 통일임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낮은 생산성, 경쟁력결여, 경영관리기술의 낙후, 동독제품에 대한 수요감소 등 서

독지역과의 큰 경제적 격차 및 국가적 일체감의 미비로 인한 경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었으며, 또한 동독지역 주민들의 불만 팽배는 기존의 시장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생활격차 해소와 의식전환은 물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경제협력의 지속적인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곱째, 북한지역에 대한 신속한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각종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체제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경제적 효율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체제전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실업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독일이 통일된 이후 농산물부분의 유통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독일은 통일이후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통하여 동독지역의 농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생산재고를 국가가 긴급 구매하여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였다.

둘째, 통일 후 서독식 시장경제와 가격체계가 즉각적으로 동독지역에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독지역 농가나 농기업에 대한 과도기적인 지원책으로 농업구조조정법을 제정 실시하였다.

셋째, 통일이후 동독지역에 서독 및 유럽의 대형유통업체들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자유화 조치법을 시행하였으며 이것은 과거 콤비나트 형태로 지역시장에서 절대우위에 있던 농기업들에게 공정경쟁원칙을 준수토록 하여 장기적인 농산물의 시장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 시책이었다.

별장표 7 구동서독과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1990)

구 분	구동독	구서독	서독/동독	북한	남한	남한/북한
인구(백만명)	16.4	62	3.8	22	43.0	20.0
GNP(억달러)	167.0	1322	8.0	229	2808.0	12.3
1인당GNP(달러)	10067.0	21305	2.1	1038	6498.0	6.3
무역수지(억달러)	14.0	716	-	-7	96.6	-

참고문헌

- 권오홍(1999), “북한의 시장 경제 교육 및 경제·무역 조직 정비 현황과 전망”, 『통일경제』, 제52호, 현대경제연구원.
- 권태진, 정정길(1999), “남북한 농업 기술 협력의 방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1권제2호.
- 기획원 대외경제국(1994), 「북한경제편람」.
- 김경량 외(1996), 「남북 통일에 대비한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기초연구」, 강원대 농촌개발연구소.
- 김경량(1998), “남북농업협력의 실태와 방향”, 강원대학교 개교 51주년 기념 심포지움, 남북 농업협력의 방향모색, 강원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 김영훈(1998), “남북한 농업협력의 제약요인과 접근방향”, 남북 농업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북한농업연구회.
- 김운근, 권태진(2000), “북한 농업 현실과 우리의 대응전략”, 21세기 우리나라 농업의 위상 정립(전국 농학계대학 교수 심포지움).
- 김무환(1999), “북한 농민시장의 현재와 미래”, 『KDI 북한경제 리뷰』, 99년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김성훈 외(1997), 북한의 농업, 비봉출판사.
- 김운근 외(1998), 「통일대비 농림업부문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 외(1995), 「동북아 역내 농산물 무역 및 농업개발협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운근 외(1994), 「남북한 농업부문 교역 및 협력방안 연구」, 연구보고 R30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경섭 외(1999), 북한 농업생산기반의 현황과 문제점, KREI 북한농업동향, 11:

127~146

- 이종미(1999), "Management of Nutritional Emergency", Nutritional Problems of North Korean Children : Current Status and Possible Solutions, KDI School.
- 임업연구원(1992), 「북한의 임업」,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제72호.
- 장기건(1998), "중국 동북지역과 남한 및 북한의 식량작물 개발에 관한 3차 연구협력 방안", 남북 농업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북한 농업연구회.
- 장원석(1998), "남북한 농업교류·협력의 추진방향", 제4회 북한농업기반 국제 세미나, 농어촌진흥공사.
- 장원석(1999), 「통일과 글로벌 농업정책」, 농민신문사.
- 전홍택(1997),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제26호, 현대경제연구원.
- 정정길 외(1999), 「북한의 농산물유통과 농민시장 운영실태」, 연구보고서 C99-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정길, 전창곤(2000),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 분석", 『농촌경제』, 제23권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선가금공학연구소(1997), 「우리나라 가금과학의 실태와 전망」.
- 최수영(1998), 「북한의 제2경제」, 연구보고서 97-20, 민족통일연구원.
- 최영일(1999), 「한중간, 남북한간의 농업협력 - 현황과 전망」,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일부(1999),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95호, 통일부 교류협력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2), 「북한농업과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개혁」.
- 허문영(1996),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96-19, 민족통일연구원.
- 홍성국(1999), "북한 농민시장의 실태와 시사점", 『통일경제』, 제50호, 현대경제연구원.
- 홍성국(1996), 「북한의 상업·유통」, 공보처.

- IFAD(1997a). DPRK Crop and Livestock Rehabilitation Project. Th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Vol I and II.
- IFAD(1997b). DPRK Rural Rehabilitation and Investment Programming Mission.
- FAO(1997). FAO launches an appeal to increase agricultural output in DPR Korea after 3 years of poor production (Press Release No.15).
- FAO(1998). UN food agencies say North Korea still needs substantial food assistance despite improved harvest; Need for economic reform and increased aid to agriculture (Press Release No. 67).
- FAO/WFP(1996).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 Korea (Special Report).
- FAO/WFP(1998).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 Korea (Special Report).
- FAO/WFP(1997a).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 Korea (Special Alert. No. 275).
- FAO/WFP(1997b).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 Korea (Special Alert No. 277).
- UNDP(1998). Thematic Round Table on Agricultural Recove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DPR Korea. AREP at UNDP.
- 林甫毅(1996), “大陸投資經驗,旺旺控股股份有限公司”,兩岸經貿通訴第56期.
- 田君美(1998), 「臺商在中國大陸農業投資者之研究(1991~1996)」, 中華經濟研究院.
- 田君美(1999), “兩岸青年學者論壇-農業發展”, 兩岸農業交流的進展與問題學術研討會.
- 農村發展基金會(1998), 農村發展基金會業務報告.
- 陳章真(1998), “新疆統一公司契作番茄與產銷經驗”, 大陸農業資訊第17期, 農村發展基金會出版.
- 陳章真(2000), “康地萬達(天津)有限公司營運概況”, 大陸農業資訊第17期, 農村發展基金會出版.
- 陳章真, 田君美(1997), 「臺灣家禽產品拓展大陸市場可行性之研究-運銷通路分析」,

行政院農委會委託，中華經濟研究。

陳希煌(1994)，「兩岸農業經貿政策的經濟分析」，國立臺灣大學農經所。

中華人民共和國農業部(1996)，「中國農業外商投資項目匯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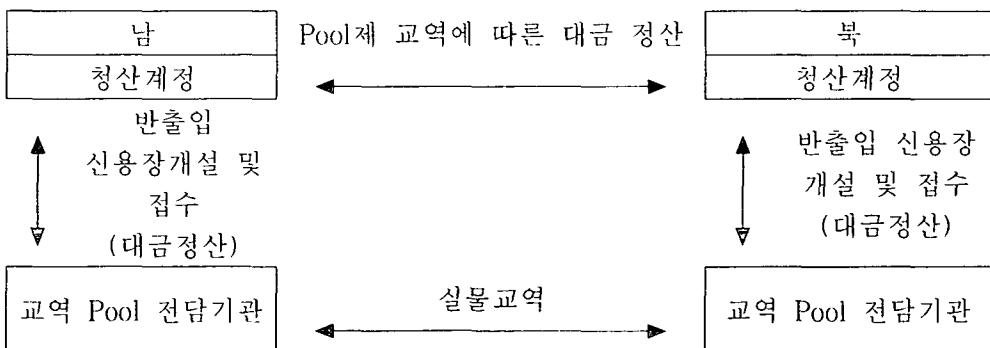
行政院經濟建設委員會編印(1996)，「中華民國84年經濟年報」。

<부 록>

청산계정 설치 및 운용 방안

- 청산계정의 설치
 - 정상회담 이후 지속적인 안정적 교역확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청산계정 설치 검토
- 청산계정은 남북한간 자유거래 품목보다는 반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농수산물분야에 도입하는 것이 유리
 -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해 온 식량 및 비료, 농약 등 농업원자재의 지원과 농업생산물의 반입을 연계
- 청산계정의 활용방안
 - 청산계정이 남북간 신용장의 발급 및 인수방식으로 대금결제
 - 반출입 물품의 운송보험업무 병행
- 기대효과
 - 남북교류의 계획 및 조정기능 수행 가능
 - 서로 다른 양 체제의 상호보완 및 체제 통합의 연착륙 유도

부록 그림 1 청산계정의 운용체계(안)



C2000-34

남북한 농업유통부문 협력방안

등 록 제5-10호(1979. 5. 25)

인 쇄 2000. 12.

발 행 2000. 12.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代)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